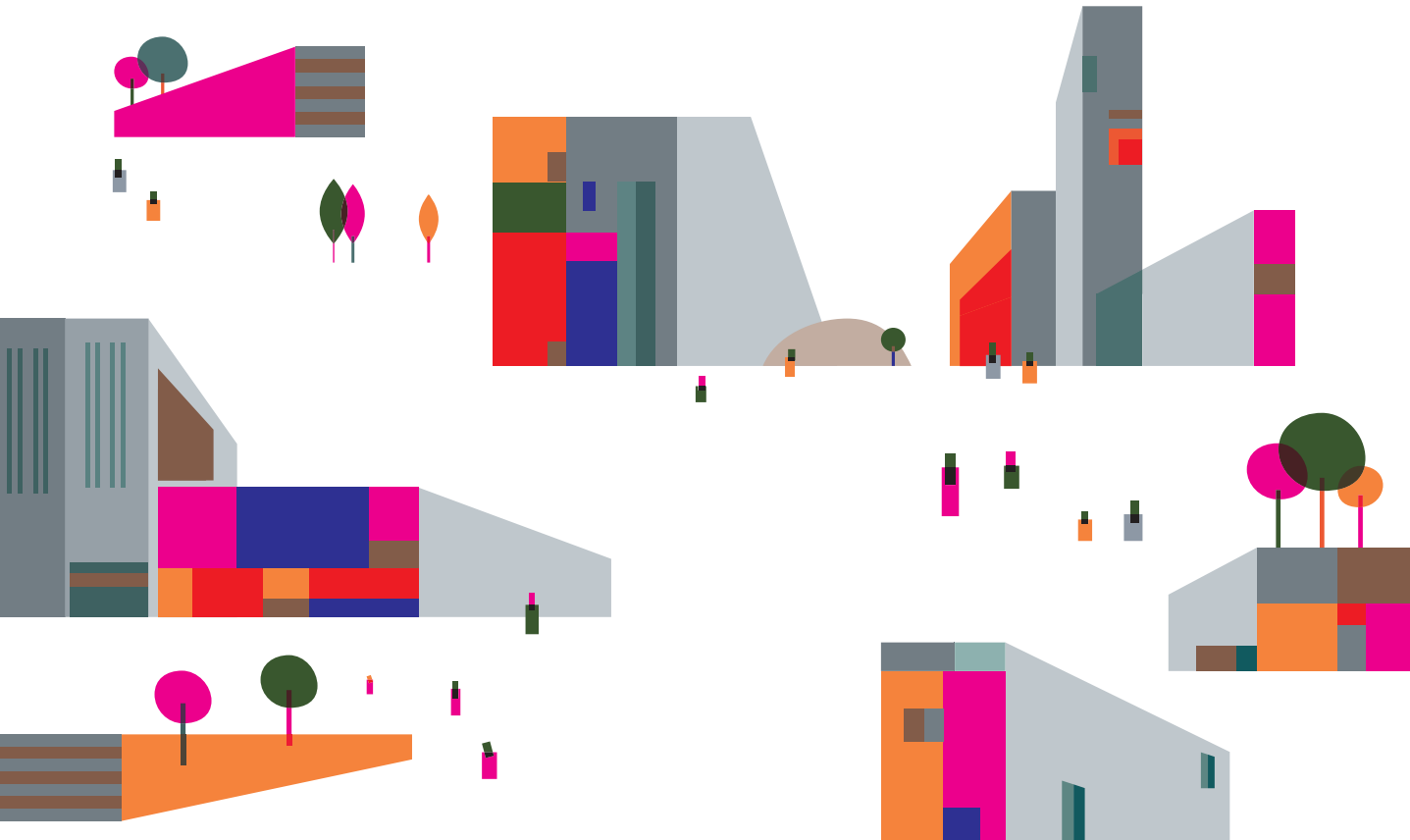


# 건축과 도시공간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만드는  
건축도시정책 전문저널

( a u r i )

Vol.31 - Autumn 2018



## 국민이 공감하는 국토경관 현재와 미래

후세에 물려줄 고유한 자산이자 도시민의 삶의 질의 지표로서 경관은 우리 삶에 중요한 요소이다. 「경관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의 생활 터전을 보다 가치 있게 하고, 자연과 문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토 경관관리체계의 현황을 짚어보고, 국민이 공감하는 국토경관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한다.







# 건축과 도시공간

Vol. 31 - Autumn 2018

( a u r i )

# 건축과 도시공간

Vol. 31  
Autumn 2018

**발행**  
2018년 9월 30일

**발행인**  
박소현

**정책이슈 기획**  
이상민

**편집책임**  
고효진

**편집**  
이미영, 하지연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편집부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www.auri.re.kr  
information@auri.re.kr

**디자인**  
디자인인트로  
02.2285.0789  
www.gointro.com

**ISSN**  
2288-2332

〈건축과 도시공간〉은 건축·도시  
분야 정책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정책전문지입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그림자료는 저작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습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필자의 저작물이  
아닌 도판의 경우 출처 및 저작권자를  
찾아 명기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부 착오가 있거나  
빠진 부분은 추후 저작권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고  
저작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정책이슈 및 건축도시 동향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 투고가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원고가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또한 본지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및 기획에 대한 의견이나  
필진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메일을 통해 제안하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표지

‘경관’ 하면 산과 바다 같은 자연의 경치나  
건축물로 이루어진 도시 풍경을 떠올리지만,  
우리의 생활상과 문화가 반영되어 만들어내는  
특징적인 환경을 또한 경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만드는 것은 결국  
아름답고 쾌적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무대를 더욱 아름답고  
다채롭게 가꾸어 나가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 국민이 공감하는 국토경관, 현재와 미래

시론: 국토경관의 지평과 미래상	임승빈	006
국가 경관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이경석	012
충청남도 경관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방재성	019
수원시 경관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정수진	028
영국의 경관특성화를 통한 체계적 경관관리	정해준	035
일본의 경관관리제도 운영 특성과 국내 시사점	이상민	044
국토경관의 향후 관리 방향	주신하	052

## 통계자료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토경관의 가치는 무엇일까?	이여경	060
---------------------------	-----	-----

## 건축도시동향

<b>해외동향</b>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을 위한 새로운 시도 - 미국의 젠트리피케이션 삼각진단법 적용과 시사점	박정호	066
	오버투어리즘에 대응하는 암스테르담의 전략 - 관광 도시에서 균형 찾기	강빛나래	072
	일본의 고령자주택 정책 및 제도 동향	변나향	079
<b>국내동향</b>	선·면 단위 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과 기대 효과 2018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추진 경과	김용희 신치후	083 089
<b>해외단신</b>	베를린 제2회 도시만들기 축제 개최 외		092
<b>국내단신</b>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 구상 발표 외		099

## 세계의 건축·도시 싱크탱크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건축·도시를 만들어가는 덴마크건축센터(DAC)	임정하	108
---	-----	-----

## 장소탐방

쓰레기의 공간을 사람의 공간으로 - 부천아트벙커 B39	김광수	118
공존과 화합의 울림 - 강릉아트센터	김민수	132

## auri 소식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146
· 2018 해외전문가 초청강연회 개최	151
· 2018 제3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 개최	152
· 2018 찾아가는 공공건축 교육 실시	153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협의회 개최	154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8 TWN 콘퍼런스 참석 및 차년도 개최기관으로 확정	155

국민이 공감하는  
국토경관,

현재와 미래

# 1

후세에 물려줄 고유한 자산으로, 일상을 향유하는 도시민의 삶의 질의 지표로서 경관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관에 대한 기본법인 「경관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의 생활 터전을 보다 가치 있게 하고 자연과 문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토 경관관리체계의 현황을 짚어보고, 국민이 공감하는 국토경관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해본다.

한산이 품은 아름다운 전통 마을



거북시장 길 경관협정사업 대상지



대한민국 국토경관현장 선포식



대한민국 국토경관현장 선포식

2017.5.17(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대한민국 국토경관현장 제정위원회  
주관: 국토교통부 KTO (국토교통연구원)



시론: 국토경관의 지평과 미래상 | 국토경관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며 끊임없이 소통하는, 모든 국민의 또 다른 '평생 반려자'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욕심과 집착에 물들지 않도록 국토경관을 잘 가꾸어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사명이다.

국토경관의 지평과 미래상 | 국토경관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며 끊임없이 소통하는, 모든 국민의 또 다른 '평생 반려자'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욕심과 집착에 물들지 않도록 국토경관을 잘 가꾸어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사명이다.

시론: 국토경관의 지평과 미래상 | 국토경관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며 끊임없이 소통하는, 모든 국민의 또 다른 '평생 반려자'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욕심과 집착에 물들지 않도록 국토경관을 잘 가꾸어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사명이다.

국가 경관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 지난 2013년 개정된 「경관법」 제6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첫 번째 정책기본계획으로, 다양한 주체가 효율적으로 경관관리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사회적·기술적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데 또한 의의가 있다.

충청남도 경관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 경관관리 방식을 결과보다는 과정중심으로 접근하는 긴 호흡이 필요해 보인다. 시민 안으로 파고드는 경관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빠른 속도의 성장과 변화를 중시하고 거기에 익숙한 우리에게 쉽지 않겠지만 '느린 경관'을 지향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원시 경관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 인구수가 124만 명을 넘는 경기도의 중심도시이자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역사문화도시 수원시는 경관계획의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느끼고 계획을 수립할 만큼 시민과 공무원의 경관 인식이 높은 지역이다. 수원시는 전체 도시 경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고민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경관특성화를 통한 체계적 경관관리 | 1990년대 중반 영국에서도 도입된 '경관특성화'는 경관자원의 생태적 시각적 가치는 물론 사회적 가치 등의 유무형의 가치를 통합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실질적인 경관 평가 방법으로, 유럽권을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다.

일본의 경관관리제도 운영 특성과 국내 시사점 | 국내 「경관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지난 현재 우리 국토경관 정책은 다음 단계를 모색해야 할 때다. 이러한 시점에서 관련 주체 간 긴밀한 협력, 시민의 경관 활동 적극 참여를 위한 경관 교육 활성화, 전문화된 경관 행정 인력 확보 등 일본의 사례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경관의 향후 관리 방향 | 우리나라 「경관법」은 주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주민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어 새롭게 경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직 진행해야 할 연구와 제도 개선의 여지는 많이 남아 있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시론:  
국토경관의 지평과  
미래상  
006

국가 경관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012

충청남도 경관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019

수원시 경관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028

영국의 경관특성화를 통한  
체계적 경관관리  
035

일본의 경관관리제도  
운영 특성과 국내 시사점  
044

국토경관의  
향후 관리 방향  
052

# 국토경관의 지평과 미래상

임승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장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소득 증대와 함께 높아진 환경 및 경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 주로 환경오염 및 생태적 측면에서 「환경정책기본법」(1990)과 「자연환경보전법」(1991) 등 환경 관련 법제들이 정비되었다. 경관영향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행(1981)에도 불구하고, 준농림지역 등에서 난개발에 따른 국토경관의 침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경관 관리에 초점을 맞춘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2007년에 비로소 「경관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어서 2014년에는 보다 실효성 있는 국토경관 관리를 위하여 「경관법」을 개정하고 경관계획수립과 경관심의제 등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2017년에는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을 제정·선포함으로써 국토경관이 국토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중요한 국가적 책무임을 선언하였다.

「경관법」 제정은 정부가 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경관 형성 및 관리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고속도로, 댐, 고압송전선 등의 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에 대비한 국토경관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의 국토경관 관리는 선진국에 비해 30년 이상 늦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관법」과 국토경관헌장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국토경관 관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터전이 마련되었다.



## 경관의 중요성 인식

경관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생존의 한 요소이며, 매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다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자 최근에야 공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듯이, 경관도 훼손되고 난 뒤에야 이를 후회함과 더불어 그 중요성을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름다운 예술의 도시 파리도 뼈아픈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오늘의 세계적 명성을 갖는 도시가 되었다. 1970년대 전후로 재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7, 8층 건물이 대부분인 도심지의 몽파르나스역에 59층, 210m의 초고층 빌딩이 세워지고 난 뒤 파리 시민들은 비로소 고층 빌딩이 파리 도심의 경관 특성에 맞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도심지 전체를 오늘날 보는 것처럼 7, 8층으로 제한하는 데 합의하여 개성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켜내게 되었다.

우리 서울도 남산 조망을 차단하는 16, 17층 외인아파트 두 동이 1972년 남산 중턱에 들어서고 난 후 비로소 남산의 경관가치를 깨닫고 후회하였으며, 20여 년이 지난 1994년에야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여 허물었던 기억이 있다. 사전에 경관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면 많은 예산 낭비도 없었을 것이고, 20년 이상 모든 시민이 흉물을 보며 찡그리는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 국토경관은 국민의 자화상

경관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알게 되면, 즉 경관의 형성 인자를 알게 되면 국토경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경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골격이 되는 것은 자연환경이며, 자연환경의 형태를 결정짓는 것은 생태적 원리이다. 인간은 원시시대 이래로 자연 환경에 순응하면서 동시에 자연을 변화시키며 자연에 적응해 왔다.

인간은 이러한 적응 과정의 일환으로 자연을 변화시켜 정주환경을 만들며, 이러한 정주활동의 결과물이 문화경관으로서 우리에게 지각되는 것이다. 인간이 문화경관을 조성함에 있어 상징성의 부여 행위 또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다.

인간이 주변 사물에 자신의 자연관 혹은 우주관 등과 관련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함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조선시대의 전형적 연못인 방지(方



#### 목호항 풍경

경관의 바탕은 생태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자연이며, 이 바탕 위에 인간의 적응활동이 문화경관을 만든다. 문화경관에는 장소성, 심미성, 사회적 가치가 담긴다.

池)에는 사각형의 연못 한가운데에 원형의 섬을 만들었는데, 이때 사각형 연못은 땅(陰)을 뜻하고 원형의 섬은 하늘(陽)을 의미한다. 음양이 결합하여 생명이 태어나는 대자연의 섭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해 왔다. 이와 같은 아름다움의 추구 행위는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나타나며, 기능적 측면의 적응활동과는 구별되는 미적 차원의 활동이다.

이와 같이 경관을 형성하는 인자는 생태적·문화적·심미적 인자 외에도 사회적·경제적 인자 등을 포함하여 무수히 많으며,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이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국토경관이 형성되므로, 국토경관은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집단 간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토경관에는 우리 국민의 정신과 문화가 배어 있어, 국토경관을 볼 때에는 우리의 자화상을 보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국토경관은 우리 국민의 삶의 현장이며 동시에 우리의 자화상이다. 국토경관을 관리하는 일은 우리 자신의 얼굴을 가꾸

는 일이라 할 수 있으므로, 내 얼굴을 가꾸는 마음으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합심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국토를 만들어야겠다.

## 국토경관의 지향 방향

국토경관의 미래를 위해서는 환경적·문화적·심미적·사회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환경적 측면에서는 기후변화와 날로 심화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인간이 자연과 공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가적·지역적·도시적 그린인프라를 구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국토경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문화적 측면에서 국토경관의 역사성을 계승하면서 현재의 생활과 조화를 이루어 박제된 문화재와는 다른 차원의 살아 있는 문화경관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심미적 측면에서는 계절의 변화 등 시간성과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창조적 토지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대적 관심사라 할 수 있는 국민복지의 측면에서 평등한 경관복지를 위한 도시 및 농촌에서의 경관재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경관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인식하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경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행정과 전문가들이 노력하여야 한다.

### 국토경관의 다원성과 지향 방향

		패러다임(지향점)		
		현상	이념·철학	실현
국토경관의 다원성	친환경성	· 기후변화(온난화) · 자연재해 심화	자연과 인간의 공생	· 그린인프라 구축 · 생태경관 보전 · 안전한 국토
	친문화성	· 시대별 가치관 변화 · 인구구조 변화	역사성의 계승과 동시대 가치 및 기술의 조화	· 문화경관(장소성) 보전 · 무장애, 유니쿼터스 도입
	친심미성	· 계절 변화 · 인공요소 증대 · 선호도 변화	생태성·심미성·시간성의 창조적 융합	· 공감각 · 토지예술 창조
	친사회성	· 계층 간 격차 · 사회적 자본의 증가	· 평등한 생활환경·경관복지 · 주민이 경관의 주체	· 도시·농촌 경관재생 · 주민이 만드는 경관

## 국토경관을 ‘살아 있는 국가문화재’로

국토경관의 미래상을 정립하는 데 있어 우선 할 일은 우리나라 국토경관의 고유한 특성을 밝히고 이를 경관형성 및 관리의 중심 철학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국토 면적의 70% 정도가 산지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 경관은 배경이 되는 산지와 함께, 물이 굽이쳐 흐르는 하천과 하천 주변의 농경지가 경관의 기본구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농경지와 인접한 산자락에는 농가가 웅기종기 모여 인간적 척도를 이루어서, 미학자인 고유섭 선생이 언급한 바와 같이 ‘구수한 큰 멋’을 지닌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구릉지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경관 특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로나 건물 등의 구조물로 인해 산지로의 조망이 차단되거나, 구조물이 너무 커서 산지가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수한 큰 멋’을 지닌 우리 국토경관에서 또 하나의 특성은 반만년 살아 온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문화재가 전국 방방곡곡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사적·명승지·천연기념물 합하여 1,000개가 넘는 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며, 거의 모든 자연 부락에는 풍수에 얽힌 설화가 깃들여 있다. 유형·무형문화재 발굴은 아직도 진행형이며,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앞으로 더 발굴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실로 국토 전체가 문화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문화재를 품고 있는 국토경관은 박제화된 문화재와는 다른 ‘살아 있는 국가문화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경관이 우리의 소중한, 살아 있는 국가문화재라 한다면, 동시대 국토경관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경관 향상을 위하여 무엇을 새로 만들어 덧붙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는 것이다. 기존에 잘못 만들어진 것을 하나씩 빼고 비우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재 관리의 기본으로 문화재가 지닌 진정성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국토경관의 미래상도 그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고 지켜내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인간의 집착과 욕심이 묻어 있는 각종 무질서한 간판·현수막·전광판·가로등과 경관을 훼손하는 유아독존식의 건축물 등을 빼고 비우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본래 아름다운 금수강산인 국토 도시경관을 회복할 수 있다. 번뇌와 집착을 비워야 우리 본래의 맑은 마음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국토 도시경관도 빼기와 비우기를 통해 본래의 맑고 순수한 고유 경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경관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며 끊임없이 소통하는, 모든 국민의 또 다른 ‘평생 반려자’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욕심과 집착에 물들지 않도록 국토경관을 잘 가꾸어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사명이다.

#### 참고문헌

- 1 윤의식(2006), “경관법 제정을 통해 본 국토경관정책 방향”, 『도시문제』 2006년 8월호, pp.11-23.
- 2 임승빈(1998), 「조경이 만드는 도시」, 서울대학교출판부, pp.3-11.
- 3 임승빈(2009),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4 임승빈(2010), “한국에서의 신경관주의”, 『신경관주의 국제심포지엄 자료』,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pp.35-51.
- 5 임승빈(2012), “신경관의 지평과 과제”, 『신경관심포지엄 ‘경관한류의 가능성 탐구’ 자료』, 서울대학교 지역개발조경연구소, pp.17-37.
- 6 임승빈(2016), “경관학 序說”, 『제2회 경관아카데미 특강 자료』, 한국경관학회.
- 7 임승빈 외(2013), “경관인문학 서설”, 『造景觀』, 나무도시, pp.14-27.

# 국가 경관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이경석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

## 「경관법」에 따른 경관제도 운영 현황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급속한 성장을 거쳐 2018년 현재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경관, 디자인 등 공간환경의 질적 수준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속도와 양적인 성장에 치중해왔다. 양적인 개발과 성장 드라이브 일변도의 정책이 한계를 보이면서 우리는 지난 과거를 되짚어 보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을 통해 2002년 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경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발적으로 지역의 경관형성 및 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경관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 결과, 2007년 5월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경관법」이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경관법」에는 법 제정의 목적, 경관의 정의, 경관 관리의 기본원칙,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까지 큰 틀은 유지되고 있다. 「경관법」은 경관관리를 위해 개발행위 등을 제한하는 규제적 성격이 아닌, 주민이 스스로 지역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에 맞게 경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경관법」 제정을 통해 지역에서의 경관시책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법’과 ‘지원법’ 성격인 「경관법」을 통한 지역 경관관리의 실효성의 측면에서 한계들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경관정책의 한계로 인해 중앙정부의 역할 부재,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 제시의 필요성, 도로·철도·하천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통합적 경관형성 방안 미비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구속력이 없는 임의계획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 8월 「경관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전면 개정된 「경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가 승인하는 주요 사업 등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경관위원회 운영, 국가 차원의 경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시·도,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군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사회기반시설 사업·개발사업·건축물 경관심의 도입 등이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경관법」에 따라 경관계획 의무수립 대상인 광역·기초지자체의 약 84%가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임의수립 대상 기초지자체 50여 곳도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할 만큼 경관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인 경우 2015년 100건, 2016년 139건, 2017년 18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관협정의 경우 2015년 경관협정 매뉴얼 제작·배포, 2016년과 2017년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경관협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체결된 사례는 35건 정도로 추가적인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외에 경관 워크숍, 공모전, 홍보물 제작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경관시책은 101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추진 현황

지난 2013년 개정된 「경관법」 제6조에 근거하여 2015년 6월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이 수립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지역 단위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면서 수립하는 공간계획적 성격이 큰



데에 비해, 국가가 수립하는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공간계획의 개념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국토 전역의 경관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경관 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과 실천 전략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다. 따라서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국토경관정책의 방향성을 확립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첫 번째 정책기본계획으로, 다양한 주체가 효율적으로 경관관리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사회적·기술적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데 또한 의의가 있다 하겠다.

현재 우리 국토경관은 수려한 자연경관, 가치 있는 전통문화경관, 자연과 생활요소가 어우러진 농어촌경관, 다채로운 도시경관 등 우수한 경관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경관형성·관리 체계 미흡으로 경관이 훼손되고 특색 없는 경관 형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자연에 편중된 경관 인식, 경관관리에 대한 대국민 인식 미약 등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점, 민간 전문가 부족과 주민 역할 한계 등 경관관리 주체의 역량이 부족한 점, 경관 향상 고려가 불충분한 지역개발사업 등 경관관리제도 실효성이 미비한 점, 경관개선효과 평가와 경관자재·재료 기술 개발 등 경관 연구개발 지원이 저조한 점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관 향상 활동에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경관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각종 경관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고, 경관 기초연구 및 기술 개발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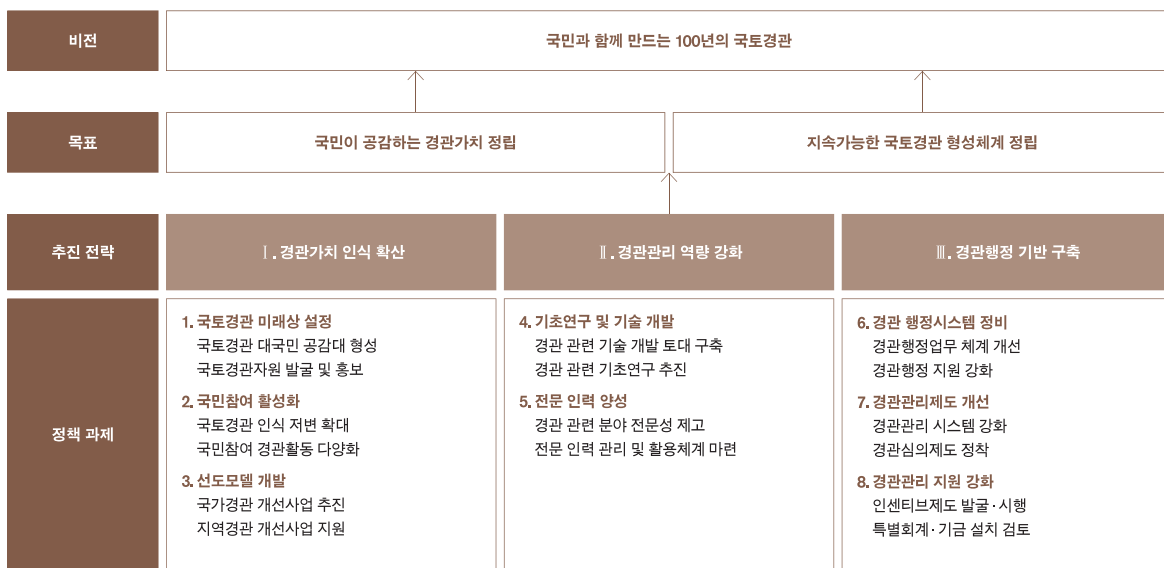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구조와 구성 체계는 최상위 비전 및 정책 목표부터 추진 전략, 정책 과제, 실천 과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계획 구조 및 구성 체계

- **비전 및 정책 목표** | 국가경관정책의 장기 비전 달성을 위해 지향해야 할 기본 목표
- **추진 전략** |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 **정책 과제** | 국토경관 인식 제고, 역량 강화,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 **실천 과제** | 정책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 **세부 사업** | 실천 과제별 단위 사업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이러한 계획구조에 따라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 실현을 위한 2개 목표, 3개 추진 전략, 8개 정책 과제, 16개의 실천 과제, 36개의 세부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한정된 여건 속에서 다양한 경관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 상당한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다. 대표적인 것을 들어보자면, 우선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한국적 경관가치의 상 정립을 위해 ‘대한민국 국토경관현장’을 지난해 5월 제정하여 23개 지자체의 동참을 이끌어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아직 ‘경관’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가치 있는 국토경관에 대한 개념을 습득할 수 있도록 사회과목 교과서에 경관현장 수록을 추진 중이다. 또 지역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경관을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경관협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신의 동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역경관의 수준 높은 조성에 지침이 될 국토환경디자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지자체가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그와 함께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절감 효과를 거두도록 유도하였다. 경관 담당 공무원들의

경관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 활용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경관행정대상을 지난해부터 개최하여 담당자들의 경관행정 노하우를 공유하고 우수 경관행정사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도 힘쓰고 있다.

최근 경관정책기본계획 과제 중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경관자원 조사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관자원 조사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기본 방향 및 조사 방법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계획 수립 및 실행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향후 경관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경관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그간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되돌아보고,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에 이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도적으로는 국토경관자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사체계 마련 및 경관심의·경관계획 등 경관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으로는 지역의 디자인 관리 역량 및 공공건축 등 공간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도시·건축 분야 전문가 활용제도 확산, 장소 중심의 통합적 경관 형성을 위한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경관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명승, 농촌경관, 산지경관 등의 경관자원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처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도시경관 자원의 변천사 등을 기록하기 위한 ‘경관기록화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경관자원의 총괄적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경관법」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의 경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관자원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관계획 수립 지침에서 조사 대상과 범위, 조사 내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조사된 경관자원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경관 관련 정책 추진 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국토교통부에서는 경관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조사체계를 새롭게 마련

하고자 하는데, 경관자원 조사 시 경관자원을 일반경관자원, 중요경관자원으로 나누고, 중요경관자원인 경우 조망형, 장소형으로 나누어 지역 전체의 자원을 목록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경관자원 조사 및 선정 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에 대한 법적근거 또한 마련할 예정이며, 경관자원조사를 경관계획 수립 시 수행하기보다는 별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역에서 조사된 경관자원들을 DB화하여, 각종 법정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국가경관자원으로 지정하여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 경관계획 및 경관심의 내실화

「경관법」 전면 개정 이후 지자체 경관행정의 중요한 축인 경관계획 및 경관심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 내실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경관계획과 관련해서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위상, 경관기본계획 내 경관요소별 관리계획과 특정경관계획과의 차별성 부재, 경관자원조사 세부 가이드라인 부재, 특·광역시 경우 도 경관계획의 성격에 가까우나 현재 시·군 경관계획에 따라 수립되고 있는 문제 등을 중점으로 하여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경관심의와 관련해서는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건축물 경관심의 재심의 기준 마련, 개발사업 경관심의 재심의 기준 명확화,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기준에 대한 기본 방향 제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각종 가이드라인 등 현황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

이 사업은 국토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적 경관을 형성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해왔던 지역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통합적인 지역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토환경통합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디자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디자인 관리체계로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뒷받침할 민간 전문가(사업총괄계획가) 및 디자인 검토 제도를 활용한다. 국토환경통합계획은 비법정 계획으로서 평면적인 도시기본계획과 점적인 개별

공공건축사업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추상적인 큰 방향만 제시하고 중간 단계 없이 개별 사업 단위로 진행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을 통해 공간환경 조성·관리에 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지역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사업 성과에 따라 우수한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핵심 사업에 대한 설계와 시공 지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 건축경관디자인 컨설팅(총괄건축가 지원)

이 사업은 지역의 경관, 건축, 도시, 조경 등 공간환경 관련 개별사업을 장소 단위로 통합·조정하는 민간 전문가를 각 지자체가 운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 전문가란 지역총괄계획가를 의미하며, 앞서 말한 역할 외에 각 지자체의 디자인 정책 수립·자문,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디자인 방식 결정 및 디자인 전담 조직의 구성·총괄 등을 담당하며, 필요시 프로젝트 단위 사업을 관할하는 또 다른 민간 전문가인 사업총괄계획가와 등과 협업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추진되는 각종 개발 사업들의 한계, 즉 지역의 지리적·문화적·역사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 프로젝트별로 제각기 추진되면서 상호 연계가 부족하고 특색 없는 경관이 양산되는 상황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역 내 공간환경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경관 및 건축 분야의 디자인 품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1 국토교통부(2015),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
- 2 국토교통부(2017), 「대한민국 국토 경관 현장 백서」.
- 3 국토교통부(2018), 「국토경관자원 조사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4 국토교통부·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8), 「지자체 경관행정 담당공무원 워크숍 발표자료집」.

# 충청남도 경관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방재성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장

-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 충청남도의 지역 특성과 경관행정

15개 시·군으로 구성된 충청남도는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이 공존하고 다양한 경관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넓은 비도시지역으로 인해 인공적인 경관요소가 지배적인 서울·부산 등의 광역시에 비해 체계적이고 압축적인 경관관리가 쉽지 않다.\* 각 지자체가 경관계획과 조례를 기반으로 경관관리를 하지만 재정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시·군을 제외하면 관리 여건과 수단이 충분치 않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충청남도는 ‘경관개선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자체의 경관관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충청남도 경관관리 부서는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팀으로 「경관법」,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책과 계획 수립, 사업과 심의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주목할 사업은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운영사업이다.\*\*

\* 충청남도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10.31%, 비도시지역 89.69%이다. 충청남도(2016), 「제56회 충남통계연보」, pp.426-428.

\*\* 충청남도는 ‘2016년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통령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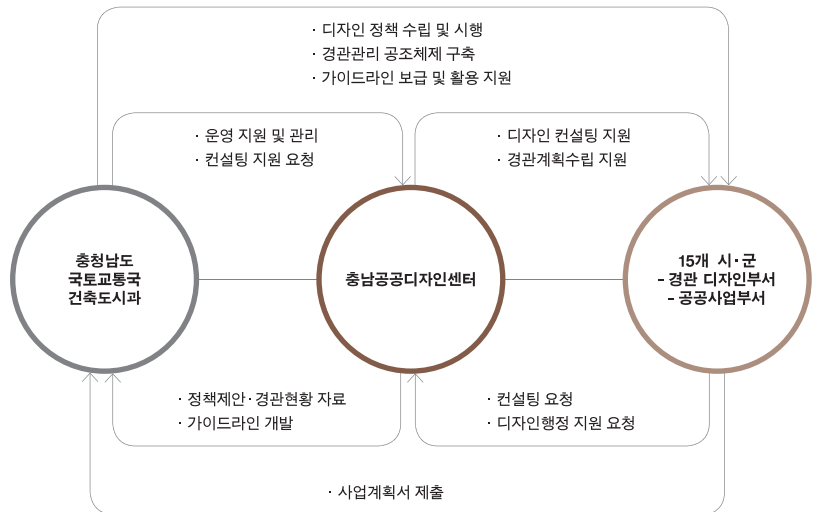
©임지영

농산어촌이 공존하는 충청남도(좌: 논산시 윤증고택, 우: 보령시 오천항)

## 충청남도 경관관리 지원기관,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도 출연기관으로 충남연구원 부속기관이다. 2009년 설립된 충남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를 확대하여 2014년 현재의 조직이 되었고, 충청남도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리지원을 위해 설립한 전문기관이다.

도 및 15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토대로 경관관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충청남도 건축도시과를 비롯하여 15개 시·군의 공공사업 담당 부서와 공공디자인센터가 협업하여 충청남도의 경관을 개선하고 있다.



###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운영체계

자료: 충남공공디자인센터(2018), 「공공디자인 컨설팅의 이해와 활용」, 『충남교육청 컨설팅 설명회 자료집』.

디자인 컨설팅 (경관, 건축, 공간, 시설물, 매체)	정책연구 (경관 및 디자인정책 제언)	디자인행정 역량 강화 (교육·홍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 시·군, 출자·출연기관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li> <li>2. 충남교육청사업 디자인 컨설팅</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관·디자인 정책 개발</li> <li>2.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li> <li>3. 경관·공공디자인계획 지원</li> <li>4. 경관실태조사</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디자인 저널 &lt;디자인 충남&gt; 발간</li> <li>2. 디자인 워크숍 개최</li> <li>3. 컨설팅 자료집, 종합보고서 발간</li> <li>4. 디자인 특강 개최</li> <li>5. 디자인 DB 구축(홈페이지 운영)</li> </ol>

####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의 주요 업무

자료: 충남공공디자인센터(2018), 「공공디자인 컨설팅의 이해와 활용」, 「충남교육청 컨설팅 설명회 자료집」.

공공디자인센터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공공사업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이다. 충청남도청, 15개 시·군, 도 출자·출연기관, 충남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디자인 개선, 이용자 편의 증진, 사업 대상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목표로 컨설팅을 시행한다.

둘째, 경관 및 공공디자인 분야 정책연구이다. 이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정책·계획·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와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컨설팅 기준이 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로 구분된다.

셋째, 디자인행정 역량강화사업이다. 이 사업은 디자인행정 절차 및 경관관리체계 개선을 목표로 진행된다. 15개 시·군 공무원들의 인식변화와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디자인 저널 <디자인 충남>과 컨설팅 자료집 발간, 워크숍 및 전문가초청 특강 개최, 컨설팅 설명회 개최, 디자인 DB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컨설팅 결과 활용을 위한 디자인도록 및 컨설팅종합보고서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통한 경관관리

컨설팅 대상은 공공공간, 공공건축, 공공시설물, 공공매체로 구분된다. 컨설팅 대상을 쉽게 정리하면 대부분의 인공적인 경관요소로 볼 수 있다.\* 2009년 컨설팅 도입 후 2017년까지 975건의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2014년 이후에는 공공시설물이나 매체 중심에서 경관사업, 공공건축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7년 컨설팅 비율은 경관사업



22%, 공공건축 34%, 공공공간 19%, 공공시설물 15%, 공공매체 10%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의 주요 컨설팅 대상은 농어촌지역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사업 내용은 일반적으로 마을 공용의 건축물(마을회관, 생산·가공·판매·체험 관련 건축물)과 공공공간(공원, 공용주차장, 휴게공간, 체육공간, 가로공간)의 조성, 경관 개선 관련 조형물·공공시설물 설치,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사업들은 사업 범위(공간)가 넓어 농어촌지역 경관 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센터 차원에서 컨설팅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한 각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통해 시행하는 가로나 블록 단위 경관사업과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공원, 광장, 녹지(鎭) 등의 조성사업도 컨설팅 대상이다.

공공건축에 대한 컨설팅은 지자체에서 조성·발주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자체 청사와 문화·복지·관광·체육·학교·교통·생산·가공·환경 관련 건축물 등 매우 다양하다. 설계(디자인)안에 대한 컨설팅에서 최근에는 사업 추진 방향, 발주 방식, 규모 검토 등 사업 초기 컨설팅으로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공공시설물과 공공매체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물과 매체는 기존의 디자인을 직접적으로 수정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 공공디자인 컨설팅 절차

공공사업 담당자(공무원)가 센터 홈페이지에서 컨설팅을 신청하면 센터는 내용과 자료 검토 후 컨설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컨설팅 진행이 결정되면 사업 유형과 단계, 컨설팅 범위와 주안점에 관한 내부 회의를 거쳐 자문위원을 배정한다. 컨설팅 의견의 객관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문위원은 일반적으로 2명을 배정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 디자인 컨설팅 대상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8조)와 충청남도 디자인컨설팅 운영 규정(제3조)에 명시하고 있다. 운영 규정에는 1.별표 1에서 정한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을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 사업,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관리사업, 3.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4.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 대부분의 지자체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미흡하다.



같이 공공건축, 공공공간(공원, 주차장, 가로정비 등), 공공시설물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사업은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배정하여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도출하며 필요시 종합적인 의견을 센터 내부에서 작성한다.

자문위원이 선정되면 컨설팅 회의를 진행하는데, 현장답사를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은 주거공간 혹은 일상의 생활공간 주변에 조성·설치되고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현장답사에서 사업 대상지 주변 여건, 보행 및 차량 동선, 잠재적인 영향 요인을 확인하는데, 이 과정이 장소 기반의 현실적인 자문 의견을 이끌어 낸다. 도면에는 주변여건을 충분히 담을 수 없고, 도면만으로 설계안을 판단하면 진단과 해결 방안 제시에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장 논의는 도면상의 오류나 왜곡을 쉽게 판별케 한다.

회의에는 센터원, 자문위원, 담당 공무원, 설계사가 참여하고 사용자(유지·관리 주체)가 원하거나 필요시 참석하게 한다. 현장에서 사업 내용과 설계안을 논의해 확인하고 잠정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자문위원은 현장답사회의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센터에 의견서를 보내고, 센터에서 검토 후 추가 조치가 필요 없으면 의견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한

#### 공공디자인 컨설팅 절차



다. 담당 공무원은 의견서를 토대로 설계자·이용자와 협의 후 컨설팅 반영 여부(반영, 부분 반영, 미반영)를 송부한다.

현장답사에서 자문의견서 교부까지 짧게는 10일 길게는 21일이 소요되는데, 일반적으로 컨설팅 가능한 구체적인 도면과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다. 현재 컨설팅 의견을 의무적으로 적용케 하는 규정은 없다. 대다수 공무원은 컨설팅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계자·이용자를 설득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컨설팅 신청 시기와 내용을 공무원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절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컨설팅의 효과: 장소 중심, 소통과 합의를 통한 경관 개선

컨설팅은 공공사업의 사업 구상, 기본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전 과정에서 사업 담당자가 신청한 이슈에 자문을 제공한다. 컨설팅 빈도별 영역을 나누면 ①디자인 개선 방향 자문, ②디자인 대안 제시, ③사업 방향 및 계획서 자문, ④용역 발주, 과업지시서 관련 자문, ⑤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과 조례 자문 등으로 구분된다. 기본적으로 공공사업 성과물의 ‘디자인 개선’과 ‘공공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나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즉 직접적인 디자인 개선 외에 ‘디자인을 만들어 가는 과정 개선’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는 최근의 계룡시 컨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폐교를 활용한 공립어린이집과 감성체험장 조성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어린이집 사업 부서에서 건축 규모 및 설계 방향에 관한 컨설팅을 신청하였다. 당시 어린이집과 감성체험장 조성 부서는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가격입찰을 통해 각각의 설계자를 선정하려 하는 상황이었다.

현장답사회의에서 어린이집과 감성체험장의 연계가 효율적이며 사업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두 사업을 통합한 설계공모를 제안하였고, 계룡시에서 이를 수용하여 제안공모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적절한 시기와 내용으로 공공사업 프로세스에 개입하여 최적의 디자인을 도출하는 데 컨설팅이 기여하고 있다. 컨설팅의 직접적인

\* 계룡시(2018), “계룡시 공립어린이집 및 감성체험장 신축 공동설계 제안공모 공고”, 계룡시 공고 제2018-436호 참조.



마을회관에서 현장답사 전 컨설팅 회의를 하는 모습



적절한 회의 장소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바로 회의를 진행

효과는 ‘공공사업으로 조성되는 경관요소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경관관리’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효과는 ‘경관관리 주체의 확대’이다. 컨설팅의 간접적인 효과라 볼 수 있는데, 현장답사회의는 다양한 주체가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며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센터원(코디네이터 및 자문 역할), 공무원, 설계자, 자문위원, 이용자가 모두 모여 회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자문 의견에 대한 신뢰와 수용률이 높아지고 이 효과를 경험한 공무원들은 부서가 변경되어 다른 사업을 추진해도 컨설팅을 활용한다. 경관관리의 중요성과 디자인의 가치를 인식하고, 경험하고, 공유하면서 경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일종의 교육적 효과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관심의와 디자인 컨설팅은 어떻게 다를까? 경관심의는 「경관법」 체계 내의 경관관리 수단이고 디자인 컨설팅은 충청남도만의 특수한 방식이다. 충청남도와 각 시·군은 역할을 분담하여 경관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관심의 대상임에도 컨설팅을 자발적으로 신청하거나 경관심의 후 보완 차원에서 컨설팅이 진행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도와 센터는 경관심의와 컨설팅의 역할 분담을 고민하고 있으며 조만간 개선 방안을 정립할 예정이다. 경관심의와 컨설팅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어 비교는 쉽지 않으나, 충남의 공공디자인 컨설팅 제도를 지자체 경관관리 수단의 대안으로 검토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비교하였다.

경관심의는 법과 조례 내 대상으로 한정하나 컨설팅은 디자인 행위가 개입되는 대부분의 인공적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한다. 경관심의에 비해 컨설팅은 디자인뿐 아니라 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이 가능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나 자문 결과의 반영 측면에서 보면 심의보다는 무

## 경관심의회 공공디자인 컨설팅 비교

	경관심의회	충남 공공디자인 컨설팅
근거	· 「경관법」, 경관조례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대상	· 개발사업 · 사회기반시설사업 · 건축물	· 공공공간, 공공건축, 공공시설물 및 매체 · 경관조례의 심의 대상 포괄 · 민간사업 제외
신청	· 사업 부서 → 심의 부서	· 사업 부서 → 공공디자인센터
주체	· 경관심의 부서 · 경관위원회 심의위원	· 충남공공디자인센터 · 자문위원(2~3인)
시기	· 기본설계 완료 후	· 사업 추진 전 과정 · 사업 구상,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검토 내용	· 설계(디자인)안	· 설계(디자인)안 · 사업 방향, 발주 방식, 과업지시서 등
사용자 참여	· 사용자 참여 어려움	· 사용자 참여 가능

개감이 적다. 다만 참여 주체가 모두 합의만 되면 자문 결과 이상으로 디자인이 개선된다. 최근 몇몇 광역지자체에서 센터 운영 방식에 대해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충남의 공공디자인 컨설팅 제도가 지역의 시·군으로 확산되면 지역 경관관리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역 경관관리의 현실, 그리고 과제

충남의 경관정책 중 공공디자인 컨설팅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지면의 많은 부분을 이를 설명하는 데에 할애한 이유는 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나타나는 지역 경관관리의 현실을 말하고자 함이다. 현재의 「경관법」 체계 내에서 경관계획과 관리수단의 실효성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경관계획의 완성도, 경관계획에서 제시하는 사업의 구체성, 경관심의회 효율성과 합리성 확보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경관계획이 실천을 위한 설득력과 구체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참여 주체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과정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환원론에 빠지기 쉬운데, 결국 인력과 예산의 부족이나 사업 기한과 회계연도의 제한, 중앙정부-광역단체-기초지자체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 미흡, 기초지자체의 권한 부족 등으로 논의가 귀결되어 머릿속이 복잡하게 된다.

따라서 경관관리 방식을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접근하는 긴 호흡이 필요해 보인다. 디자인 컨설팅을 진행하며 ‘우리 사회는 너무 조급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조급함이 사업 중심의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듯한 느낌이다. 사업을 통해 경관을 멋지게 만들고 꾸미는 접근 방식보다 ‘경관을 변화의 대상으로 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로 논의의 초점을 전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 안으로 파고드는 경관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경관의 가치를 인식하고 스스로 관리하게 하는 방식이 느리지만 효과는 더 좋을 수 있다. 빠른 속도의 성장과 변화를 중시하고 거기에 익숙한 우리에게 쉽지 않겠지만 ‘느린 경관’을 지향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문헌

- 1 충청남도(2016), 「제56회 충남통계연보」.
- 2 충남공공디자인센터(2018), “공공디자인 컨설팅의 이해와 활용”, 「충남교육청 컨설팅 설명회 자료집」.
- 3 충청남도 국토교통국 건축도시과(2017),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4 충청남도 국토교통국 건축도시과(2017), 충청남도 디자인 컨설팅 운영규정, 충청남도 훈령 제1399호.
- 5 충남공공디자인센터 홈페이지, [www.cpdcre.kr](http://www.cpdcre.kr).

# 수원시 경관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정수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 수원시의 경관정책 현황

수원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이다. 2018년 7월 기준, 인구수가 124만 명을 넘는다. 경기도청이 있는 경기도의 중심도시이며,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역사문화도시이다.

수원시는 역사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 이와 관련한 시민과 공무원의 경관인식이 높은 지역이다. 2007년에 ‘수원시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에 ‘수원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법정으로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관계획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 「경관법」 개정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의 기초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2016년에 경관계획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수원시는 민선 4기부터 인간 중심의 휴먼시티를 근간으로 삼아 주민참여활동 기반을 다지고, ‘생태교통 2013’ 등 보행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 다양한 도시정책을 펼치고 있다. 도시디자인과를 두고 도시경관과 디자인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특히 민선 7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원시 전체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원시의 대표 경관인 창룡문과 연무대(좌), 화홍문과 방화수류정(우)

자료: 정수진(2017), 「수원시 경관자원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



수원시 기본경관계획은 ‘수원화성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문화도시’, ‘자연환경을 향유하는 생태도시’, ‘느긋하게 걷기 좋은 도시’, ‘지역 특성을 살린 매력적인 도시’ 네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아울러 역사자원 기반의 도시정체성 강화, 수(水) 경관 관리, 도심 녹지축 형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과 삼성디지털단지·수원역 등의 랜드마크 역량 강화라는 다섯 가지 전략을 수립하였다.\*

수원시 기본경관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가장 고민한 부분은 농진청 등 공공기관과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서수원 지역에 대한 개발압력 증가, 그리고 광교 신도시와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등의 신도시 개발로 인한 수원시 공간 변화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였다. 이를 위해 경관계획이 보다 실

#### 중점경관관리구역과 심의 대상

구분	심의 대상	비고
수원화성 역사문화 중점경관관리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개발규모(지구단위계획 내 대지규모 기준) 초과</li> <li>· 숙박시설</li> <li>· 정조로, 창룡대로, 필달로, 경수대로 경계에 면하는 필지의 건축물</li> <li>· 수원천로 도로경계에 면하는 필지의 건축물</li> </ul>	수원화성지구 단위계획구역과 중복
능행차로 역사문화 중점경관관리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조로(운동장사거리~매교삼거리) 도로경계에 면하는 필지의 건축물</li> <li>· 정조로(매교삼거리~수원시경계) 경계에 면하는 필지의 5층 이상 건축물</li> <li>· 경수대로, 장안로 346번길, 장안로, 송정로 경계에 면하는 필지의 5층 이상 건축물</li> </ul>	
서호자연 중점경관관리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층 이상 건축물</li> </ul>	
원도심 상업지역 특화 중점경관관리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도로(정조로, 매산로, 덕영대로, 중부대로) 경계에 면하는 필지의 건축물</li> <li>· 수원천로(지동교~매교) 도로경계에 면하는 필지의 건축물</li> </ul>	



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존의 경관거점과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개수를 축소하였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수원시 역사문화의 중심인 수원 화성지역, 능행차로, 서호와 수원역으로 연결되는 원도심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도로에 면하는 필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이처럼 수원시 경관계획은 도시 중심부에 대한 강력한 경관관리의 의지를 담고 있다.

## 수원시 경관심의 경향과 특성

수원시는 「경관법」에 근거를 둔 경관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사업의 디자인 관련 심의 및 자문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현재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분리되었지만 2018년 8월에 공공디자인 진흥조례가 발효되기 이전까지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을 경관조례에 산입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로 삼았다. 또한 타 조례에 의해서 조형물,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관련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한 심의를 위임받아서 운영하고 있어 심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심의위원들은 건축·경관·디자인·야간경관·조형물 등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제2부시장인 맡고 있다.

경관위원회는 본위원회 외에도 심의위원 3~7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디자인에 대한 추가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을 구성해서 소집하는 형식으로 개최된다.

수원시 경관위원회는 2010년에 구성되어 2010년 9건, 2011년 12건, 2012년 21건을 심의하였다.<sup>\*\*</sup> 이 시기의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시청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자문으로 경관적 측면에서 사업의 디자인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0년에는 기본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심의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경관협정사업이나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사업, 공공건축물이나 경관사업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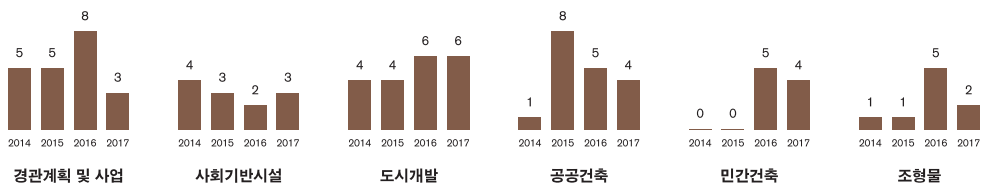
\* 수원시(2016), 「수원시 기본경관계획」, pp.55-57 재정리.

\*\* 수원시(2013), 「수원시 경관위원회 매뉴얼」, p14 참조.



수원시 경관위원회의 최근 4년간 유형별 심의 안건 수 변화

구분	2014	2015	2016	2017
경관계획 및 사업	5	5	8	3
사회기반시설(SOC)	4	3	2	3
도시개발	4	4	6	6
공공건축	1	8	5	4
민간건축	0	0	5	4
조형물	1	1	5	2
합계	15	21	31	22



자료: 정수진(2017), 「수원시 도시경관 통합관리 방안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최근 4년간의 심의 안건을 분석한 결과 심의 안건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유형도 점점 다양하게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정 「경관법」에 따라서 사회기반시설 사업, 도시개발사업 심의가 가능해졌으며, 기본 경관계획을 재정비함에 따라 중점경관관리 구역 내의 민간 건축물 심의를 진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경관계획심의와 민간건축물심의 유형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변화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관법」 개정이 근본 원인이므로 기초지자체 경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타 지역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안건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동일 위원회에서 조형물이나 건축물과 같은 세부 디자인 항목에 대한 심의부터 사전경관계획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지침 검토까지 시행하면서 심의 진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부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답사를 진행하는 등 현장감 있는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안건별 합리적인 심의 기

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수원시는 경관위원회가 수원의 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시작점에 해당하는 위원회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 타 위원회와 유기적인 연계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각 위원회가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인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 수원시 경관사업 현황

수원시의 경관사업은 수원시의 경관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주로 구도심 지역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경관사업은 옥외광고물과 건물 전면부 개선을 포함하며, 가로시설물 개선이나 조형물 설치와 경관협정 체결 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영화동 거북시장 길 경관협정사업은 수원시를 대표하는 경관사업이다. 수원 버스터미널 이전으로 상권이 쇠퇴하는 지역을 상인회와 지역 전문가, 공무원이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도시재생을 시도한 사례다. 이 사업은 경관협정을 통해 공공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그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역 사회에 교육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수원시가 경관협정 준비 과정에서 민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현재 성관관대 울진 밤밭 문화의 거리 경관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인계 장다리길 경관협정과 호매실 금호동 경관협정도 준비 중에 있다.

©정수진



거북시장 길 경관협정사업 대상지

자료: 정수진(2017), 「수원시 경관자원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

©수원시



파장초등학교 안전통학로 및 안전골목길쉼터 만들기 경관사업

건축환경디자인시범사업을 거쳐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장초등학교 안전통학로와 안전골목길쉼터 만들기도 수원시를 대표하는 경관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파장초등학교 진입로와 담장을 정비해서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한 사업으로, 현재 1단계 조성사업을 마친 상황이다. 교육청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지역의 경관을 개선한 좋은 사례로, 2018년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18년 현재는 수원 정자동의 오래된 상가지역을 리모델링하는 정자동 감성상권 조성사업과 같은 중심상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청 이전에 대비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원도심(향교 행궁로) 경관개선사업의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원도심 경관개선사업은 수원향교·부국원 등 근대문화유산과 수원화성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이다.

수원시 경관사업은 구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건축물 입면 및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관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발적으로 경관협정을 준비하는 화서동 꽃피마을 상인회 등 지역 사회가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경관협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 수원시 경관행정 특성과 향후 과제

수원시의 경관행정은 구도심 도시재생을 위한 경관협정과 경관사업을 추진하며, 광고·호매실·망포지구 등 신시가지 조성 지역과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심의를 통한 경관관리를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을 통해 향후 수원시의 도시경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축·조경·디자인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 관리 등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수원시 도시경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첫째, 일관된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수원시와 같은 기초지자체에서도 시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공사업 외에 각 구청과 동, 주민단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관 관련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동일 장소에 각기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세워진 조형물이나

안내 사인이 우후죽순 난립하는 경우도 많아 이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둘째, 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위한 민간 전문가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개별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의사 결정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민간 전문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에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의 권한, 지위, 역할 등을 효과적으로 부여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제도적 과제가 매우 많다.

셋째, 경관심의 이후 모니터링 추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경관심의 안전이 실제로 심의 결과를 어떻게 준수하고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모니터링은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넷째, 경관사업의 범위와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이다. 경관협정을 활용하여 시의 지원을 얻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시민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정책적으로 잘 유도해서 경관사업으로 연계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초지자체의 경관행정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유형이나 특성이 다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순발력이 필요하다. 주민 민원이 많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중재와 협의도 필요하다. 수원시는 기초지자체의 제한된 권한 속에서 경관행정을 보다 고도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는 중이다. 이를 위해서 경관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와 원활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수원시만이 아니라 기초지자체 현장에서는 비슷하게 발생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국토경관 관리의 시작점일 것이다.

#### 참고문헌

- 1 수원시(2016), 「수원시 기본경관계획(재정비)」.
- 2 정수진(201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영실태 파악」, 수원시정연구원.
- 3 정수진(2014), 「수원시 경관사업 추진 모형에 관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4 정수진(2015), 「수원시 경관협정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5 정수진(2017), 「수원시 도시경관 통합관리 방안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영국의 경관특성화를 통한 체계적 경관관리

정해준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교수

## 경관자원 조사 및 평가

국내에 ‘경관자원’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계기는 2007년 「경관법」 제정이라 할 수 있다. 경관적으로 우수한 대상을 경관자원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고,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계획대상지 내외 주변의 경관자원을 조사하도록 한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경관자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정부 부처들이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주로 ‘아름다운 ○○ 100선’ 류의 이벤트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단발성 사업에 의존한 방식은 경관자원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에 의미는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조사된 경관자원이 경관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정도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료로 쓰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물론 2006년부터 진행한 전국자연경관조사는 자연경관심의제도에 활용할 주요 경관자원을 조사하는 데 목적을 두는 등 활용 방안이 뚜렷한 사업이기는 하였으나, 3년 차 조사 이후로 더 이상 자연경관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13년 개정된 「경관법」은 경관규제의 목적보다 지자체들이 지역의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기존 국토관리체계와 연계되어 국가적 차원

\* 「경관법」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제33조(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 주신하·신윤지(2015), “국내 경관자원 조사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조경학회지』, v. 43, pp.27-42.

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경관관리를 유도·지원하고 있다.\* 우수한 경관 자원을 보전·관리하고 새롭게 창출될 수 있도록, 이들 다단계 경관계획은 지역마다 고유한 자연적·역사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나아가 경관심의회 건축 및 녹화협정, 주민 참여 등과 같은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경관평가 및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경관 관련 정책을 우리보다 앞서 실행한 다수의 국가들에서는 전 국토의 경관자원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하여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informed decision-making)의 기초자료로 삼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공공기관의 다양한 지원정책, 민관 파트너십, 적극적인 주민 참여 등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경관계획 틀과 의사결정 구조의 소통 수단이자 준거로 삼기 위해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영국에서 도입된 ‘경관특성화(Landscape Characterisation)’는 지역 경관 자원의 시각적 가치는 물론이고, 심리적·사회적 가치 등의 유무형의 가치를 통합적으로 조사·분석하는 경관평가 방법론으로, 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관 평가 방법으로 유럽권을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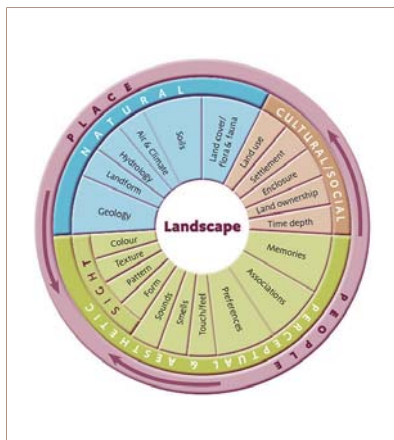
## 경관특성화평가 도입

영국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 이용과 환경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경관 단위의 정책 수행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970년대 초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시민사회가 더욱 성숙해짐에 따라 다원화된 관료체계는 국토정책에 개념적·제도적으로 통합된 접근법을 요구하였고, 사회·생태학적으로 복잡하고 다기능적인 경관은 그 통합의 틀로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경관학자들은 1930년대에 시작하여 1960년대에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가져왔던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접근법에서 이를 더욱 현실화시켰다. 이러한 통합적 사고가 공유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자원 이용과 환경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국토계획에 있어 경관을 정책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계획가들에게 경관의 시각적인 측면에 한정되었던 접근을 넘어, 경관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 생태, 경제 등의 복잡하고 심오한 상호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그 특성을 파



악하여 분류하고 체계화시켜, 궁극적으로는 이를 국토계획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평가 방법이 요구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고 지역경관의 시각적 요소 및 역사·문화 요소를 이해하며, 나아가 경관을 통한 지역의 장소성 및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평가 방법이 연구되었는데 ‘경관특성평가(Landscape Character Assessment: LCA)’가 그 중심에 있다.\*\*\* 경관 특성평가는 ‘최고를 보존하고 나머지는 개발(preserve the best and leave the rest)’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량적 경관평가(landscape evaluation)에 집중되었던 1970년대의 경관평가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하여, 1980년대 들어 경관에서 ‘차이(different)’나 ‘구별(distinct)’을 만들어내는 경관자원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자세히 기술하기 위한 경관평가(landscape assessment) 방법이 논의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1990년대 중반부터는 경관자원 정보 수집과 평가에 있어 전 국토 개별 경관의 질(landscape quality), 그리고 경관 특성(landscape character)을 구현하는 자연, 문화 사회, 지각 미학적 요소의 다양한 측면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역사경관특성화(Historic Landscape Characterisation)’ 등



경관의 구성요소

자료: Tudor & Natural England(2014)



159개 국가경관특성화 지역

자료: <https://www.gov.uk/>

\* 박현찬(2014), 「경관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경관정책의 개선전략」, 서울: 서울연구원.

\*\* Golley, F. B.(1993), *A History of the Ecosystem Concept in Ecology: More than the Sum of the Part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Selman, P.(2006), *Planning at the Landscape Scale*, Oxon: Routledge.

\*\*\* Swanwick, C., and LUC(2002), *Landscape Character Assessment: Guidance for England and Scotland*, Edinburgh: Countryside Agency and Scottish Natural Heritage.

Landscape Evaluation	Landscape Assessment	Landscape Character Assessment
1970년대 초반 이후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중반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가치에 초점을 두고 서로 다른 경관의 상대적 가치와 우열을 파악</li> <li>· 객관적 평가 과정을 중요하게 고려</li> <li>· 경관 요소의 계량화 중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를 종합적 고려</li> <li>· 인벤토리(inventory)와 분류, 경관평가의 체계적인 구분을 중시</li> <li>· 경관에 대한 지각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 특성을 중시하며, 경관 특성 규명, 맵핑, 분류하는 특성화 과정과 토지이용규제 등의 의사결정 과정을 구분</li> <li>· 관련 이해집단의 요구를 중시</li> <li>· 지역·광역·국가 등 공간위계를 고려한 경관특성평가를 강조</li> </ul>

자료: Swanwick and LUC(2002)

고고학적인 분석을 통해 경관 평가에 시간적 지층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였다.\* 더불어 정책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 참여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수립해나가는 데 경관 특성평가를 이용하는 방법이 더욱 구체적으로 고안되었다.

경관특성화(Landscape Characterisation)는 경관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다양한 경관 요소들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경관적 ‘특성’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경관특성평가(LCA)를 통해 경관자원을 조사하고 이해하며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경관특성화는 크게 특성화 과정(Characterisation)과 의사결정 과정(Making Judgement)의 두 단계로 진행된다. 특성화 단계는 경관 특성 유형(types)과 이들의 집합인 지역(areas)\*\*을 규정하고 묘사하는 단계로, 개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의견이 되도록 개입되지 않는 가치중립적인(value-free) 과정이다. 첫 번째 단계로 사전조사(desk study)가 이루어지는데, 지도 분석과 경관자원에 특징을 부여하는 자연적·사회문화적 경관요소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관련 국가 및 지역 정책 등이 조사된다. 다음 단계인 현장조사에서는 해당 경관이 인간의 감각 등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되고, 현장의 확인을 통해 사전조사에서의 정보를 더욱 정제하거나 조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조사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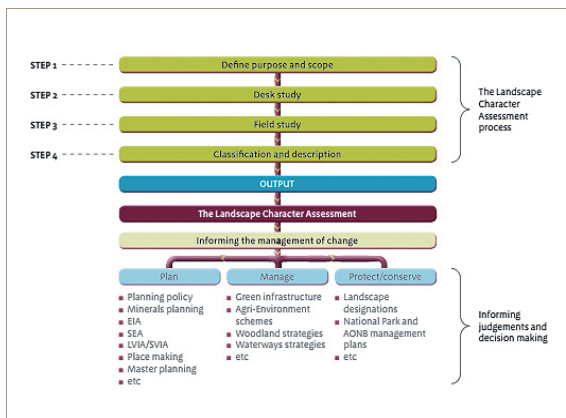
\* Knight, R.(2009), “Landscape and Visual” in P. Morris & R. Therivel (eds) *Method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xon: Routledge.

\*\* 경관특성유형(landscape character types)은 비슷한 경관요소들(지리, 지형, 하계망, 식생, 역사적 토지 이용, 주거 패턴 등)의 조합이 인접 지역에 비하여 명확하게 구별되어 특성을 나타내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역을 유형화한 것이다. 경관유형은 포괄적인 총칭으로, 다시 말해 어떤 경관유형의 경관요소들의 조합이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관특성지역(landscape character area)은 별개의 지리적 공간에 경관특성유형의 조합이 단 하나의 유일한 경관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이다. 비록 한(A) 지역의 경관특성지역을 만들어내는 경관특성유형 조합이 다른(B) 지역과 동일할지라도 그 지역(A)은 고유의 경관특성지역으로 취급된다. 경관특성유형은 보통 눈에 띄는 경관요소가 중심이 된 일반적인 이름을 가지나(ex. 암석 고원유형, 백악질 계곡), 경관특성지역은 보통 지역의 이름에 대표가 되는 경관요소가 조합이 된다(ex. 남동부 노섬벌랜드 해안평야, 북요크셔 고원지대와 클리블랜드 언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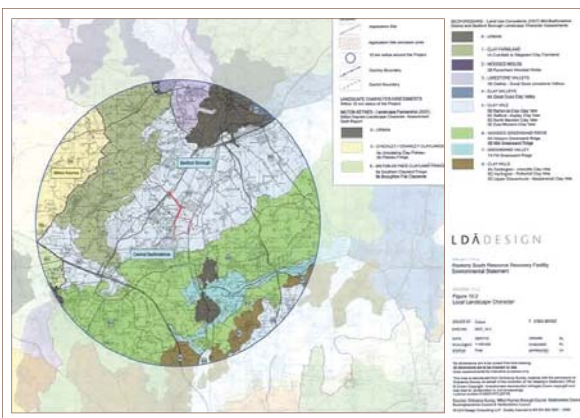
표들을 바탕으로 특징적이고 식별하기 쉬운 경관특성유형과 지역으로 분류하여 이름 붙이고, 이를 지형적 특성, 동식물상, 토지이용, 인지감각(시각, 청각, 촉각, 후각), 역사문화적 연관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종합, 지도화하여 이후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준비된다.

경관특성화 단계를 통해 지역경관의 가치를 알아내고 지도화를 통한 시각화된 자료는 경관계획 단계마다 적합한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의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된다. 또한 조사된 경관자원 자료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전산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계 종사자는 물론이고 전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관계획의 투명성 제고 및 지역 주민들의 경관계획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주요 정보 및 교육 자료로도 쓰이고 있다(<http://magic.defra.gov.uk/>). 현재 영국 잉글랜드 전역은 159개의 국가경관특성지역(National Character Areas: NCA)으로 구분되어, 경관특성평가가 완료되었으며, 지난 20년 동안 중앙정부의 국토계획 및 지방정부 지방계획에서의 경관계획에 의사결정을 위한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유럽연합 차원에서 14개 국가의 시험 적용을 시작으로 유럽대륙 전체의 경관특성화가 추진 중이다.\*



경관특성화평가 과정

자료: Tudor & Natural England(2014)



풍력발전기 설치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경관특성화 지도를 통해 평가한 예

자료: Landscape Institute and IEMA(2013)

\* Wascher, D. M.(2005), *European Landscape Character Areas: Typologies, Cartography and Indicators for the Assessment of Sustainable Landscapes*, Wageningen: ELCAI.

2000년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책을 통한 경관다양성을 강조한 ‘유럽경관협약(European Landscape Convention)’과 ‘행정의 효율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영국 정부가 2012년에 발표한 ‘국가계획정책체계(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 NPPF)’는 영국의 경관정책의 대전환점이 되었다. 여기서도 경관특성화는 이들 정책적 선언을 현실화시키는 실천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강조되고 있는 사항을 분석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경관특성화의 대상: 모든 경관은 특성을 지니며 정책의 대상

유럽경관협약과 NPPF를 거치면서 영국의 국토 계획에 있어 ‘경관’은 더 이상 관념적인 용어가 아닌, 정책적 용어이자 국토계획에 있어 환경·사회·경제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계 형성을 강조한 NPPF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국토경관의 본질적 ‘특성(character)’을 인식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계획의 모든 단계에서 ‘경관’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영국의 경관정책에 있어서 이전과 같이 ‘뛰어난 경관과 나머지(best-and-the-rest)’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이제는 경관의 다기능성(multifunctionality)에 주목, 손상되거나 매력적이지 않은 일상의 경관까지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토 경관자원의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에 적용시키는 경관특성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14년 내추럴 잉글랜드(Natural England)에서는 지속가능한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경관의 사회·문화·경제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경관특성 내용을 강화하고, 지역 차원의 경관특성평가를 수행할 때 참고가 되는 자료와 경관계획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역의 정책이나 근거자료를 자세히 정리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관련 기관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새롭게 159개 ‘국가경관특성지역(National Character Areas Profiles: NCA)’을 업데이트한 경관특성지역의 보고서(NCA No.1~159)를 내놓

\* DCLG(2014), Planning Practice Guidance, accessed on 12 July 2015 [<http://planningguidance.planningportal.gov.uk/>]

\*\* Natural England(2014), Corporate report: National Character Area Profiles, accessed on 15 June 201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ational-character-area-profiles-data-for-local-decision-making/national-character-area-profiles>]

있다.\*\* 각각의 보고서는 경관자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자연적·문화적 특성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관 변화에 대한 분석, 앞으로 예측되는 경관 변화의 주요 원인, 그리고 해당 지역의 경관특징과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담고 있다. 보고서의 서두와 말미에는 ‘환경적 기회 기술문(Statements of Environmental Opportunity: SEOs)’과 이에 대한 판단 근거가 자세히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욱 건전한 환경 유지를 위해 보전·관리·생성의 경관계획을 통해 지역경관자원에 취해져야 할 중대한 사안들을 밝히고 있다. 이 기술문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계획 및 환경, 경관계획에 주요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 경관특성화 활용: 정책 의사결정과 계획 실행의 근거 자료

NPPF를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모든 국토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NPPF를 준수하여 지역계획(Local Plans)을 수립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간적 위계를 기반으로 부문별 계획 간 통합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국토개발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패러다임을 보완한 것이다. 중앙정부(National Government), 광역지방정부(Regional Government)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피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가 지방정부의 개발계획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는 시행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일찍이 영국은 1:50,000 혹은 1:25,000 스케일의 단일 행정구역 기준이나, 여러 행정구역을 포함하는 국립공원이나 특정 경관사업의 경우 159개의 NCA를 기반으로 지방정부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경관특성화를 통해 지역경관특성지역(Local Landscape Character Areas: LLCA)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 계획 시에 LLCA가 부족할 경우 1:10,000, 1:2,500 혹은 더 작은 스케일의 경관특성화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계획의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하고 정보에 입각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초자료로 그 기능을 집중하고 있다.\*

\* Landmark Practice(2015), Landscape Character Assessment (LCA): tool to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accessed on 10 July 2015 [<http://thelandmarkpractice.com/landscape-character-assessment-lca-tool-to-support-sustainable-development/>]

이렇게 행정 지역이 아닌 공간적 위계에 따라 스케일을 달리하며 특성 지역이나 유형(character area/type)으로 구분되어 수행되는 경관특성화는, 국가에서부터 지방에까지 계획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이들 사이의 계획 위계와 협력관계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준다. 특히 국가적 기준은 물론이고 지역의 특수성에 맞추어 개발 계획을 통제해야 하는 지방정부에 경관특성화를 통해 작성된 NCA는 주요 참고수단이 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영국에서는 특정 지역 사업 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에 관해서, 개발 자문단 및 지방정부 당국이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관과 관련해서는 ‘경관 및 시각영향평가(Landscape and Visual Impact Assessments: LVIA)’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NCA나 LLCA 등 경관특성화를 통한 자료는 제시된 안이 주변 경관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적합한 계획인지 판단하는 주요 근거 자료로 쓰이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NPPF 지침에 따라 지역계획을 세울 때, 지속가능성평가(Sustainability Appraisal)가 요구되는데, 이때에도 경관특성화는 평가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경관특성화는 사업자가 개발 사업의 심의를 위해 제안서를 제출할 때, 개발 대상지와 주변부의 경관에 대한 운영계획과 서술서(schemes/statements)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경관 운영계획과 서술서는 개발 지역이 포함되는 NCA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경관특성화평가를 통해 작성한 LLCA에 기반을 두어 가급적이면 경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의 지방정부에 제출된 제안서에서 경관과 관련된 내용은 조경, 도시, 지리 등을 전공한 전문 공무원과 지역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개발계획이 지역경관특성에 악영향을 초래하는지 검토를 한다. 이때에도 NPPF와 지역계획, 국립공원이나 특별명승지(AONB)와 같은 경관 관련 정책들의 검토와 함께, 개발 계획에 의해 예상되는 경관 변화가 ‘지역경관특성에 부합하는지’, ‘지역경관과 어울리는지’, 그리고 ‘경관상 지나치게 드러나지 않는지’에 대하여 경관 특성이 기준이 되어 개발에 대한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경관특성화는 경관의 변화가 주변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 충분히 고려

\* Landscape Institute and IEMA(2013), *Guidelines for Landscape and Visual Impact Assessment*, third edition, London: Routledge.

되어 계획된 가운데 이루어지고, 경관의 변화가 가능한 긍정적인 효과로 유도되도록 관리하는 데 쓰인다.

### 경관특성화의 과정: 협력적 경관계획의 기반

유럽경관협약 이후 경관이 공공재로서 '사회복지(social well-being)'의 주요 정책적 수단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경관을 인지하고, 공유하며, 함께 사용하는 주민들의 참여가 바탕이 되어 있다.\* 경관의 주체로서 주민은 지역의 경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집단이며, 더 나아가 그들 자체가 지역 경관의 구성요소이면서, 경관의 다른 구성요소의 상당 부분을 만들어온 집단이다. 단위 지역을 다루는 경관계획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 과정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관특성화 과정에서, 특히 지역 차원의 LLCA의 경관특성평가와 의사결정의 모든 과정에 경관에 거주하는 주민은 물론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경관자원의 평가에서 시작되는 경관계획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경관의 주체인 주민들의 경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이해되고 공유되게 하여, 이후 원활한 의사결정을 도와준다. 이렇게 생산된 NCA나 지역의 LLCA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지도 등을 웹 환경에서 공개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주변 경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역으로 지역민들이 지역의 경관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근거로 주민들 사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공통된 의견을 만들어내는 자료로 활용하거나, NPPF로 강화된 외부 기관과 적극적인 파트너십 모색을 위한 주요 참고 자료로도 쓰이고 있다.

이렇게 경관특성화는 경관자원의 생태적·시각적 가치에 더해 사회적 가치 등의 유무형의 가치까지 조사·분석하여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관 평가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법과 그 결과물을 중앙정부의 국토계획, 지방정부의 계획과 현장의 사업 시행자 및 지역 주민들이 공유하면서 상호 호환하고 피드백을 통해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민주적인 경관계획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체계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 Olwig, K. R.(2007), "The practice of landscape 'Conventions' and the just landscape: The case of the European landscape convention", *Landscape Research*, v. 32, pp.579-594.

# 일본의 경관관리제도 운영 특성과 국내 시사점\*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많은 국가들은 도시 또는 지역의 경관을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형성과 보전·관리를 위해 법을 제정한 국가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은 우리처럼 ‘경관법’을 제정(2004)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경관법」 제정 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현재까지도 일본의 경관관리 방식이나 사례들은 국내 경관관리 제도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검토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경관관리 정책과 제도 운영 현황을 관리 주체별(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로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경관정책 수립 또는 관리 방향 설정에 시사되는 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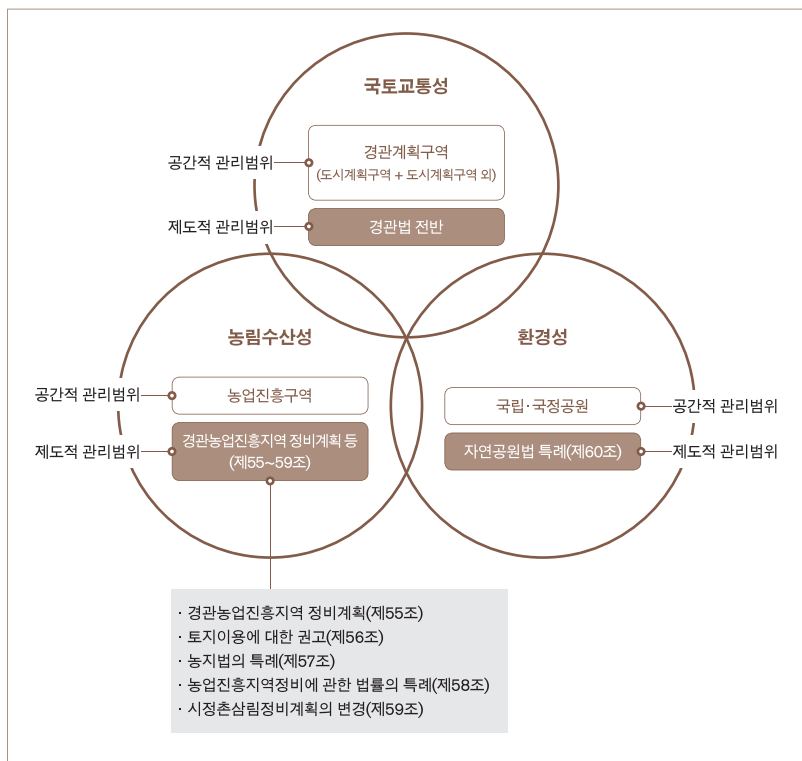
## 일본의 경관관리제도\*\*

### 경관법 제정 과정과 특성

일본은 1970년대부터 경관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조례를 근거로 독자적인 경관 시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시책 추진 과정에서 근거법 부재에 따르는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경관정책 방향 설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국토교통성은 2003년에 ‘아름다운

\* 이 글은 이상민 외(2018), 「일본의 경관정책 추진 동향과 국내 시사점」, auri brief 176호를 바탕으로 작성함.

\*\* 일본 출장을 통해 담당공무원 면담 시(2017.12.14.) 구득한 자료와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일본의 경관법 운용 주체별 역할 분담

자료: 이상민 외(2015),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87.

국가 만들기 정책대강(美しい國づくり政策大綱)'을 발표하고 이듬해인 2004년에 경관법을 제정하였다. 경관법은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업성, 환경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국토교통성은 경관계획구역(도시계획구역 내외), 농림수산업성은 농업진흥지역 내 경관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구역, 환경성은 국립·국정공원 등 자연공원 중심으로 경관관리 대상과 역할을 분담하였다.\*

### 경관법 및 경관계획의 주요 내용

일본의 경관법은 ①경관행정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 ②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③경관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경관지구, 준경관지구, 지구계획에서 건축물의 형태 의장 제한 등 경관지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상민 외(2015),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91.



④중요 건조물, 중요 수목, 중요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⑤경관협정, ⑥경관정비기구, ⑦세제상 특례조치(소득세·법인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관법 실행의 실질적인 주체는 ‘경관행정단체’로 인정받은 지자체, 즉 도도부현, 지정 도시, 중핵시, 시정촌 등이다. 따라서 국토교통성은 정책 방향만 제시하고 실질 계획과 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경관계획은 주로 경관계획 구역 확정, 양호한 경관 형성을 위한 행위제한(경관 형성 기준), 경관 중요 건조물 또는 경관 중요 수목의 지정 방침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 다루고 있다. 경관계획은 경관행정단체로 인정받은 기초지자체가 수립할 수 있다. 기초지자체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광역지자체가 대신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1,741개 지자체 가운데 경관행정단체로 지정된 지자체는 약 700개다. 이 가운데 538개 지자체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 도쿄올림픽 개최 시까지 900개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경관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

국토교통성은 이러한 법제도 운영과 함께 경관 인식 제고를 위해 도시경관대상\*과 같은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경관 마치즈쿠리에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학생·시민 대상의 경관 마치즈쿠리 관련 교육을 위한 교재나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 경관법이 시행된 2005년 6월 1일을 경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동시에 경관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관련 시책과 지역별 정보, 경관자원과 관련 데이터베이스, 경관 형성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포털사이트는 지방 정비국이나 관련 중앙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관 관련 정책 홈페이지 등과도 링크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의 경관 포털사이트

자료: [http://www.mlit.go.jp/toshitownscape/toshi\\_townscape\\_tk\\_000016.html](http://www.mlit.go.jp/toshitownscape/toshi_townscape_tk_000016.html)(검색일: 2018.9.13.)

- \* 国土交通省, 「都市景観大賞」, [http://www.mlit.go.jp/toshi/townscape/toshi\\_townscape\\_tk\\_000022.html](http://www.mlit.go.jp/toshi/townscape/toshi_townscape_tk_000022.html)(검색일: 2018.2.5.)
- \*\* 国土交通省, 「景観まちづくり教育」, <http://www.mlit.go.jp/crd/townscape/gakushu/index.htm>(검색일: 2018.2.9.)
- \*\*\* 国土交通省, 「6月1日は景観の日」, [http://www.mlit.go.jp/toshi/townscape/toshi\\_townscape\\_tk\\_000019.html](http://www.mlit.go.jp/toshi/townscape/toshi_townscape_tk_000019.html)(검색일: 2018.2.9.)
- \*\*\*\* 国土交通省, 「景観ポータルサイト」, [http://www.mlit.go.jp/toshi/townscape/toshi\\_townscape\\_tk\\_000016.html](http://www.mlit.go.jp/toshi/townscape/toshi_townscape_tk_000016.html)(검색일: 2018.2.9.)



## 도쿄도의 경관관리제도 (광역지자체 차원)\*

### 도쿄도 경관관리제도와 특성

도쿄도는 1994년 도시경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1997년 자주조례로 도쿄도 경관조례를 제정·운영하다가 2004년 경관법 제정 이후 위임조례로 도쿄도 경관조례를 전면 개정(2006)하고 2007년 도쿄도 경관계획을 수립하였다.\*\*

도쿄도는 수도로서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경관 형성을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과 건축물 조성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특히 역사적 경관 형성을 위해 수도 도쿄를 상징하는 건축물의 전망 보전, 황궁 주변의 품격 있는 경관 유도, 역사적 경관의 보존·복원, 역사적 건조물의 보존·활용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수도를 상징하는 건축물의 조망 보전을 위해 역사적 경관 형성 지침을 마련하고 메이지신궁 시계노리기념회 회관, 국회의사당, 영빈관, 도쿄역 마루노우치역사 4개 건축물의 배후지에 계획하는 건축물의 높이와 광고물 등을 규제하고 있다.

도쿄도는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전반에 걸친 경관전략 및 경관관리 틀을 제시하고, 자치구는 도쿄도의 경관계획을 준용하여 경관계획을 자체 수립하고 있다. 도쿄도 내 경관계획을 수립한 10개 자치구는 수립한 계획에 따라 경관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자치구는 현재 도쿄도가 직접 경관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가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경관행정 업무는 해당 자치구로 이관하게 된다.



수도 도쿄를 상징하는 건축물의 전망 보전 예시  
상. 메이지신궁 시계노리기념회 회관  
중. 국회의사당  
하. 도쿄역 마루노우치역사(복원 후)  
자료: 도쿄도 내부자료.

### 도쿄도 경관계획의 주요 내용과 관리 수단

도쿄도 경관계획은 대규모 건축물의 사전협의제도, 신고제도, 역사적 경관 형성 방안, 공공사업의 경관 형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사업과 지구에 대해서는 주로 건축물의 형태, 높이, 의장, 색채, 옥외 광고물 등을 규제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등의 인허가, 조례에 따른 권고·명령, 지침에 따른 요청 등 관리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 일본 출장을 통한 담당공무원 면담 시(2017.12.15.) 구득한 자료와 도쿄도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 도쿄도 내부자료.

\*\*\* 현재 도쿄도의 경관 주무 부서는 도시정비국 녹지경관과임.

## 도쿄도 경관계획의 주요 내용과 관리 수단

주요 내용	적용 대상	규제 또는 협의 내용			실행 수단
		형태, 높이, 의장 등	색채	옥외광고물	
대규모 건축물 사전협의제도	도시계획 등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도시재생특별지구, 종합설계 등) ·공성 주변, 도시재생 사업 디자인 협의 ·수도를 상징하는 건축물의 조망 보전	지역 경관 특성에 근거한 유도	사용 가능한 색채 범위 지정	·옥상 설치 전면 금지 ·벽면 표시 네온 규제	도시계획 등의 인허가
신고제도	경관형성 특별지구	·수변 주변 등 관광 진흥을 도모하는 지구 ·문화재 정원 주변 등 조망 보전을 도모하는 지구			·조례에 따른 권고·명령 ·광고물은 허가
	경관 기본축	임해, 스미다강, 다마가와조스이, 고쿠분지가이센, 가미다강, 구릉지 → 3~5층 이상 건축물 등			·조례에 따른 권고·명령
	그 외	·구 지역 : 높이 60m 이상 건축물 등 ·다마 지역 : 높이 45m 이상 건축물 등			
역사적 경관 형성	·역사적 건조물 선정 ·역사적 경관 형성 지침	주변 경관과의 조화 요청			지침에 따른 요청
공공사업 경관 형성	·경관중요공공시설 지정 ·공공사업 경관형성 지침				·경관계획 역할 ·지침에 따른 요청

자료: 도쿄도 내부자료.

경관관리 대표 수단인 사전협의제도는 도쿄도의 고유 권한으로, 대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상향 시 구체화한 계획 수립 이전에 협의를 진행하는 제도다. 도시재생특별지구, 시가지 재개발 사업, 종합설계 등 경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사전 협의 대상에 해당한다.

## 요코하마시의 경관관리제도 (기초지자체 차원)\*

### 요코하마시 경관관리제도의 특성

1960년대 말 요코하마는 외형 팽창에 중점을 둔 기존의 도시개발정책에서 내실 환경을 추구하는 시책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1970년대부터 도시디자인 행정을 도입하였다. 특히 1990년대까지 미나토미라이21·간나이·이세자키몰·모토마치 등의 정비 사업, 부도심과 지역 거점의 공공시설 정비 사업, 민간 재개발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녹지를 보전하고 역사와 문화를 살린 매력 도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도시디자인 시책이 성과를 거두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물리적 도시디자인을 넘어 문화 창조를 테마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위트프론트 정비, 예술가 창작 공간 제공 등 문화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갔다.

\* 일본 출장을 통한 담당 공무원 면담 시(2017.12.14.) 구득한 자료와 요코하마시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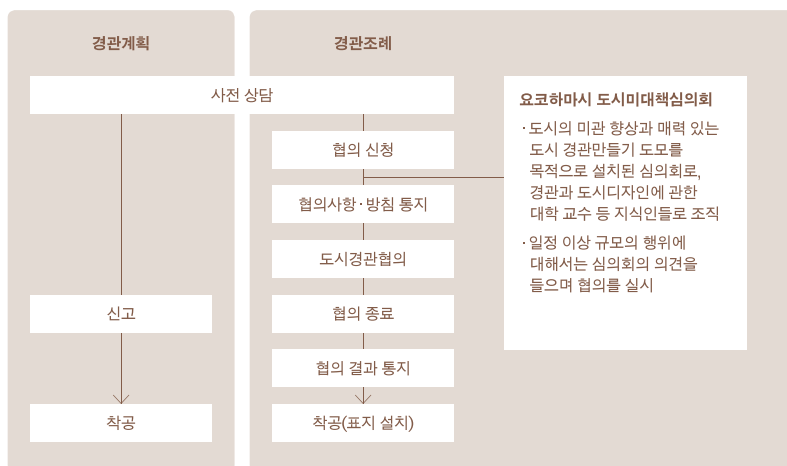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요코하마시는 2006년 ‘요코하마시 경관 비전’을 수립하고, 경관조례로 ‘요코하마시, 매력 있는 도시경관의 창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 경관 비전을 바탕으로 ‘경관추진지구(간나이지구, 미나토미라이21 중앙지구, 미나토미라이21 신항지구)’를 선정하고 지구별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 형태와 색채, 높이 등에 대한 정량 기준을 제시하였다. ‘도시경관협의지구’도 지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경관조례에 정성 기준을 마련하고 지구 내 사업을 추진할 때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요코하마시의 경관 담당 부서는 도시디자인실과 경관조정과다. 도시디자인실은 요코하마시 전반의 도시디자인 정책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거나 주요 공공사업의 경관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부서별 사업 추진 시 디자인 조언 등을 하는 등 기존의 도시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관조정과는 2004년 경관법 제정 이후 구성되었다. 주로 경관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요코하마 경관계획 주요 내용과 관리 수단

요코하마시는 시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양호한 경관 형성에 관한 방침’을 바탕으로 중점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구와 경관관리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요코하마는 간나이지구, 미나토미라이21 중앙지구, 미나토미라이21 신항지구 3개의

요코하마시 도시경관협의지구 조례에 따른 협의 진행 절차



자료: 요코하마시 내부자료.

경관추진지구가 각각의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관추진 지구 경관계획에서는 양호한 경관 형성에 관한 방침, 지구별 방침,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경관중요건조물 및 경관중요수목 지정, 옥외광고물 관련 행위 제한, 경관중요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양호한 경관 형성에 관한 방침은 요코하마 경관의 미래상, 경관중요건조물 지정 방침, 경관중요수목 지정 방침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방침에서 지정하고 있는 경관중요건조물에는 미나토마치와 이국의 문화를 전해 주는 건조물, 요코하마 발전사를 전해 주는 건조물, 습지와 야산 등 자연경관을 구성하는 형태 의장 건조물, 지역의 개성과 매력 있는 거리를 구성하는 형태 의장 건조물 등이 해당된다. 경관중요수목으로는 공공시설의 녹지를 보완하고 녹지 연단을 형성하는 수목, 나무 그늘을 만들고 편안함과 휴식 공간을 창출하는 수목, 지역의 역사를 전해 주는 수목, 지역의 특징적인 거리를 구성하는 수목 등이 있다.

또한 역사성 있는 건축물과 주변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특정경관형성 역사적 건조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7년부터 초등학생 대상으로 마을의 좋은 장소 찾기 등 경관교육 프로그램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교사와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고 있다.

## 일본 경관정책 및 관리제도 특성과 국내 시사점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경관관리에서 가장 큰 특징은 경관법을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환경성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정하고 각 부처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경관관리도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의 업무와도 관련이 깊다. 앞으로 국토경관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관관리제도를 기반으로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일본 경관관리의 또 다른 특징은 마을만들기 원칙에 따라 상향식(Bottom-up)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경관관리의 실질적인 주체는 기초지자체이며,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만 광역지자체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광역지자체인 도쿄도도 경관정책 수립과 경관관리를 직접 실행하기도 하지만 소관 자치구가 경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경관관

리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부처인 국토교통성 또한 직접 국토경관 전반을 관리하기보다 지자체가 경관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의 경관관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은 지속 가능한 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해 관련 주체에 대한 경관 교육을 체계화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성은 경관행정 담당자, 일반 시민, 어린이 등 관련 주체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이드북이나 교재 등을 제작·배포하거나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는 등 지원 활동을 중점 수행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인 요코하마 시도 최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초등학생 경관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행정이 전문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기초지자체가 경관관리의 실질 주체인 만큼 전문화된 행정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요코하마시는 1970년대부터 전문가를 활용하여 경관관리를 위한 디자인 행정을 도입, 도시디자인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관법 제정 이후에는 경관조정과를 별도로 구성하여 함께 운영하고 있다.

국내 「경관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지난 현재, 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우리 국토경관 정책은 다음 단계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관련 주체 간 긴밀한 협력, 시민의 경관 활동 적극 참여를 위한 경관 교육 활성화, 전문화된 경관행정 인력 확보 등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국토경관의 향후 관리 방향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  
한국경관학회 수석부회장

## 「경관법」 제정 11년

「경관법」이 제정된 지 벌써 11년이 지났다. 법 제정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07년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관법」을 제정하였다. 「경관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 국토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경관법」은 제정 당시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과 지원,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경관계획의 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 법 제정 이전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법정계획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는데, 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경관관리를 추진하려는 지자체의 의지에 힘을 실어 준다는 의미가 있었다. 또한 법정계획으로서의 경관계획은 법 제정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추어 장기적 경관관리가 필요한 곳에서는 거시적 차원의 계획 내용을, 단기적 처방이 필요한 곳에서는 당면한 경관 현안에 대한 해법을 담는 방식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런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경관계획 수립은 2014년 「경관법」을 개정하면서 경관계획을 의무화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다.

2014년에는 「경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인구 10만 초과 지자체의 경관계획이 의무화되었고, 개발사업·사회기반시설·건축물에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선포식(2017.5.17.)

대한 심의가 「경관법」에 포함되면서 경관심의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를 통해 경관계획이 정착 단계에 이르렀고,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경관 변화를 경관심의를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중앙정부의 역할도 강조되어 5년마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의 중장기 역할을 마련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2015년에는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100년의 국토경관’이라는 비전 아래 경관가치 인식 확산, 경관관리 역량 강화, 경관행정 기반 구축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경관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하여 국민들에게 경관의 중요성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 각자의 역할을 알리고자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을 제정하였다. 국토경관헌장의 제정은 앞서 언급한 경관정책기본계획의 ‘경관가치 인식 확산’이라는 전략을 실현하는 세부 정책 과제이기도 하였다. 특히 국토경관헌장 제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다양한 관련 부처와 학계·시민단체·언론 등을 포함한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헌장 선포식에는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참여하였으며 여러 지자체에서 국토경관헌장을 지지하는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하였다.



## 「경관법」 제정으로 인한 변화?

「경관법」 제정 11년. 이처럼 그동안 많은 제도적 보완과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그렇다면 「경관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실제로 우리 주변의 경관이 눈에 띄게 달라졌을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경관에 대한 인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광고물로 넘쳐나는 상업경관, 고층 건물들로 가로막힌 도시경관, 정리되지 않은 국도변 가로경관, 각종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우리가 만나는 일상적인 경관 중에는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너무도 많다. 경관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관련 전문가와 행정가의 노력에도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한편 경관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서 ‘경관은 규제’라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개발사업자의 입장에서 경관은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재산권 행사에 방해가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경관심의 안건들 중에는 법규 한도를 꼭 채워 주변 경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례가 꽤 많다.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해 층수를 낮추거나 시야를 열어 둘 공간을 확보하라는 의견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경관이 공공재라는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보편적이지 못하다.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자체에서도 경관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실행하고 있지 못하다. 경관행정 담당자들은 계획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실행이 어렵다고 하고, 강제성이 있는 실행 수단이 없어서 추진이 어렵다고도 한다. 경관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는 여전히 어렵고, 타 부서와의 협조가 매우 어렵다.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경관사업도 넉넉지 못한 지자체 재정적 상황으로 실행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기초지자체들의 재정 형편은 넉넉하지 못하고, 최근 도시재생 분야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는 분위기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경관협정도 아직 정착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주민들 스스로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고 보전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경관협정을 통해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더 크다.

그렇다면 지난 10여 년간의 제도적 개선, 학문적 성과, 행정적 노력이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것일까? 「경관법」 체계는 그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전문가나 행정 담당자들의 수준도 초기



에 비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동안 전문가 그룹에서만 ‘경관’을 이야기한 것일까?

현재 맞고 있는 경관 분야의 한계는 어쩌면 주민들과의 소통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할지 모른다. 주민들 스스로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전에는 경관은 아름다움에 대한 공허한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정책과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체감할 수 있는 경관, 경관자원

설악산 오색약수터와 남설악 지역 끝청봉 하단을 연결하는 3.5km 구간의 케이블카 건설은 지난 20여 년간 추진해 오고 있다. 수차례 사업 수정을 거쳐 2016년 환경부의 조건부 허가를 얻은 후 문화재청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문화재청 허가의 주요 쟁점은 야생 동물 서식지의 훼손과 경관 문제였다. 당시 필자는 경관분과 소위원회 외부전문가로 참여하였는데, 설악산 주봉인 대청봉에서 불과 1.3k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케이블카 주탑이 들어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거치면서 내려진 최종 결론은 케이블카와 주탑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경관적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었다.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경관 변화 면적으로만 인정한 셈이다. 대청봉에서 보는 아름다운 설악산의 경관은 아주 작은 변화, 특히 인공적인 요소의 도입만으로도 전체가 크게 훼손될 수 있는 대상이다. 더구나 설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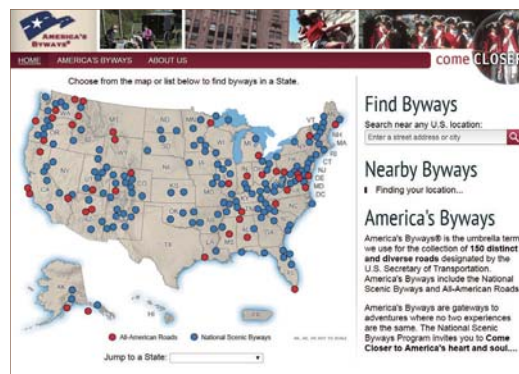
대청봉에서 본 오색케이블카 설치 구간: 작은 변화로도 경관훼손이 우려된다.

자료: 설악산 오색식도 설치 현상변경 검토위원회 회의자료.

산은 우리나라 자연경관을 대표하는 그런 곳이다. 이처럼 대청봉에서의 아름다운 경관은 그 어떤 방식으로든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설악산 경관을 후손들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도록 미리 경관자원으로 지정했다면 어땠을까? 경관 분야 연구자로서 너무나 안타까우면서도 동시에 그간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많았다. 아무튼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환경부 적폐청산위원회(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밀실 심의 등을 이유로 ‘허가 전면 재검토’ 의견을 내면서 현재는 다시 보류 상태에 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은 일상적인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나 경관적으로 의미가 있는 대상들부터 미리 잘 정리해 두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경관들을 잘 가꾸어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경관자원의 발굴과 관리는 이러한 쉬운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해외에서는 자원의 개념으로 경관을 관리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미국의 국가 경관도로 프로그램(National Scenic Byway Program)은 미국의 연방도로청(FHWA)의 주관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다. 1989년 Scenic Byway법이 제정되면서 경관도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어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1995년 국가 경관도로 프로그램의 정책을 통해 선정 기준을 마련하며 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경관도로는 고고학적 가치, 문화적 가치, 역사적 가치, 자연적 가치, 위락적 가치, 경관적 가치 등의 다양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다. 이어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150여 개의 도로가 경관도로로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미국 연방도로청(FHWA)의 국가 경관도로 프로그램

자료: <http://www.fhwa.dot.gov/byways>.

일본 오사카시에서는 경관법과 도시경관조례를 근거로 도시경관자원을 발굴하여 등록하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경관적으로 우수한 신규 건물과 역사적 건축물, 교량과 수목 등은 모두 지역의 경관을 특징짓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경관 형성에 중요한 자원들을 많은 시민들이 알고 지역의 ‘경관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경관자원의 발굴에는 지역별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진행하고, 최종적인 등록은 오사카시 도시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사례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경관적인 가치를 찾아내고 관련 기관이나 정부조직에서 권위를 인정해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관 가치에 대한 의미 부여, 이것이 경관자원의 발굴과 지정의 가장 중요한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전혀 없던 것은 아니다. 아름다운 도로 100선, 국립공원 자연경관 100경, 우수경관 조망명소, 농촌어메니티(농촌다움)자원 조사 등 경관자원에 대한 매우 다양한 유형의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지속적으로 발굴하거나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제는 경관자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경관정책의 새로운 비전: 경관자원의 조사와 관리

그렇다면 어떻게 경관자원을 조사하고 관리해야 할까? 필자가 제안하는 경관자원의 가장 효과적인 조사 방법은 지자체 경관계획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관현황조사 단계에서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자체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원들을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현재 경관계획 수립의 현실은 꼼꼼한 경관자원 조사가 진행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짧은 기간 내에 경관현황조사를 포함한 계획의 수립, 거기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포함한 승인 절차까지 진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효율성을 따진다면 경관현황조사를 현장조사보다는 기존 자료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관자원조사를 경관계획에서 분리하는 것은 어떨까? 경관자원조사를 미리 진행한 후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조사와 계획 모두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러

한 아이디어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경관자원조사를 분리하여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기초 지자체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충남 당진시는 올해 7월 경관자원 조사 용역을 발주하였다. 당진시 경관 담당자는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관법」 제10조 기초조사 항목을 예산 확보의 근거로 삼았다고 한다. 현재는 다른 지자체에서 쉽게 시도할 만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당진시의 사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당진시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경관자원조사 내실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관자원조사를 분리해서 얻는 이점은 경관계획의 내실화뿐만 아니다. 경관자원조사 결과는 경관계획 외에도 다른 관련 계획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자료이다. 도시계획 분야, 농어촌계획 분야, 관광 분야, 지역활성화 분야, 문화 및 축제 관련 분야 등 지자체 행정 전반과 관련이 많은 자료이므로 그 활용성은 매우 높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경관계획 보고서를 찾아보지 않고서는 이런 자료가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알기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까지는 경관자원조사 결과가 타 계획에서 활용된 사례가 많지 않다. 따라서 다른 분야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자원조사를 경관계획에서 분리하고 조사 결과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관심의에서도 활용할 경우 심의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자연경관심의나 산지전용허가 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태자연도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경관자원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과물을 보고서 형태 외에도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경관자원 목록을 게시할 수도 있고, 지도상에서 경관자원의 위치와 사진을 연동하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 휴대폰에서도 쉽게 검색이 되고 위치도 확인이 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할 듯하다.

경관자원을 기록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드론을 이용해 조감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VR 기술을 활용하여 360도 영상을 기

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의 참여로 일정 수준의 자료 구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주민들이 직접 촬영한 경관자원을 등록하고 순위를 매기는 방식을 도입해 볼 수도 있다.

시각적 측면 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대상을 찾는다면, 지속적으로 경관을 기록해야 하는 때에는 주민 참여를 통해야 효과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등록하는 친근한 방법을 통해 경관자원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은 지역경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일은 IT, 드론, VR, 빅데이터 처리, 데이터베이스 등 타 분야와의 협업 또한 매우 중요하다. 아직은 이러한 신기술이 경관 분야, 특히 경관자원의 조사와 관리에 활용된 경험이 많지 않으나, 앞으로 경관계획·관리·정책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국토경관의 향후 관리 방향

경관 분야를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각자가 생각하는 ‘경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그만큼 경관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대상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경관의 이러한 특성은 대중성과 일상성으로 읽을 수도 있다. 모두가 좋아하는 경관은 찾기 어렵지만, 우리는 늘 경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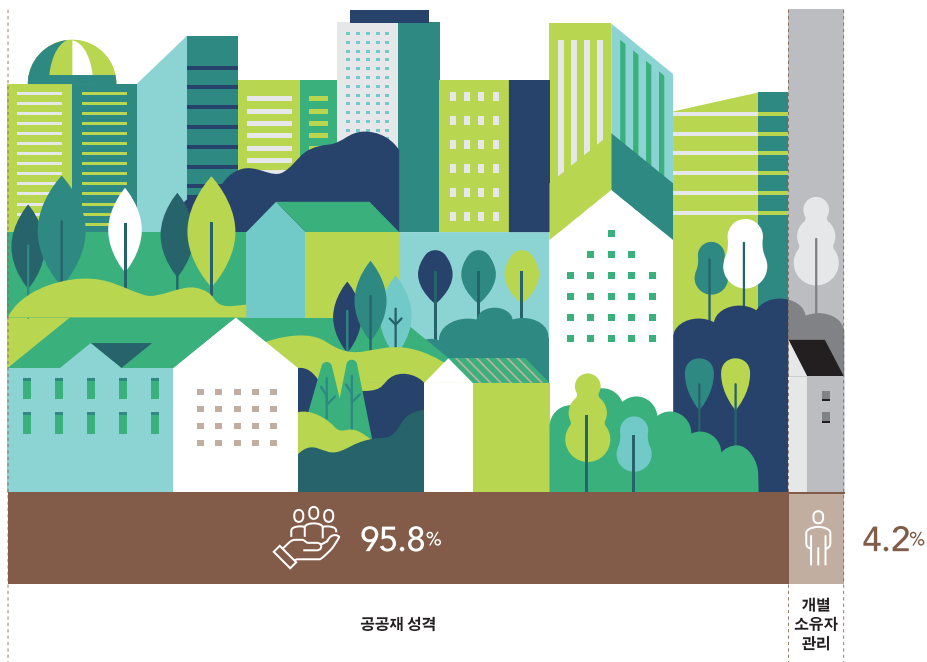
우리나라 「경관법」은 주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회가 도입되어 운영된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주민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어 새롭게 경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직 진행해야 할 연구와 제도 개선의 여지는 많이 남아 있다. 경관자원의 조사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떤 대상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연구성과를 토대로 각 지자체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도에 담아야 한다. 또한 지면관계상 언급하지 못한 경관교육은 주민들의 경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경관법」이 제정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토경관의 가치는 무엇일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토경관의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일반 국민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지역·성별·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하여 비례 할당하였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2018년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되었다.

### Q 경관은 공공재인가?



### A 국토경관은 모두가 함께 누리고 관리해야 하는 공공재

일반 국민의 대부분(95.8%)이 지역 경관은 함께 누리고 관리해야 하는 ‘공공재’로 인식하는 반면 사적재로 인식하는 비율은 4.2%에 불과하였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 경관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Q 우리나라 국토경관의 아름다움과 매력은?

■ 1순위  
■ 1+2순위

자연환경의 아름다움  
44.2%  
60.2%

특색 있는 역사문화적 건축물 및  
지역자원의 아름다움  
19.9%  
40.6%

예스러운과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마을  
14.0%  
32.1%

지역 특산품, 전통행사 등  
고유한 문화적 특색  
6.0%  
15.2%

기타  
0.8%  
0.8%

농경지와  
생활환경의 조화로운  
4.5%  
10.0%

다양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가지  
5.0%  
11.4%

랜드마크적인  
구조물이나 건축물  
5.6%  
11.3%

## A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은 우리나라 국토경관의 가장 큰 매력

일반 국민들은 '자연환경의 아름다움'(44.2%, 1순위 기준)을 우리나라 경관의 가장 큰 매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외에 '특색 있는 역사문화적 건축물 및 지역자원'(19.9%), '예스러운움과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마을'(14.0%) 등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Q 우리나라 대표 경관은?

■ 응답자 수  
\* 복수응답  
모름·무응답, 소수의견 기재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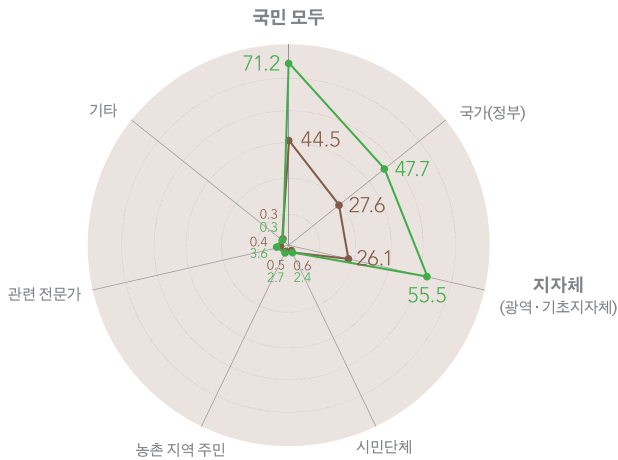


A 산과 관련된 자연경관이 우리나라 대표 경관

우리나라 대표 경관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예시 의존도를 줄이고 실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대표 경관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오픈형(주관식)으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일반 국민들은 우리나라 대표 경관을 '산'과 관련한 풍경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바다와 강 등의 자연경관', '문화재' 순으로 나타났다.



■ 1순위  
■ 1+2순위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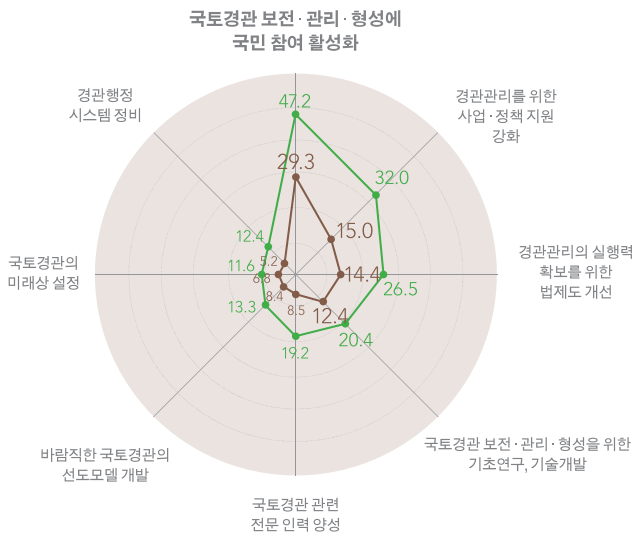


Q 국토경관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주체는?

A 국토경관은 국민 모두가 관리해야

일반 국민들은 경관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는 ‘국민 모두’라는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가(정부)’와 ‘지자체(광역 및 기초)’ 순으로 인식하였다. 즉 국토경관 관리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이 대다수이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국가나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고 인식하는 국민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1순위  
■ 1+2순위  
※ 단위: %



Q 국민들이 바라는 경관정책의 추진 방향은?

A 국토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있어 국민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국민들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경관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참여 활성화’(29.3%)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경관관리를 위한 사업 및 정책 지원 강화’(15.0%), ‘경관관리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14.4%)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경관관리를 위한 사업이나 법제도 개선에 앞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관심도 제고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건축과 도시공간

Vol. 31

Autumn 2018

# 건축 도시 동향

Trend Report

## 2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며 미국 도시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뜨거운 이슈인 가운데, 다각도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바라보고 정확한 진단을 시도한 사례를 소개한다. 북촌한옥마을 등 우리 사회에서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오버투어리즘 문제에 대해 일찍이 도시 차원에서 대응해 온 암스테르담,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자주택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활발히 시행 중인 일본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아본다.

한편 국내에서는 선·면 단위 등록문화재가 최초로 등록되며 점 단위의 문화재 보존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졌다. 선·면 단위 등록문화재 제도의 의의와 내용을 국내동향에서 살펴본다. 한옥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의 2018년도 추진 과정도 소개한다.

치오다구 지역 서비스고령자주택 입주자 및 생활협력원 정기식사 모임



사진 부문 대상을 수상한 '한옥 속의 풍경'



레퓨지오(REFUGIO) 공유 주택 지상층에 자리 잡은 레퓨지오 카페의 모습



## 해외

###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을 위한 새로운 시도

—미국의 젠트리피케이션

삼각진단법 적용과 시사점

066

오버투어리즘에 대응하는

암스테르담의 전략

—관광 도시에서 균형 찾기

072

일본의 고령자주택

정책 및 제도 동향

079

## 국내

선·면 단위 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과 기대 효과

083

2018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추진 경과

089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을 위한 새로운 시도 – 미국의 젠트리피케이션 삼각진단법 적용과 시사점** | 젠트리피케이션 논의가 뜨거워지면서 제대로 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방법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 연구진은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의 의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통계 자료 분석, 현장 답사 관찰 및 관계자 인터뷰 세 가지 연구 방법을 모두 이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인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삼각진단법을 제안하였다.

**오버투어리즘에 대응하는 암스테르담의 전략 – 관광 도시에서 균형 찾기** | 암스테르담시는 오버투어리즘을 무엇보다 '균형의 파괴'로 진단하고 있다. 도시공간의 번잡함과 조용함의 균형, 번성하는 관광산업에 기대고 있는 경제성장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방향과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방향 사이의 균형을 시정부는 수년 전부터 심각하게 고민해 왔다. 그 결과 도시 균형 정책의 핵심 가치로 '개방성', '현대', '다양성', '휴먼 스케일'을 꼽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주택 정책 및 제도 동향** | 일본의 고령자주택 정책과 제도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하고 있다.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과 효과 점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과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현 시점에서 일본의 관련 법 개정과 도쿄도의 시범 사업 추진 사례는 주택 확보 문제와 복지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사회에서의 생활 지원을 위한 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선·면 단위 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과 기대 효과** | 역사문화공간은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이 새겨진 장소이며, 회로애락과 삶의 체취가 커켜이 쌓여 있는 일상생활의 공간으로서 생활사적 재조명이 필요한 곳이다. 선·면 단위 등록문화재 제도 사업의 기본 방향은 문화재 진정성을 회복하여 역사문화공간의 입체적·맥락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지역별 특화된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것이다.

**2018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추진 경과** | 우리 전통 건축인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작된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이 올해 8회째를 맞이하였다. '한옥, 길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제시된 올해의 공모전을 통해 한옥의 다양한 가능성과 시도를 다시 한 번 생각하여 보고, 참가자들에게 정통성과 순수함에 대한 압박이 없이 자율적으로 진화한 한옥의 현대형을 찾아볼 것을 요청한 것이다.

#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을 위한 새로운 시도

## -미국의 젠트리피케이션 삼각진단법 적용과 시사점\*

박정호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도시계획 및 개발학 박사 과정

### 젠트리피케이션 삼각진단법의 개요

도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젠트리피케이션도 예외는 아니다.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장소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바라보더라도 누구의 관점에서, 어떠한 자료를 사용하여, 무슨 방법으로 진단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수의 젠트리피케이션 학자들이 공감하듯 젠트리피케이션이 장소에 매우 특화된(Place-specific) 현상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논의가 뜨거워지면서 제대로 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방법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두 가지 방법을 천편일률로 모든 장소에 적용하기엔 젠트리피케이션의 장소별 양상이 너무 다르다. 그렇다고 장소별로 특화된 방법을 매번 개발하기도 만만치 않고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서로 다른 잣대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측정한다면 일관성이 떨어질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다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왜 통계 자료로 측정한 젠트리피케이션은 뉴스미디어에 보도되는 현장의 모습과 다를까? 현지 주민이나 영세 상인이 토로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심각성은 왜 통계 자료에 잡히지 않을까?

루카이토-시데리스(Loukaitou-Sideris)를 비롯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 연구진은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의 의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통계 자료 분석, 현장 답사 관찰 및 관계자 인터뷰 등 세 가지 연구 방법을 모두 이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인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삼각진단법(Triangulation Method to Study Gentrification)을 제안하였다.

\* 이 글은 JPER<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에 실린 Loukaitou-Sideris 외(2017)의 "Triangulating Neighborhood Knowledge to Understand Neighborhood Change: Methods to Study Gentrification"을 요약하여 국내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와 정책 개발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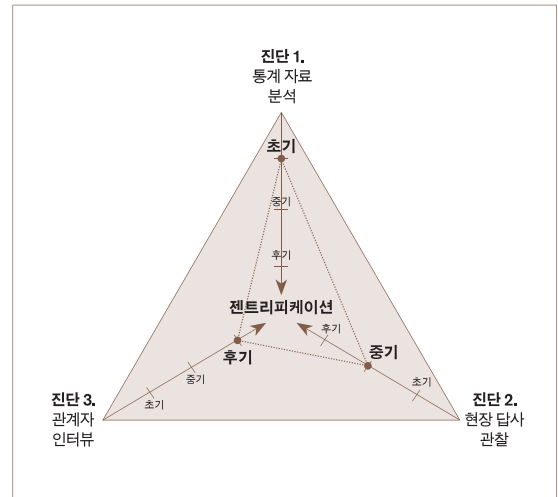
UCLA 연구진의 연구에서도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 정도나 양상 분석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그런데 동일한 방식으로 복수의 사례지를 분석해 보니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방법과 결과 사이에 무언가 일관된 규칙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패턴은 기존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에서 주로 사용해 온 지표나 지수와 같은 정량 수치가 아니다.\*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세 가지 다른 각도에서 접근(Triangulation)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결과로 볼 수 있다.

### 젠트리피케이션 삼각진단법 적용 사례: 미국 로스앤젤레스

Loukaitou-Sideris 외(2017)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City of Los Angeles)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주거비 부담이 극심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특히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장 뜨거운 도시 관련 이슈 가운데 하나다. UCLA 연구진은 통계 자료, 현장 관찰 결과 및 인터뷰 기록 세 가지 형태의 자료를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진단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 삼각진단의 개념

젠트리피케이션 삼각진단법은 새로운 연구 방법이다. 기존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진단 방법 가운데 세 가지 방법을 한 연구 안에서 병행하고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을 종합한 결과를 도출하는 접근 방식을 말한다. 보통 한 연구에서 한 가지 방법만 이용하는 접근 방식과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네 가지 연구 방법을 통합하는 사



젠트리피케이션 삼각진단법 개념도

자료: Loukaitou-Sideris 외(2017)을 토대로 원고작성자가 도식화.

각진단이나 다섯 가지 방법을 이용한 오각진단도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Loukaitou-Sideris 외(2017)에서 굳이 삼각화(Triangulation)를 택한 이유는 기하학에서 닫힌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소한 3개의 변이 필요하듯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을 세 가지 방법으로 둘러싸고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함이다.

위 개념도에서 보이듯, 삼각형의 중앙에는 연구 대상에 해당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위치해 있고, 서로 다른 세 가지 방법이 삼각형 꼭짓점으로부터 중앙에 위치한 현상을 진단한다.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웨스턴의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를 개략이나마 살펴보면, 첫 번째 진단 방법인 통계 자료 분석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아직 초창기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두 번째 진단 방법인 현장 답사 관찰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 미국의 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을 정량 지표와 지수를 통해 진단한 연구 목록은 Chapple & Zuk(2016) 또는 원문을 간략히 정리한 박정호(2017)에서 찾을 수 있고, 미국의 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과 전지 현상의 관계를 정량으로 진단한 연구 목록은 Zuk 외(2018)에 정리되어 있다.



한창 진행 중인 중기로 접어들었다. 마지막으로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해 보니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된 후기 단계로 나타났다. 진단 방법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 삼각진단법의 핵심은 복수의 사례지 각각에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함으로써 방법과 결과 사이의 일관된 규칙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계자 인터뷰는 다른 진단 방법에 비해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어 있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지, 특정 사례지에서 분석 결과가 전반적으로 과장되는 경향이 있는지 등 진단 방법과 분석 결과 사이의 패턴을 발견하여 최종 해석에 반영하게 된다. 삼각화된(Triangulated)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는 한 가지 방법으로 측정된 결과보다 다각도에서 포괄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높다.

### 삼각진단 사례지

Loukaitou-Sideris 외(2017) 연구는 로스앤젤레스 안에 위치한 역세권 네 곳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을 진단하였다. 최근 신규 주택 공급이 대부분 전철역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논의가 역세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주로 저소득·저학력 및 소수인종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103번가·와츠, 차이나타운, 할리우드·웨스턴, 마리아치 플라자에서 전철역으로부터 반경 0.5mi(800m) 이내를 대상으로 세 가지 자료와 방법을 이용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진단하였다.

### 삼각진단 방법 및 자료

동일한 사례지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수행된 별도의 두 연구가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했다면 결과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차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Loukaitou-Sideris 외(2017) 연구에서는 앞에서 소개된 사례지에 대해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모습을 관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현지 주민 대표자

### 로스앤젤레스 사례지의 모습과 현황

사례지	103번가·와츠	차이나타운	할리우드·웨스턴	마리아치 플라자
				
총 인구 수	11,894	9,912	22,623	11,433
총 인구 중 아시아인 비율(%)	0	45	11	10
총 인구 중 흑인 비율(%)	25	12	4	1
총 인구 중 히스패닉 비율(%)	74	31	32	87
총 인구 중 비히스패닉 백인 비율(%)	1	10	51	2
중위주택가격	219,000	303,050	570,700	293,400
중위임대료	1,659	1,855	2,196	1,639
주택면적당 중위가격	203	320	436	274
전철역 종류	경전철	경전철	중전철	경전철
전철 노선	블루라인	골드라인	레드라인	골드라인 동부
전철역 개통 연도	1990	2003	1999	2009

주: 원 자료는 2009~2013 5년 치 미국 사회 조사다. 블록 그룹 단위로 집계되었으며 0.5mi 반경으로는 가중치 부여되었다. 주택임대료와 주택가격은 Zillow.com 부동산 웹사이트에서 획득한 수치로, 2013년 미국달러로 환산되었다. 자료: Loukaitou-Sideris 외(2017).

와 지자체 공무원을 만나 인터뷰를 실시한 후 분석 결과 간 차이와 그 이유에 집중하였다.

#### • 통계 자료 분석

사회 인구 변화, 총주택 재고 및 임대주택 부담 가능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자료를 모아 통계 및 GIS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 인구 변화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미국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인종, 소득, 가구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주택 재고 변화는 필지 단위 감정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단독주택 개보수와 집값 변동 추세를 분석하였다. 부담 가능한 저소득층 임대주택 변화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미국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블록 그룹 단위에서 측정하였다. 주택 바우처 수혜자 현황은 연방정부 주택도시개발부의 Picture of Subsidized Housing 자료와 로스앤젤레스시 주택 커뮤니티투자부서의 엘리스 법령(Ellis Act) 강제 퇴거 자료를 정리하였다. 이에 더해 저소득주택세금혜택(Low-Income Housing Tax Credit: LIHTC) 주택의 변화도 연방정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 현장 답사 관찰

현장 답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우선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관찰 지표 목록을 작성하였다. 본격 설문에 앞서 관찰 일지 적합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였고, 연구자 간 관찰 결과 신뢰도를 점검하였다. 관찰 일지를 이용하여 커뮤니티당 2명의 연구자가 자유롭게 배정된 구역을 배회하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 관찰 지표 목록에 정해진 도로 구간과 필지 관찰 내용을 기록했다. 블록과 필지 사진 촬영도 병행했다. 특이한 점은 주거지뿐만 아니라 상업용 필지도 관찰하였다는 것이다. 인구 구조 변화, 업스케일링, 사회 문제 발생 등과 관련된 도시 형태 관찰 결과를 기록하였다는 점도 특징이다. 전체 4개 사례지를 합

쳐 모두 116개의 주거 및 상업용 필지와 84개 도로 구간을 관찰하였다.

#### • 관계자 인터뷰

현지 주민이나 지자체 공무원이야말로 해당 사례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를 가장 먼저 직접 체감하는 이들이다. Loukaitou-Sideris 외(2017) 연구에서는 통계 자료 분석과 현지 방문 관찰에 더해 주민 대표자와 지자체 공무원 담당자를 만나 그들이 인식하고 체감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의견을 수집했다. 전체 사례지를 합쳐서 총 17번의 일부 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 기관은 로스앤젤레스시 도시계획부서, 커뮤니티 위원회, 로스앤젤레스시 위원회, 커뮤니티 단체 등이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사례지에서 진행된 개발 사업 업무를 직접 담당한 직원이 인터뷰에 응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인터넷 조사, 동료 소개, 다른 인터뷰 대상자의 추천 등을 통해 찾았다. 인터뷰는 보통 30~45분 정도 진행되었고, 대면 인터뷰 또는 전화 인터뷰 형태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되었으며, 미리 준비된 설문지에 대한 응답도 함께 받았다. 코드화된 인터뷰 결과는 유사한 내용끼리 유형화를 실시했다. 예를 들어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코드는 주택·상가임대료 증가, 근린 특성 변화, 새로운 거주인구·이동인구, 힙스터(Hipster), 신규 점포, 신규 개발, 콘도미니엄, 부동산 리노베이션 후 되팔기, 세입자 바이아웃(Buyout), 상가 전환, 강제 퇴거, 전치 현상 등이다.

#### 삼각진단 결과

전반적으로 어떤 진단 방법을 적용했느냐에 따라 사례지별로 진단 결과가 다르게 도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방법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에서 일관된 규칙이 드러났다. 우선 젠트리

피케이션이 이미 많이 진행되었거나 이제 막 시작된 사례지에서는 세 가지 진단 결과가 거의 일치했다. 103번가·와츠 사례지의 경우 어떠한 진단 방법도 젠트리피케이션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 그러나 할리우드·웨스턴 역세권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세 가지 방법 모두 강력한 젠트리피케이션 여파를 감지했다.

반면 나머지 두 사례지에서는 진단 방법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었다. 차이나타운의 경우 통계 자료는 남서부 지역에 국한된 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을 감지했지만 현장 답사 관찰 자료는 남서부 지역뿐만 아니라 역세권에 바로 인접한 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도 포착했다. 나아가 관계자 인터뷰 결과는 일부 상가 건물의 리노베이션 후 되팔기 사례를 포함해 초기 상업지 젠트리피케이션 징후도 포착해 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치 플라자의 경우 통계 자료에서 그 어떠한 젠트리피케이션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장 답사 관찰과 인터뷰는 주거지와 상업지 젠트리피케이션 초기 징후를 모두 보여주었다. 특히 인터뷰 결과에서 상업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주민 대표자와 지자체 공무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 삼각진단법 적용의 시사점

기존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방법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삼각진단법은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에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기본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정의하고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다. Loukaitou-Sideris 외(2017)에서도 사례지 주민 대표자와 지자체 공무원이 느끼고 이해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둘째로 정책개발 측면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계속 다르게 도출된다면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적절한 방법을 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도 관련 정책의 근거를 납득하기 쉽지 않다. 또 이해관계를 위해 의도적으로 특정 진단 방법이 선택되는 병폐도 막을 수 있다.

셋째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방법 관련 학술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특정 진단 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젠트리피케이션 규모와 진행 정도를 과대평가하거나 반대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초기·중기·

대상지의 진단 방법별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 비교

진단방법	103번가·와츠	차이나타운	할리우드·웨스턴	마리아치 플라자
통계자료 분석	· 상업지/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 둘 다 없음	· 상업지 젠트리피케이션 없음 · 약간의 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이 근린 외곽에서 발생(0.5mi 반경)	· 상업지/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이 전철역 남동쪽 구역에서만 나타남	· 상업지/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 둘 다 없음
현장답사 관찰	· 상업지/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 둘 다 없음	· 상업지 젠트리피케이션 없음 · 약간의 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이 0.25 또는 0.5mi 이내에서 발생	· 상업지/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이 광범위한 구역에서 나타남	· 상업지/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 초창기 징후 나타남
관계자 인터뷰	· 상업지/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 둘 다 없음	· 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 상업지 젠트리피케이션 초창기 징후 나타남	· 상업지/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 둘 다 발생	· 주민대표자 : 상업지/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 둘 다 발생 · 지자체 공무원 : 상업지 젠트리피케이션 없음, 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 다소 발생

자료: Loukaitou-Sideris 외(2017).

말기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 정도에 따라 또는 수도권, 지방 대도시·지방 중소도시 등 도시 위치와 규모에 따라 정확하게 젠트리피케이션 징후를 감지해 낼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복수의 진단 방법을 복수의 사례지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연구자 간 협업이 확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형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및 방지 활동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주거권, 사회경제적 격차 등 생계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들이라보니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논하는 자리가 감정적이나 정치적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 참여 활동을 기피하거나 표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삼각진단법을 통해 드러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다면성을 일반 시민과 공유한다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건강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장점에도 삼각진단법을 국내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와 정책 개발에 적용하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자료의 가용성이다. 동일한 사례지에 대해 통계 자료, 현장 답사 자료, 인터뷰 자료 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한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통계 자료 분석과 현장 답사 관찰 및 관계자 인터뷰 이외에도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 가지 방법이 아닌 네 가지 방법을 아우르는 사각진단법 또는 오각진단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 결론

국내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주로 수도권 안, 특히 서울의 이슈가 되는 장소에서만 진행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런데 점차 지방 대도시에서도 속속 젠트리피케이션 징후가 감지되면서 관련된 논의가 시민 단체, 학계, 정책 입안자를 넘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오가고 있다. 학계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와 발생 시점, 진행 속도, 발생 공간의 범위, 변화 양상 등 다양한 학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방지 대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단체의 풀뿌리식 접근도 활발하다. 그러나 여전히 젠트리피케이션 담론의 중앙에 남아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제대로 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방법에 대한 논의와 합의의 부재이다. 정답이 아닌 하나의 대안으로 삼각진단 접근 방식을 국내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와 정책 개발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박정호(2017), "미국의 젠트리피케이션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과 의미", 『건축과 도시공간』 26호. pp.64-69.
- 2 Chapple, K., & Zuk, M.(2016), "Forewarned: The Use of Neighborhood Early Warning Systems for Gentrification and Displacement", *Cityscape: A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18(3). pp.109-130.
- 3 Loukaitou-Sideris, A., Gonzalez, S., & Ong, P.(2017), "Triangulating Neighborhood Knowledge to Understand Neighborhood Change: Methods to Study Gentrification",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pp.1-16.
- 4 Zuk, M., Bierbaum, A. H., Chapple, K., Gorska, K., & Loukaitou-Sideris, A.(2018), "Gentrification, Displacement, and the Role of Public Investment",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33(1). pp.31-44.

# 오버투어리즘에 대응하는 암스테르담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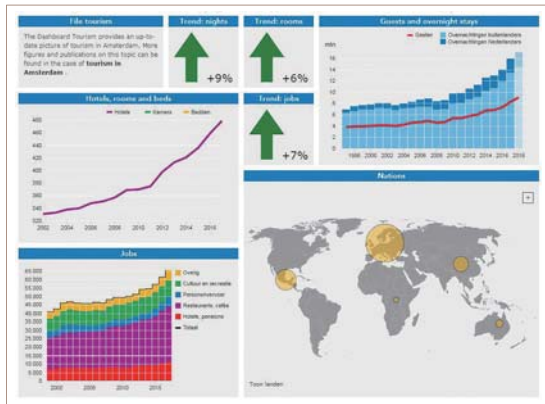
## - 관광 도시에서 균형 찾기

강빛나래  
델프트공과대학교 건축조환경학부  
박사 과정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은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방문객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할 정도로 관광객이 지나치게 많은 현상을 가리킨다(Responsible Travel).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까지 불리던 관광산업의 이면에 전 세계가 주목하면서 이 단어는 2018년 콜린스 사전에 등재를 추천 받았다(Dickinson, 2018).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주용태, 2018). 2017년 총 1,051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찾았고(이현일, 2018), 이는 서울시 등록 내외국인 약 1,017만 명을 넘어서는 숫자이다(김규원, 2017). 관광객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돈도 함께 들어온다. 소비가 커지니 일자리도 늘고, 부동산 가치도 오른다. 동시에 장소 특색을 소거하는 변화도 가속된다. 방문객은 그 도시와 장소를 실재대로 경험하지 못한다. 주민은 주민대로 소음과 쓰레기, 거리의 혼잡함, 구경하는 시선을 감내한다. 높아지는 부동산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일터와 삶을 옮기는 이들의 설움도 깊어진다. 이런 지나친 관광의 부작용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서울보다 앞서 엄청난 관광 몸살을 앓는 도시가 있다. 바로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이다. 지난해 관광객 수는 816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12.4% 늘었고, 주민 수 약 85만 명의 9배를 거뜰히 넘어선다(OIS; OIS, 2018a). 암스테르담이 인기 있게 된 것은 꽤 최근의 일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관광객 수가 정체되다가, 2009년을 기점으로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1980년 중반 주민 수가 20만여 명 감소한 침체기를 계기로 암스테르담을 매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 정부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행위자들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30~40여 년에 걸친 투자는 다양한 문화 예술 공간, 쾌적한 수변생활 공간, 그 자체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역사운하거리 등 관광 콘텐츠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도시 전체가 열린 박람회장처럼





암스테르담 관광객 수와 일자리 수 증가 추세

자료: 암스테르담시, [https://www.ois.amsterdam.nl/visualisatie/dashboard\\_toerisme.html](https://www.ois.amsterdam.nl/visualisatie/dashboard_toerisme.html)

관광객을 맞이한다. 연간 주민 수의 9배나 되는 관광객이 쏟아져 들어올 때 도시에 얼마나 큰 물리적 및 사회 부담이 가해질지는 가히 가늠하기 어렵다. 이 글은 암스테르담시가 2016년에 본격 착수하여 2018년 봄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는 오버투어리즘 대책, ‘도시 균형(Stad in Balans)’ 정책을 소개한다.

### 도시 균형 정책의 배경과 경과

암스테르담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관광객을 도시 전역에 좀 더 골고루 분산시키고, 주민 불쾌 요소를 줄일 방법을 다양하게 실험했다. 22개 지역 4,500명의 시민에게 주관적인 혼잡도 경험에 대해 설문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도 모아 혼잡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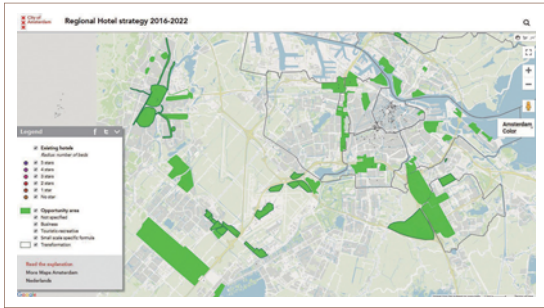
암스테르담시 도시 균형 정책 소개 웹페이지

자료: 암스테르담시, <https://www.amsterdam.nl/bestuur-organisatie/volg-beleid/stad-balans/>

를 그려 보았다. 동시에 각 동네 주민과 사업체, 문화 예술기관, 구 단위 행정부, 학교 등과 함께 문제를 파악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설계했다. 진행 결과 전후 상태를 비교해 성과를 측정하고, 교훈을 도출했다. 2018년 3월 지방선거 후 암스테르담 시 연정은 녹색좌파당, 민주66당, 노동당, 사회당 4개 당으로 구성되었다. 새로 출범한 시정부는 기존 시범사업의 68%를 지속하고, 일부는 강화하거나 범위를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5월 암스테르담시가 발표한 도시 균형 정책 프로그램에 포괄되는 대책 네 가지 범주는 ①서비스의 다양성 지키기, ②주민 불쾌 요소 줄이기, ③관광 수요와 관광 수입 나누기, ④공공 공지는 늘리고 혼잡은 줄이기이다(Gemeente Amsterdam, 2018a).

### 다양성 지키기: 천편일률로 상업화된 도시 vs. 주민 필요에 부응하는 도시

민간투자가 주로 관광객 수요에 반응하면 관광객 대상 업종과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음식점, 상점 등의 증가가 압도하기 쉽다. 그렇게 상권 구성이 획일화되면 오히려 관광객에게 매력을 끌 만한 거리 특색이 줄고, 주민에게 필요한 가게도 줄어들 불편이 커진다. 특히 담스트라트(Damstraat)와 일급 상업 지역에서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진다. 특정 주제나 상품에 특화된 개성 있는 상점, 소규모 독립 유통 상점, 독특한 카페와 레스토랑이 골고루 분포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상점이 영업을 지속하도록 시는 토지이용계획 규제와 영업권 심사를 통해 토지 용도 변경 및 업종 변경을 규제한다. 특히 암스테르담시 면적 80%는 시공공토지임대제를 적용받는다. 지상권설정계약이 토지이용계획과 연동되어 재건축 형태와 용적률, 건물 용도, 업종, 기능별 토지임대료 책정 방식 등을 더욱더 세밀하게 조율·규제한다. 또 업종별로 반영 일정 거리 이내 주민 수와 동종 업체 수 등을 고려한 영



암스테르담 권역 2016~2022 호텔 입지 분산 전략  
초록색은 신규 개업 가능 입지, 기존 호텔은 점으로 표시  
자료: 암스테르담시, <https://maps.amsterdam.nl/hotels>

업권 발급 기준을 적용한다(Gemeente Amsterdam, 2017b).

시정부는 도시 내 호텔의 추가 개업을 더 이상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를 다양하게 지키기 위해서이다. 신규 호텔은 암스테르담 권역으로 보내 숙박 수요를 분산한다. 시정부는 에어비앤비, 부킹닷컴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호텔과 불법 임대를 추적한다. 불법 호텔이 늘수록 이미 주택난이 심한 도시에서 주민에게 돌아갈 주거 공간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온라인 조사와 고객 위장 잠입 등으로 실상을 파악해 벌금을 부과하며, 영업을 강제 폐쇄한다. 특히 시정부는 에어비앤비와 협약을 맺어 암스테르담에 등록된 주택에 합법 임대 일수를 초과하는 예약 접수를 자동 차단하는 등 빈틈없는 규제 집행에 힘쓴다. 2010년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암스테르담 소재 주택이 500채, 2015년에는 1만 5,000채로 불과 5년 사이 30배 늘어났기 때문에 시는 관련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2017년 10월 1일부터는 개인 주거 공간을 관광객에서 제공하기 원하는 사람은 처음 시작할 때 시에 사전 신고해야 하고, 한 번에 최대 4인까지만 수용 가능하며, 공동주택이거나 임차인인 경우 '소유자협회(VvE)' 또는 집주인의 동의를 증빙해야 하고, 소방 안전 및 소음 차단 등에 대한 조치를 사전에 밝히며, 상응하는 관광

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회임대주택은 관광객에게 임대를 금하고, 텐트 등을 이용한 외부 숙박도 금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연 60일이던 관광객 대상 개인 주거 공간 임대 허용 일수가 연 30일로 줄어든다. 만약 시에 사전 신고 없이 온라인 플랫폼에 집을 내놓으면 시가 최대 6,000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보트(수상) 호텔과 관광객이 지나치게 붐비는 일부 지역은 개인 주택의 관광객 대상 임대를 아예 금한다. 그 외 임대와 합법 임대 허용 일수를 넘어서는 영업은 해당 구 행정부의 사전 조사와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 주민 불쾌 요소 줄이기: 시끄러운 도시 vs. 주민도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주민 불쾌 요소에는 크게 소음과 난동, 쓰레기가 있다. 시는 소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 창문을 열어놓고도 여전히 잠들 수 있는 수준을 '수용 가능(적절)'한 소음 기준으로 설정했다. 새 소음 기준에 따라 실제 소음을 낮추는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렘бран트광장(Rembrandtplein), 레이쎈광장(Leidseplein), 헤라르트다우광장(Gerard Douplein) 주위 카페와 식당 소유자와 함께 개방형 거리 테라스에서 손님들이 만드는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 문화 행사 소음도 예방 대상이다. 공공 공간과 공공 공지 등에서 행사를 열 때 소음 대책을 행사 계획안에 포함시켜야 행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공원 내 대형 행사는 공원별로 1년 최대 3회로 제한된다. 일부 행사는 특별히 최대 소음치 측정, 감축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엔진 달린 교통수단이 도심 소음 공해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이고, 도로 소음이 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을 줄이기 위해 먼저 암스테르담에서 들고나는 재화, 특히 도매업체를 통해 적재하거나 적하하는 상품 및 식자재 운반 시



설계된 경로만 이용하고 되도록 도시수로 망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형 관광버스는 도심 외곽 순환도로 A10 내 진입을 아예 금한다. 대형 관광버스에서 유람선으로 환승하는 위치도 도시 외곽으로 재배치하고 있다. 대형 버스 주차는 필요 시 허가 아래 박물관 광장(뮌세움플레인, Museumplein) 지하 주차장만 이용할 수 있다. 택시 영업 규제는 더 엄격해졌으며, 자가용을 매일 사용하지 않는 주민은 도심 바깥에 주차하도록 독려한다. 그 외 보트 탑승자가 내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배 정박 장소도 재배치하고 있고, 일부 운하는 일방통행만 가능하며, 도시 흥등가(De Wallen)는 유람선 통과를 아예 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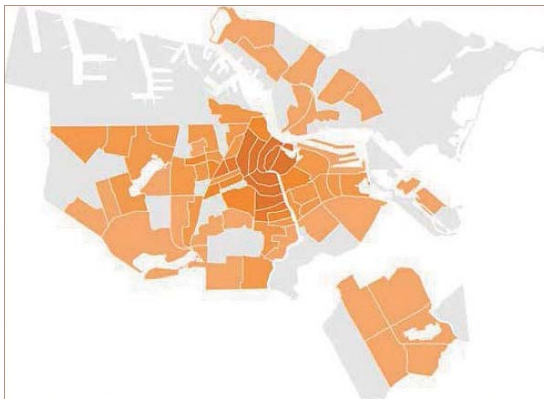
암스테르담시는 불편·불쾌 중양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거리 및 공공장소에서 행인이 소란·난동·술주정 등으로 불편을 야기할 때, 이웃집 또는 거리나 카페·식당에서 나오는 소음이 지나치게 클 때, 사회임대주택 불법 전대나 관광객 대상 개인 주거 공간의 연간 임대 허용 일수 30일 이하 규정 등을 위반하는 주거 관련 사기 행위를 포착할 때, 기타 불편하고 불쾌한 요소가 있을 때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시 전담반이 처리 상황

을 알려준다. 특히 도심은 연중무휴 민원 해결 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신고 접수된 사안은 전담반이 모니터링하고, 소음 감축 정책과 규제 집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도 수집 및 활용한다. 그 외 쓰레기와 기타 소음 공해 줄이기 대중 캠페인을 열고 폰덜공원(Vondel Park)에서의 바비큐 금지와 같은 새 지침도 홍보한다. 특히 주민과 관련 사업체가 함께 공공 공지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쓰레기통을 추가 비치하고, 청소 인력도 늘리고 있다.

### 관광 수요와 관광 수입 분산하기: 소수를 위한 부 vs. 폭넓게 나누는 부

주요 개발 수요 및 관광으로 인한 부를 골고루 나누기 위해 시가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미 폭증하는 개발 수요를 역사 도심 바깥으로 분산시키고, 암스테르담 권역으로 유도한다. 새로운 문화·예술 기관들은 도시 외곽이나 암스테르담 권역 내 다른 시 행정 구역에 배치한다. 시 균형 발전을 위해 암스테르담 니우베스트(Nieuw-West)에 위치한 슬로터르인공호수(Sloterplass)를 도시 수변 백사장과 카페·레스토랑 및 문화 행사장이 어우러진, 암스테르담 권역 전체를 위한 여가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계획을 실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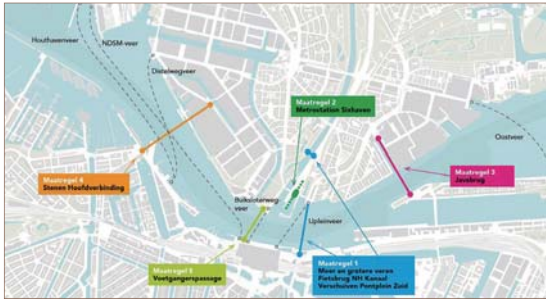
에이(IJ)강을 오가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날로 늘자 시는 ‘에이강의 도약’ 대책을 발표했다. 에이강 남북 연결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자 수용을 높이는 것이 골자이다. 도시수로 망도 확장하고 있다. 니우베스트 지역에는 카약과 보트, 엔진 소리 없는 전자보트 이용 기호가 더 많아진다. 또 도시수로 망과 암스테르담 권역 전체 수로 망의 연결성도 개선한다.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안 성격인 보행, 자전거, 하이킹 경로를 다양하게 소개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발걸음을 암스테르담 권역 전체로 유도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관광객 관련 불쾌 요소에 관한 암스테르담 주민의 인식 지도

혼잡도, 쓰레기, 소음, 숙박업 등 14개 항목에 관한 주민 인식 설문 결과로 동네마다 문제가 '너무 많다'한 의견이 많을수록 색이 진해진다(Hakvoort and Gutiérrez, 2016, p.21).

자료: 암스테르담시, [https://assets.amsterdam.nl/publish/pages/809538/planam-04-2016\\_art2.pdf](https://assets.amsterdam.nl/publish/pages/809538/planam-04-2016_art2.pdf)



에이강의 도약에서 제시한 남북 연결성 강화 다섯 가지 대책

자료: 암스테르담시, <https://assets.amsterdam.nl/publish/pages/867839/kaartsprong.jpg>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금이다. 2018년부터 관광객과 방문객은 암스테르담의 유서 깊은 역사 도심에 접근하려면 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도심의 관광세율은 높이고 다소 덜 붐비는 지역의 관광세율은 낮춘다. 도시 버스 투어도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허가된다. 관광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광객에게 숙소를 제공할 때 방세(식비 제외)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 및 임대소득세와는 별도로 시에 납부한다. 관광세율은 2018년부터 개인이 제공하는 숙소의 경우 시 전역 방세의 6%로 동일하다.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숙소의 경우 중구·서구·남구·동구는 6%, 그 외 지역은 4%로 차등을 두는 등 숙박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Gemeente Amsterdam, 2018b). 매년 시에 관광 관련 소득 신고는 필수이다. 어차피 암스테르담 내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으로 등록된 공간을 에어비앤비 등에 내놓고자 한다면 사전 신고가 필수이기 때문에 신고된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관광세 납부 여부와 숙박 제공으로 인한 소득 신고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다. 특히 관광세로 추산한 매출 규모가 10만 유로를 초과하면 시가 그 납세자를 방문, 면담한다. 암스테르담시는 2018년 예산에 관광세 수입을 총 7,960만 유로(한화 약 1,031억 원)로 추산했다(Gemeente Amsterdam, 2017a).

## 공공 공지는 늘리고 붐비는 지역에 혼잡 줄이기: 혼잡 vs. 쾌적

시정부는 공공 공지를 더 쾌적하게 만들고 더 많이 늘리기 위해 주요 공원을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 특히 램브란트공원(Rembrandt Park), 마틴루터킹공원(Martin Luther King Park), 오스터르공원(Ooster Park) 등 기존 공원이 다양한 방문객의 다양한 공간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다기능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곳곳에 한평공원(포켓공원, postzegelpark)도 추가하고 있다. 또 공공 용지를 허가 없이 상업 용도로 점유해 사용하는 행위도 단속,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영 자전거 대여 업체가 공원 일부를 불법 점유해 영업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혼잡 지역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을 높이는 것도 시의 목표이다. 자전거 불법 주차 단속을 더 엄격히 하고 있으며, 자전거 교통량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로 구조와 시설을 재설계하고 있다.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구역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교통수단 간 조율이 더 쉽도록 교통신호 체계와 도로 설계를 개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이스퍼르광장(Weesperplein) 주변 길을 나



### 니우마르크트광장 개선안

2015년 니우마르크트광장(Nieuw marktplein)에서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광장 일부에 대해 차량 출입을 금하고 자전거 및 스쿠터 주차 공간을 신설했다. 시험 도중 도로 폐쇄가 오히려 교통 혼잡을 더 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은 줄이고 교통신호판과 화분은 추가했다(Nollen and Daamen, 2016, p.27).

자료: 암스테르담시, [https://assets.amsterdam.nl/publish/pages/809538/planam-04-2016\\_art3.pdf](https://assets.amsterdam.nl/publish/pages/809538/planam-04-2016_art3.pdf)

무가 줄 서 있는 보행 및 자전거용 대로로 바뀌었다. 담광장(Damplein) 주변도 설계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자전거 주차 시설도 개선, 확충하고 있다. ‘혁신 유연 주차’라 이름 하여 낮에는 자전거, 밤에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다목적 주차 공간도 설계하고 있다.

### 도시 균형 정책과 기존 제도의 접점

도시 균형 정책의 핵심을 요약하면 장소 중심 접근과 공공 재정 중심 접근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공간 구성 획일화를 방지하는 토지이용계획상 규제와 영업권 심사 및 발급, 공공 공지 및 공공 용지 확충과 개선, 소음 및 소란, 쓰레기 같은 주민 불쾌 요소를 파악하고 줄이는 기술 적용과 규제 집행, 자동차 중심에서 자전거와 보행 중심으로의 도로 설계, 늘어나는 교통량과 개발 수요를 분산시키는 도시계획상 결정 등이 장소 중심 접근이다. 네덜란드의 토지이용계획은 주거 용도도 자가점유용, 민간임대용, 사회임대용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해 규제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은 특히 상업 용도 규제도 엄격하기 때문에 관광객 수 증가로 인해 카페와 가게 등이 우후죽순 늘면서 주거 지역을 무분별하게 잠식해 가는 정도는 다소 약하다. 또 암스테르담 전체 주택 가운데 43.1%를 차지하는 공공성 강한 사회임대주택 재고와 자동 계약연장이 되고 세입자 권리가 더 강하게 보호받는 주거공간 임대차계약법 덕분에 동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의 설움이 다소 덜할 수 있다(OIS, 2018b; Korthals Altes, 2016).

공공 재정 중심 접근으로는 관광객에게서 비롯되는 임대 소득을 평균 6%씩 지방세로 거두는 관광세가 있다. 늘어나는 임대 소득은 더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자본화되기 마련이지만 관광세는 주택거래가 상승세를 실거주용 매입 수요를 위해 미약하나마 다소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관광세와 별도로 암스테르담은 주택공시가격의 0.04139%를 부동산보유세

로 거두고 있다. 보유세율은 낮지만 과세표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90% 이상으로 매우 높다. 또 암스테르담은 시 행정구역의 80%가 공공토지임대제하에 있다. 지상권설정계약갱신이나 신규 체결 시 토지임대료(지상권 가격)를 시가 거두고 있고,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한 계획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비율이 높다(강빛나래, 2018). 지금까지 신규 호텔 허가 시 호텔 객실 수 및 수익에 상응하는 토지 가치를 계산하여 토지임대료를 청구해 왔다. 관광업 번성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시가 일정 부분 세수로 확보, 필요한 공공정책을 펼치는 데 지출한다.

### 암스테르담 사례의 시사점: 함께 살기 위한 노력, 도시 거버넌스 성숙의 기회

암스테르담시는 오버투어리즘을 무엇보다 ‘균형의 파괴’로 진단하고 있다. 도시공간의 번잡함과 조용함의 균형, 도시 내 일과 생활, 여가의 균형, 암스테르담의 치솟는 인기로 인한 장점과 단점의 균형, 번성하는 관광산업에 기대고 있는 경제 성장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방향과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방향 사이의 균형을 시정부는 수년 전부터 심각하게 고민해 왔다. 성공이 밝은 만큼 그 이면의 어두움도 마주했다(Van Ette and Van der Kooij, 2016). 그 결과 암스테르담시는 도시 균형 정책의 핵심 가치로 ‘개방성’, ‘환대’, ‘다양성’, ‘휴먼 스케일’을 꼽고 있다. 즉 무조건 성장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놓치지 않는 ‘책임 있는 성장’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조율된 행동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 가지 요소가 맞물려 성과를 내고 있다. 바로 주민과 사업체 및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해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도시정책이 지향할 가치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정치인의 의지’, 수집한 의견과 객관화된 데이터에 근거해 문제를 정의하고 작은 규모에서부터 해결책을 시도하고

전파하는 ‘행정가의 실행력’,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변화를 관찰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고안하는 ‘공간설계가와 계획가의 기획력’이다. 우리도 늘어나는 관광객이 초래하는 사회, 경제, 환경 변화를 지켜만 볼 것이 아니다. 그 변화를 마주하여 대응하는 과정 자체를 디딤돌 삼아 도시공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도시 관리 거버넌스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도시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도시민과 관광객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1 강빛나래(2018),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동향구 재생. 토지공개념에 따른 ‘포용적 성장’ 가능성”, 「세계의 지속가능 도시재생」, 세종시: 국토연구원(출간 예정).
- 2 김규원(2017), “서울 인구는 991만명? 1017만명?”, 한겨레신문. 10월 17일자, [www.hani.co.kr/arti/society/area/814826.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14826.html).
- 3 이현일(2018), “서울 찾은 외국인 지난해 22%, 300만 ↓ …체류기간·만족도 ↑”, MSN 뉴스, 4월 12일자, [www.msn.com](http://www.msn.com).
- 4 주용태(2018), “오버투어리즘 극복, 새 관광 생태계 조성해야”, 서울&, 8월 30일자, [www.seoulant.com](http://www.seoulant.com).
- 5 Claartje van Ette and Eric van der Kooij(2016), “Managing the flip side of success”, *Plan Amsterdam. City in Balance*, 04, pp. 4-13.
- 6 Gemeente Amsterdam. Interactive Maps > Regional Hotel strategy 2016-2022. <https://maps.amsterdam.nl/hotels>.
- 7 Gemeente Amsterdam(2017a), Begroting 2018, Gemeente Amsterdam.
- 8 Gemeente Amsterdam(2017b), Detailhandelsbeleid 2018-2022, Sterke winkelgebieden in een groeiende stad.
- 9 Gemeente Amsterdam(2018a), Stad in Balans. [www.amsterdam.nl/bestuur-organisatie/volg-beleid/stad-balans/](http://www.amsterdam.nl/bestuur-organisatie/volg-beleid/stad-balans/).
- 10 Gemeente Amsterdam(2018b), Wat zijn de belastingtarieven 2018 van de gemeente Amsterdam? [www.amsterdam.nl/veelgevraagd/?caseid=%7BE35FC750-D5F1-4B57-8061-53BE9CF3FA9D%7D](http://www.amsterdam.nl/veelgevraagd/?caseid=%7BE35FC750-D5F1-4B57-8061-53BE9CF3FA9D%7D).
- 11 Greg Dickinson(2018), “A timeline of overtourism: key moments in the global battle between locals and travelers”, *Telegraph*, May 17. [www.telegraph.co.uk/travel/news/timeline-action-against-overtourism](http://www.telegraph.co.uk/travel/news/timeline-action-against-overtourism).
- 12 Laura Hakvoort and Karla Gutiérrez(2016), “Monitoring the balance”, *Plan Amsterdam, City in Balance*, 04, pp.14-21.
- 13 Odette Nollen and Wies Daamen(2016), “Experiments”, *Plan Amsterdam, City in Balance*, 04, pp.22-29.
- 14 OIS(Onderzoek, Informatie en Statistiek Gemeente Amsterdam), Toerisme in Amsterdam. [www.ois.amsterdam.nl/toerisme](http://www.ois.amsterdam.nl/toerisme).
- 15 OIS(2018a), Kerncijfers Amsterdam 2018, Gemeente Amsterdam. [www.ois.amsterdam.nl/pdf/2018\\_kerncijfers.pdf](http://www.ois.amsterdam.nl/pdf/2018_kerncijfers.pdf).
- 16 OIS(2018b), Wonen in Amsterdam 2017 Woningmarkt. Gemeente Amsterdam. [www.ois.amsterdam.nl/pdf/2018\\_factsheet\\_woningmarkt\\_wia2017.pdf](http://www.ois.amsterdam.nl/pdf/2018_factsheet_woningmarkt_wia2017.pdf).
- 17 Responsible Travel, Overtourism - What is it, and how can we avoid it? [www.responsibletravel.com/copy/what-is-overtourism](http://www.responsibletravel.com/copy/what-is-overtourism).
- 18 Willem K. Korthals Altes(2016), “Forced relocation and Tenancy law in Europe”. *Cities*, 52, pp.79-85.

# 일본의 고령자주택 정책 및 제도 동향\*

변나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 들어가며

한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였다. 이렇게 고령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고령자의 주거와 복지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역 사회 중심으로 서비스와 투자를 강화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그 가운데 시범사업 일환으로 지역 사회 돌봄 (community care) 실현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 재가 지원, 맞춤형 주거 개선을 제시하였다. \*\*

한국보다 20여 년 먼저 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주택, 의료, 개호, 예방, 일상생활 지원이 포괄 지원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고령자가 생활하는 주택 확보를 바탕으로 고령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에서 생활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별 관련 사업소와 긴밀한 제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고령자주택 정책과 제도, 도쿄도의 고령자주택 사업과 관련 지침을 살펴 보고자 한다.

## 일본 고령자주택 정책과 제도

일본은 고령자주택 공급과 생활서비스 지원을 통합 인식하고 고령자의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의 주택 마련, 주거권 보장, 생활 지원을 위해 2001년 ‘고령자 주거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2011년 ‘서비스고령자주택 등록제도’를 신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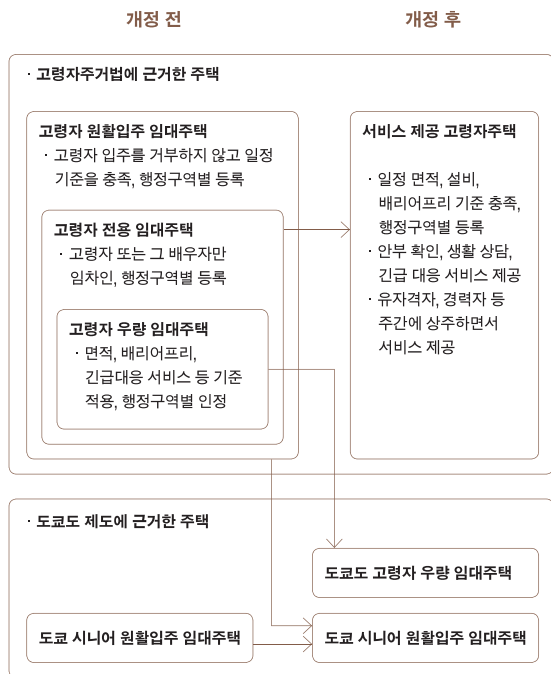
\* 이 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8년 기본과제로 수행 중인 「고령1인가구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개선방안」(변나향·박석환) 연구의 일부를 바탕으로 재정리하였다.

\*\* 보건복지부(2018),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19 복지부 예산 편성”, 8월 27일자 보도자료.



## 고령자 주거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고령자 주거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주거법)은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 공동으로 고령자의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해 결정한 기본 방침이다. 세부 시행 계획은 지자체에서 수립하도록 하였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별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고령자주택과 노인 홈의 증장기 공급 목표, 생활 지원 관련 사업, 유관 시설 정비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이 법은 민간사업자의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여러 가지 임대주택 유형과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후 2011년에는 고령자주거법이 개정되면서 ‘고령자 원활입주 임대주택’,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고령자 우량 임대주택’에서 특정 시설 입주자의 생활개호 지정을 받는 것이 가능하던 제도가 폐지되고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으로 통합하여 등록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 고령자주택 관련 법 개정 내용

자료: 도쿄도(2018), 「고령자 주거안정 확보계획」, p.56.



치요다구 지역 서비스고령자주택 입주자 및 생활협력원 정기식사 모임

##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 등록제도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은 고령자 단독 가구가 증가하고 특별양호양로원 신청자 수가 증가하면서 의료·개호와의 제휴 및 생활지원 서비스를 포함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화해서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은 ①단차가 없는 바닥, 손잡이, 복도 폭 확보 등 고령자가 살기에 적합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구조를 적용하고, ②거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임대차 계약인 경우 거주 권리를 보호받으며, ③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④의료·개호 서비스와 제휴하여 입주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 도쿄도의 고령자주택 사업 및 제도

도쿄도 내에 위치한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은 2015년 기준 9,153호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도쿄도, 2013). 도쿄도 복지보건국이 도내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주자 평균 연령은 82세, 평균 개호 필요도는 1.61, 자립은 응답자 전체의 23%로 나타났다. 입주자 연령이 이전보

\*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관련 내용 번역 및 요약(<http://www.mlit.go.jp>, 검색일: 2018.8.22.)

다 고령화되고 의료·개호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 개호 제휴 현황은 긴급 시 대응에 협력하는 경우가 많아 긴밀한 제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도쿄도는 의료·개호 연계형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 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주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후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의 의료·개호 제휴 가이드라인(2015)’을 수립하였고, 이 가이드라인 방향을 반영하여 같은 해 ‘생활지원서비스 제공 지침(2009)’을 개정하였다.

### 의료·개호 연계형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 모델 사업

도쿄도 복지보건국 고령사회대책부와 도시정비국 주택정책추진부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개호 연계형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고령자의 의료 및 개호 수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개호 연계 서비스를 포함하는 주택 보급을 위해 병설사업소 정비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사업 내용은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에서 주택사업자, 병설사업자(개호계 사업소, 의료계 사업소), 입주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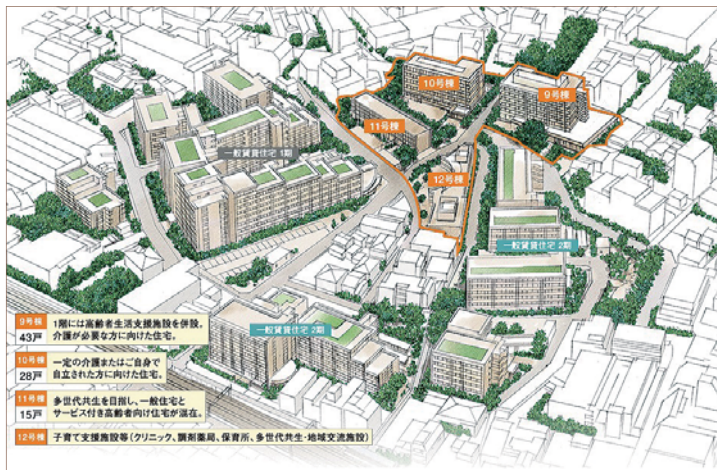
령자), 이외 관계자(방문개호, 진료소, 병원 등)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복지보건국은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의 의료 개호 제휴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사업 시행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도쿄도내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 현황, 의료·개호 제휴 시 전제 조건, 입지, 인력 배치, 수단에 관한 사항, 부록(시범모델, 의료·개호 제휴 시 체크리스트)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의 의료 개호 제휴 가이드라인

(サービス付き高齢者向け住宅における医療・介護連携のガイドライン)

- **가이드라인 개요**  
가이드라인의 목적, 용어 정의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 제도 및 특징
- **도쿄도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 현황**  
도내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 현황  
의료·개호 제휴의 필요성
-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의 의료 개호 제휴의 주요 사항**  
의료 개호 제휴의 전제 조건  
입지 및 건물 구조  
인력 배치  
제휴 수단  
의료·개호 제휴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서비스제공고령자주택 시범사업(제8호) 사례, 코샤하임 지토세가라스야마(コーシャハイム千歳烏山)

자료: [http://www.tl-sls.co.jp/kousya\\_karasuyama/machi/index.html](http://www.tl-sls.co.jp/kousya_karasuyama/machi/index.html)(검색일: 2018.8.22.)



## 고령자주택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지침

2009년에 수립된 고령자주택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지침은 적절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주택 보급과 함께 고령자가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주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생활지원 서비스 정의, 주택 및 서비스 사업자 역할과 책임, 서비스 제공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의 의료·개호 제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같은 해 의료·개호 제휴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생활지원 서비스’는 고령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로, 개호보험 적용 이외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생활지원 서비스에는 긴급한 상황 대응, 안부 확인을 통한 고령자의 상황 파악, 생활 상담, 식사 제공, 외출 시 동행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긴급 시 대응, 상황 파악, 생활 상담은 ‘기본 서비스’에 해당한다. 특히 고령자의 주체적인 생활에 대하여 서비스 사업자는 사업 운영 시 ‘입주자(고령자) 개인의 존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서비스나 케어 매니저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음’, 계약 및 변경 사항과 관련하여 ‘입주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고령자주택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지침**  
(高齢者向け住宅における生活支援サービス提供のあり方指針)

### 1. 기본 사항

목적, 지침의 정의, 사업 운영의 유의점, 특정 시설의 입주자 생활 개호를 지정받지 않는 고령자주택과 지정받는 고령자주택의 의료·개호 연계 시 유의점, 주택사업자의 책무, 생활지원 서비스사업자의 책무

### 2.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기본서비스 실시자의 유의점, 기본서비스 이외의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시 유의점, 서비스 제공 직원의 배치와 기밀 유지, 공용 부분 위생관리, 예산관리, 비상 재해 대책

### 3. 계약에 관한 사항

생활지원 서비스 계약 시 유의점, 생활지원 서비스 내용 및 계약에 대한 상세 설명

### 4. 불만 사항 해결 및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

입주자 및 입주자 가족의 불만 사항 해결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생활지원 서비스 사업자의 처리 체제 정비, 입주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손해 배상 등

### 5. 개인정보 보호

입주자, 신원 인수인 등 개인정보 취급에 대하여 관련 법률 및 조례 적용

## 나오며

일본은 2000년대 초반에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고 고령자의 주택 확보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 제도는 당시 고령자가 증가하고 2006년부터 유료 노인 홈 신설 규제로 고령자 계층의 주택과 복지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최근 도쿄도에서 추진된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노후화된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을 정비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지역 내 의료사업소, 개호사업소의 서비스 제공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 체제로 구축되었다. 2018년부터는 의료·개호 연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으며, 소규모 다기능 개호도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주택 정책과 제도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음에도 국내보다 앞서 시도되었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하고 있다. 한국은 고령자주거지원 정책과 효과 점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과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현 시점에서 일본의 관련 법 개정과 도쿄도의 시범사업 추진 사례는 주택 확보 문제와 복지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사회에서의 생활 지원을 위한 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 선·면 단위 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과 기대 효과

김용희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사무관

근현대 문화유산은 지역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지역 재생의 원천이 되는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임에도 역사문화 관점에서 문화재로서 보존하여야 할 가치 판단을 하기 이전에 각종 도시 개발 논리에 의해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 또는 멸실되어 가고 있다. 근현대 문화유산은 개항에서부터 일제강점기, 광복, 한국전쟁, 산업화 시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 등 역사를 담고 있다. 문화재라 하면 전통 관점에서 형성된 전통 문화유산을 문화재로 인식하고 보존 및 계승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반면에 우리 삶의 흔적, 기억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문화재로서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은 편이다. 최근 들어 계속되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철거 논란이 발생하면서 언론,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그동안 방치돼 온 근대 건축물을 활용하여 구도심의 재생 자원으로 이용하려는 도시 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자체의 도시 재생 사업은 문화재로서 가치 보존과 활용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리노베이션을 통해 이용에 가까운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어 역사문화자원의 진정성, 정체성, 역사성이 훼손되고 있다. 근현대 문화유산은 전통과 현대, 미래를 이어 주는 역사문화의 산물로서 삶의 흔적을 오롯이 담고 있는 역사의 거울이기 때문에 원형 유지를 통해 본래의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재는 역사 현장을 올바르게 보고 배우는 교훈 가치를 볼 때도 매우 중요하다.

문화재청은 2001년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이래 개발로 철거되어 사라져 가는 근현대 문화유산 보

호를 위해 ‘점(點)’ 단위 보호 중심의 등록문화재 보존과 활용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종교·업무·교육·주거·전쟁·문화·의료·산업·공공·인물기념·사업시설 등 용도별 개별 등록문화재 현황은 769건으로, 문화재로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대상에 비해 문화재 등록이 저조한 상황이다. 문화재청은 2004년부터 등록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해 분야별 목록화를 실시하고 있다. 목록화 사업은 대부분 개별 건축물·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2017년까지 7,268건의 개별 건축물·시설물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앞으로도 분야별 목록화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점 단위 보호 중심의 등록문화재 제도는 등록 대상을 소극적·제한적으로 적용하여 개별 건조물에 대한 상대적 가치 평가를 통해 등록문화재로 등록함으로써 집단적으로 형성된 근대 건조물군에 대한 보호조치에는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생활 등 다양한 생활사적 가치를 오롯이 담고 있는 역사문화공간에 대한 입체적·맥락적 보호를 위한 새로운 ‘선(線)·면(面)’ 단위 등록제도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역사문화공간은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이 새겨진 장소이며, 회로애락과 삶의 체취가 커져이 쌓여 있는 일상생활의 공간으로서 생활사적 재조명이 필요한 곳이다. 그리고 역사문화공간은 광복 이후 한국전쟁을 거쳐 현재까지 민초들의 생생한 삶의 흔적과 기억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사초(史草)로서 중요한 유산이다.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역사문화공간을 살아있는 ‘노천의 생활사 박물관’으로 재생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를 잇는 유산으로 보존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 역사문화자원 보존·활용 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 전환은 선·면 단위 등록제도의 가장 큰 추진 원동력이 되었다. 지자체에서 실시한 선·면 단위 등록제도 정책 현장의 설명회는 지역 주민의 높은 관심과 성숙된 참여 의식을 보여 주었으며, 해당 지역이 문화재로서 등록되는 데 대한 자부심 또한 크게 갖는 등 제도 시행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었다. 지역 주민이 문화재를 스스로 보존하고 활용하려는 적극 참여와 의지는 앞으로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호제도를 틀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역 주민이 생활 속 문화재를 활용하고 향유하며, 지역주민 공동체가 누림·나눔·상생의 사회 공유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문화재 보존 철학을 정립해 나가고자 한다.

문화재청은 2018년에 지역 주민의 직접 참여 속에 지자체의 문화재 보호 의지를 기반으로 점 단위 보호제도(개별 문화재=나무)를 넘어 새롭게 선·면 단위 보호제도(건조물군=숲)를 도입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사업은 역사문화자원을 맥락적·입체적 보존 및 활용(역사문화공간 재생=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면 단위 보호제도를 통해 ‘문화재가 개발의 걸림돌’이라는 규제 중심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생활 문화재로서 향유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문화재와 지역이 공존하는 새로운 제도로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의 ‘역사거리 조성사업(Main Street Program)’ 등 해외 우수 사례는 역사문화 보존 맥락에서 지역 재생을 성공시킨 정책 사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지역별·유형별 특성에 맞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활용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 지역을 발굴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 선·면 단위 등록문화재 제도의 주요 내용

### 선·면 단위 등록문화재 제도의 특징

선·면 단위 등록문화재는 집적된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의 잠재된 본래 가치를 재생하고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시행하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새로운 보호 제도이자 정책이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2001년 7월 1일 시행 당시 건축물과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를 보존·활용하기 위해 운영되었지만 도시화와 산업화 등으로 급격한 훼손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2017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 등록 대상을 같은 법 제53조의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등록문화재의 등록 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가운데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효율 높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등록문화재는 엄격한 원형 보존 원칙의 지정문화재 제도에 비해 내부를 현재의 사용 용도에 따라 활용이 자유롭게 했다는 점에서 유연함을 가진다. 지정문화재 제도는 해당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문화재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대한 현상 변경 행위에 대한 규제가 있는 반면에 선·면 단위 등록문화재 제도는 등록 구역 내 개별 등

록문화재를 제외한 건축문화자산과 일반 건축물·시설물의 현상 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않는다. 내부 용도 변경에 대한 행위 규제 또한 없어 문화재의 보존·활용 측면에서 완화된 규제로 공간에 대한 활용성과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선·면 단위 등록문화재의 등록 기준과 과정

선·면 단위 등록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한 등록 기준을 아우르는 면적(공간) 개념의 등록문화재 유형 가운데 하나로, 지정·등록문화재와 건축문화자산 등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역사문화공간을 보존과 활용을 위해 등록 구역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선·면 단위의 문화재 등록 유형에는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지역의 핵심 상징 공간으로서 지역의 역사문화배경이 되고 당대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역사거리, 당대의 경관 또는 생활 전통 등을 잘 간직하고 있는 역사마을, 지정·등록문화재, 향토유산 등 역사문화자원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역사문화지구, 근대산업사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산업유산지역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선·면 단위의 다양한 등록 유형을 발굴하여 역사문화자원을 입체적·맥락적으로 보존하고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제도의 목적이 있다.

선·면 단위 등록문화재 등록 기준의 경우 세 가지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하고자 하는 등록 구역이 지정·등록문화재, 향토유산, 건축문화자산 등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지역의 핵심 공간으로서 보존과 활용 가치가 높은 곳이어야 한다. 둘째 면적으로 보호하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등록하고자 하는 구역 내 건물과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 지역 공동체 참여와 지방자치단체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셋째 등록 구역 내 근대 건축물 가운데 원형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개별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가능하여야 한다. 개별 등록문화재를 거점으로 주변의

역사문화자원을 긴밀하게 연계 보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선·면 단위 등록문화재 등록 절차는 기존의 개별 등록문화재와 동일하지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등록 구역 내 개인 소유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집단 동의를 얻어 신청해야 한다. 지역 공동체의 동의가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재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에게 등록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문화재위원회 등록 타당성 심의를 거쳐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공고)를 한다. 문화재위원회 등록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되면 관보에 등록문화재로 고시한다. 최종 등록된 선·면 등록문화재는 문화재 보수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군산, 목포, 영주 선·면 단위 등록문화재 첫 등록

앞에서 언급했듯 최근 지자체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 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리모델링을 통한 이용 수준의 재생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치 있는 근대 건축물의 내·외관 원형이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해 본래 가치, 즉 원형 유지를 통해 진정성과 역사성을 보존하려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면 단위 등록문화재 제도와 병행하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시범사업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2018년 1월 16일 선·면 단위 등록문화재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문화재·관광·재생 등 분야별 관계 전문가와 풍부한 근대문화유산을 보유한 주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각종 재생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보완 사항과 예상되는 갈등과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점검한 후 2018년 1월 26일 선·면 등록문화재 발굴을 위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를 진행하였다. 지난 2월 6일에는 문화재청과 국토교통부가 공동설명회를 개최하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시범사업과 도시 재생 뉴딜사업의 부처 협업 사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하였다. 또 지난 3월에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과 부처 협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역 재생 특화 사업으로 도시 재생 뉴딜 로드맵에 반영하였다.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문화재, 역사, 관광, 재생, 활용, 건축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One-Stop 자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등록 신청 대상 지역을 문화재적 가치(역사성, 진정성, 장소성 등), 문화재의 활용 방안,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사전 자문을 시행하였다. 2018년 4월 공모 접수한 총 11개 대상 지역에 대해 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선·면 단위 등록문화재로서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심사를 거쳐 부산, 군산, 목포, 영주의 4개 지역을 조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 선정 절차

서면심사(조사 대상 선정) → 현장조사(등록 조사 및 자문) → 종합심사(최종 선정)

#### 선정 기준

지정 등록 문화재 등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지역의 핵심 상징 공간으로서 역사거리, 역사마을, 역사문화지구 등 「선(線)·면(面)」 단위 입체적 보존·활용 가치가 높아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가능한 지역

2018년 5월에는 부산 피란 생활 역사문화마을,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에 대한 관계 전문가 등록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 제6차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 분과 등록 타당성 검토 결과 군산·영주·목포 대상 지역을 문화재로 등록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부산



의 대상 지역은 문화재 대상 가치 발굴 심화 조사가 필요하여 등록 보류되었다. 군산, 목포, 영주 대상 지역은 30일 동안의 문화재 등록 예고와 제7차 문화재 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심의를 거쳐 2018년 8월 6일 등록 고시함으로써 선·면 단위 등록문화재 제도 시행의 첫 등록 지역이 되었다.

#### •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등록문화재 제71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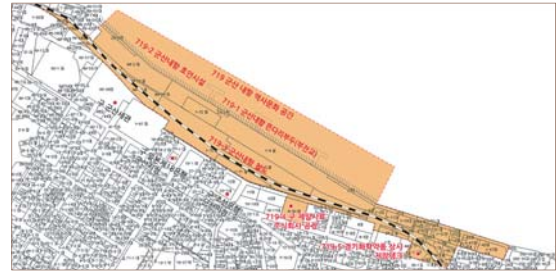
- 문화재 가치: 1899년 개항 역사와 일제강점기 쌀 수탈 향으로서 군산항의 성격과 기능을 보여주는 내항 철로, 뜬다리부두, 각종 창고 등 상징 시설물과 수산업 시설 및 산업화 시설이 공존하는 역사 공간으로 보존과 활용 가치가 높다.
- 등록 현황: 등록 구역은 15만 2,476m<sup>2</sup>, 59개 필지이다. 개별 등록문화재는 군산 내항 뜬다리 부두(부잔교), 군산 내항 호안시설, 군산 내항 철도, 군산 옛 제일사료주식회사 공장, 군산 경기화학약품상사 저장탱크 5개소이다. 기타 건축문화자산은 3개소가 있다.

#### •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등록문화재 제71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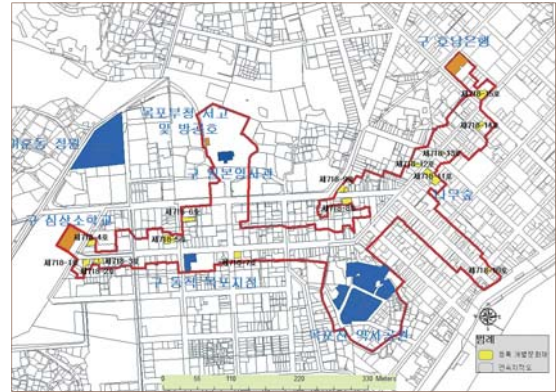
- 문화재 가치: 1987년 개항 이후 목포의 근대항만도시로 태어난 목포진 역사 공간, 근대도시계획 변천과 경제생활사를 엿볼 수 있는 핵심 공간이다.
- 등록 현황: 등록 구역은 11만 4,038m<sup>2</sup>, 602개 필지이다. 개별 등록문화재는 일본식 가옥 4개소, 일본식 상가주택 5개소, 옛 목포부립병원 관사, 옛 목포 일본기독교교회, 근대상가주택, 옛 동아부인상회 목포지점, 붉은 벽돌창고, 옛 목포 화신 연쇄점 15개소이다. 기타 건축문화자산은 123개소가 있다.

#### •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등록문화재 제720호)

- 문화재 가치: 근대 시기 영주역 철도교통 발달로 철도관사, 정미소, 이발관, 근대한옥, 교회 등 영주 지역의 발전과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핵심 공간이다.
- 등록 현황: 등록 구역은 2만 6,377m<sup>2</sup>, 153개 필지이다. 개별 등록문화재는 옛 영주역 5호 관사, 옛 영주역 7호 관사, 영주 영주동 근대한옥, 영주 영광이발관, 영주 풍국정미소, 영주 제일교회 6개소이다. 기타 건축문화자산은 18개소가 있다.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구역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구역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문화재 등록구역도



등록문화재 제719-1호 군산 내항 뜀다리 부두



등록문화재 제718-14호 목포 해안로 붉은 벽돌창고



등록문화재 제720-1호 구 영주역 5호 관사

자료: 문화재청(2018),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8월 8일자 보도자료.

### 선·면 단위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을 통한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선·면 단위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3개소에 대해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2019년부터 종합정비계획과 기초학술조사 등 문화재 보존·활용 인프라 조성을 시작하여 단계별·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의 기본 방향은 문화재 진정성을 회복하여 역사문화공간의 입체적·맥락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지역별 특화된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것이다.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은 개항-수탈항-산업화 항만역사 공간으로 재생하여 군산 내항의 역사, 산업사 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근대 역사 및 경제생활사 체험 공간으로 재생하여 목포의 역사, 경제생활사 체험을 위한 노천박물관으로 다듬어진다.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에는 근대 생활사의 다양한 체험 공간으로 재생하여 철도-근대한옥-정미소-이발관 체험을 위한 시설을 조성한다. 문화재청과 시범사업 지역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들 등록문화재에 대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삶을 잇는 매력적인 역사문화공간으로 재생하여 문화재와 지역이 공존하는 생활 속 문화재로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지역 관광명소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2018년에 지역별·유형별 적용 활용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모델 개발이 완료되면 앞으로 선·면 단위 등록문화재를 추가로 발굴 및 등록할 계획이다. 이들 등록문화재 3개소는 도시재생 뉴딜 부처 협업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어 사업 연계 시 재생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2018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추진 경과

신치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장

## 한옥공모전 기획 배경과 목적

2011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올해 8 회째를 맞이하였다. 공모전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하는 한옥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전통 건축인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가 주관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 공사가 후원하는 공모전은 ‘한옥 준공’, ‘한옥 사진’, ‘한옥 계획’ 총 3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 한옥공모전의 주제를 살펴보면 2011 년 ‘NEO-Hanok Vision: 진화하는 한옥’을 시작으로 2012년 ‘내가 살고 싶은 집, 한옥’, 2013년 ‘한옥의 가능성’, 2014년 ‘누구나 누리는 한옥’, 2015년 ‘상상 그 이상의 한옥, 한옥은 ( )이다’, 2016년 ‘도심 속 한옥’, 2017년 ‘한옥의 현대화(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1~2인 가구대상 집합주거)’까지 새로운 한옥의 확장 성과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왔다.

##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주제와 작품 접수 수

연도	공모 주제	준공 부문	계획 부문	사진 부문
2011	(계획) Neo-Hanok Vision: 진화하는 한옥	18	152	-
2012	(계획) 함께사는 한옥(공동주택) (사진) 한옥의 일상	6	104	316
2013	(계획) 한옥의 가능성 (사진) 한옥의 가능성	9	129	488
2014	(계획) 누구나 누리는 한옥 (사진) 자유주제	4	68	790
2015	(계획) 상상 그 이상의 한옥 (사진) 자유주제	10	57	506
2016	(계획) 도심 속 한옥 (사진) 자유주제	9	53	692
2017	(계획) 한옥의 현대화(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1~2인 가구 대상 집합주거) (사진) 자유주제	17	53	595

## 한옥공모전 진행 과정

2018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운영·심사위원회는 전통건축과 현대건축 분야의 학계 및 건축사, 사진부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출품작들이 다양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운영위원회는 한 해의 주제를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운영방안 전반에 대한 주요 방향을 설정한다.

올해의 주제는 ‘한옥, 길에서 만나다’가 제시되었다. 그동안 제시된 한옥의 다양한 가능성과 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고, 참가자들에게 정통성과 순수함에 대한 강박이 없이 자율적으로 진화한 한옥의 현대형을 찾아볼 것을 요청한 것이다.

2018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의 공모는 2018년 6월 11일 공고되어, 참가등록과 작품 접수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심사는 8월 한 달간 사진, 준공, 계획 각 부문별로 진행되었다.



2018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포스터

사진 부문의 경우 하나의 주제를 세 장의 사진으로 구성한 연작을 1인당 1개 작품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일반인 부문 157개 작품(연작, 총 471장, 157명), 청소년 부문 36개 작품(13명) 총 193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건축사진 분야의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경 작가(프리랜서), 윤준환 작가(한국건축사진가회 회장)와 전봉희 교수(서울대학교, 운영·심사위원장)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최종 수상작 33개 작품(일반 22개 작품, 청소년 11개 작품)을 선정하였다. 준공 부문에서는 12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9개 작품을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3개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계획 부문은 28개 작품이 접수되었고,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 대상작 15개 작품을 선정한 후 모형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심사위원으로는 전봉희 교수, 김석순 소장(아름터건축사사무소), 전보림 소장(아이디알건축사사무소, 2017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수상자), 이경석 건축문화경관과장(국토교통부), 신치후 국가한옥센터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참여하여 전통과 현대 건축, 건축과 조경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심사를 진행하였다.

준공 부문과 계획 부문의 심사는 디자인 및 시공 품질 등 한옥 건축물의 종합적 완성도와 함께 주변 환경과의 조화에 주요점을 두었으며, 사진 부문에서는 한옥에 대한 창조적 시각을 심사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하는 ‘한옥문화박람회’ 행사와 연계하여 전시회를 가진다. 계획 부문 수상작 8점, 준공 부문 수상작 3점, 사진 부문 수상작 33개 작품 모두 43개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 수상작 소개

준공 부문의 최고상인 2018 올해의 한옥대상작으로 선정된 수원시 '장안사랑채(김미진, 이소건축사사무소)'는 도심내 가로변에 면한 공공공간 겸 임대 상업 공간이라는 점에서 주제와 부합하고, 작품의 완성도도 높은 한옥이다. 가장 단순한 가로로 긴 일자형의 한옥을 높이에서 변화를 주고 폭을 달리하면서 공간에 변화를 주었다. 또 이전에 있던 옛길의 흔적을 살려 진입부를 만들고 주변의 한옥체험관, 한옥기술전시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춰 구성한 점이 우수하였다. 올해의 한옥상 두 작품은 서울 은평 한옥마을에 지어진 생활 한옥인 '함경루'와 종로구의 체험 한옥인 '상촌재'가 선정되었다. 함경루는 工자형 평면을 활용하여 기능 측면과 조형 측면 모두에서 현대 생활에 적합한 한옥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좁은 땅에 다양한 마당을 만들어 낸 점 또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촌재는 기존 한옥의 일부를 보존하면서 도시 한옥을 재해석하여, 증축 부분을 통해 시민들에게 한옥의 구성요소인 온돌·마루·부엌·마당을 선보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구성한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계획 부문의 대상작으로는 도심부 가로변에 자리한 소규모 필지에 5층 규모의 단일 매스로 구성된 '적층한옥(우종성)'이 선정되었다. 적층한옥은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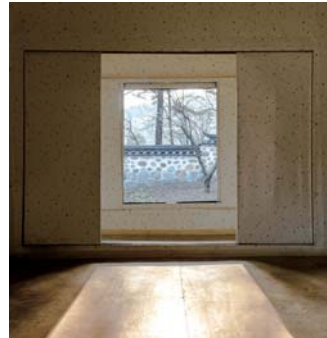


사진 부문 대상을 수상한 '한옥 속의 풍경'

차를 이용해 저층부에 구성한 임대 공간과 상층부에 3층으로 쌓은 게스트하우스용 한옥 부분의 연결이 우수한 작품이다.

사진 부문 대상은 올해도 일반부에서 수상하였는데, 현충사에서 촬영한 '한옥 속의 풍경(이광수)'이 선정되었다.

준공 부문 3개, 계획 부문 18개, 사진 부문 33개 총 54개의 수상작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홈페이지 <http://www.hanokdb.kr/main/competition/index.do>



준공 부문 올해의 한옥대상 '장안사랑채'



계획 부문 대상 수상작 '적층한옥'

# 베를린, 제2회 도시 만들기 축제 개최

신희완  
프리랜서 도시계획가

## 제2회를 맞이한 베를린의 도시 만들기 축제

2014년 베를린에서는 공원으로 이용되던 템펠호프(Tempelhof) 이전 공항 부지를 개발하려던 주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주민 투표를 통해 무산시킨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도시에서 시민이 도시공간을 새롭게 생각하고, 스스로 변화시키는 상황이 늘면서, 도시공간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인 장소로 자리 잡고 있다. 베를린 도시 만들기 축제(Make City Festival)는 이렇게 시민이 만들어 나가는 도시를 위한 축제이자, 그러한 지식을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2015년 첫 축제에서는 ‘건축 그리고 다르게 만들기’를 위한 축제(Das Festival für Architektur & Andersmachen)’라는 큰 주제 아래 ‘도시 공유재(Urbanes Gemeingut)’, ‘함께 디자인하다(Gemeinsam gestalten)’, ‘새로운 업무 그리고 거주공간(Neues Arbeiten & Wohnen)’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17일간 베를린의 현대 도시건축 이슈와 이와 연관된 해외 사례를 둘러보는 축제로 진행되었다.\*

이후 3년간의 준비 끝에 두 번째 도시 만들기 축제가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18일간 진행되었다. 2018년 행사에서는 ‘도시를 새롭게 섞다(Berlin Remixing/ Stadt Neu Gemischt)’란 큰 주제와 ‘건축/공간(Architektur/Raum)’, ‘구조/과정(Strukturen/Prozesse)’, ‘도시/자연(Urban/Natur)’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었다. 준비 기간이 길었고, 규모가 커진 만큼 베를린의 사례뿐만 아니라, 이전 축제보다 더 많은 전 세계의 사례를 둘러볼 수 있던 축제로 준비되었다.\*\*



도시 만들기 축제의 첫날 체코문화원에서 토론회 ‘사람을 위한 도시(Cities for People)’ 행사에서 발표 중인 베를린 프리드리히샤인-크로이츠베르크 지역구 녹색당 의원인 안트예 카펙(Antje Kapek)의 모습

### 축제의 스폰서와 파트너

“오늘날 도시개발에 있어 유일하게 현명한 방식은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한 도시의 정치와 행정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도시 만들기 축제의 설립자 프란체스카 퍼거슨(Francesca Ferguson)은 한 인터뷰에서 함께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2015년 도시 만들기 축제는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의 지원을 중심으로 기업 스폰서, 여러 도시·건축·문화 관련 기관과 단체, 11곳의 미디어 파트너, 축제 프로그램을 함께 꾸린 85곳의 파트너와 함께 축제를 운영하였다. 2018년에도 베를린 주정부, 네덜란드 창조 산업 펀드, 베를린 로또 재단의 지원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기관과 7곳의 미디어 파트너, 축제 프로그램의 44곳의 파트너가 함께 축제를 운영하였다. 숫자상으로는 지난 축제에 비해 파트너 규모가 줄어 프로그램도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개별 파트너가 아닌 각 기관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늘어났기에, 프로그램 자체는 더 풍부해졌다.

특히 주베를린 체코 문화원은 각종 토론회를 위한 장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체코와 프라하의 도시건축에 대한 프로그램과 각종 관련 인사를 초청하는 역할을 하였다. 베를린 주정부는 도시 만들기 축제라는 민간 축제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동시에 베를린 지역구 의원이 각종 토론회 등에 직접 참여하여 소속 정당과 주정부의 문제 인식, 계획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지역 의원이 직접 지역 투어에 참여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지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축제에 참여하며, 참가자와 축제 관계자 등이 가지고 있는 베를린과 도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축제

‘도시를 새롭게 섞다’라는 주제는 다양한 도시에서 도시 설계의 기본처럼 여겨지는 소셜 믹스(social mix), 그리고 베를린이라는 도시만의 특징인 베를리너 믹스(Berliner Mischung)\*\*\*\*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도시계획가, 건축가뿐만 아니라 정치가, 예술가, 부동산 투자자, 사



레퓨지오(REFUGIO) 공유 주택 지상층에 자리 잡은 레퓨지오 카페

회활동가, 재난 관련 전문가 등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수도 2015년 행사 때보다 조금 더 늘었다.

베를린에서 지난 수년간 가장 큰 문제였던 주거난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주거건축, 정책, 새로운 부동산 모델 등의 대안이 소개되었다. 이는 2015년에 이어 주요한 주제이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진 주제였다. 축제 중에 소개된 다양한 건축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거난 해결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부동산 정책과 임대주택 정책 등이라는 결론으로 수렴하였다.

그 외에 2018년에 눈에 띈 프로그램은 2011년 시리아 내전 시작 이후, 2015년 급증한 독일 내 난민 중 베를린에 자리 잡은 공유주택 프로젝트인 레퓨지오(REFUGIO)\*\*\*가 어떻게 지역 사회에 자리 잡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 소개해준 투어 프로그램과 토론회 그리고 난민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를린 도시 투어 프로그램이었다.

- \* 도시 만들기 축제 2015년 홈페이지(영어)(<http://makecity.berlin/2015/?lang=en>)
- \*\* 도시 만들기 축제 2018년 홈페이지(영어)(<http://makecity.berlin/en/>)
- \*\*\* 도시 만들기 축제 주최자 프란체스카 퍼거슨 인터뷰(독일어)(<https://goo.gl/mRFQSV>)
- \*\*\*\* 신회완(2017), “베를린 도시 블록의 소셜 믹스 -티어가르텐 블록 사례를 중심으로”, 『건축과 도시공간』 v.27 참조.
- \*\*\*\*\* 레퓨지오 베를린 홈페이지(<http://www.refugio.berlin/>)

## 일본, 건축물 안전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건축기준법 개정

[http://www.mlit.go.jp/report/press/house05\\_hh\\_000733.html](http://www.mlit.go.jp/report/press/house05_hh_000733.html)

일본 국토교통성은 화재에 대한 건축물 안전과 빈집 활용 제고를 골자로 하는 건축기준법의 개정안이 6월 말 국회 의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내용에 대한 지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성은 ▲대규모 화재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존 건축물 재고에 대한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목조건축물을 둘러싼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였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 건축물·시가지 안전성 확보

주택 140여 채를 전소시켰던 2016년 이토이가와(糸魚川) 화재, 2017년 미요시(三芳) 물류창고 화재 등이 잇따르면서 화재에 대한 건축물 안전 확보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먼저 유지보전계획 작성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이번 개정을 통해 확대(대규모 창고 등 포함)하였다. 부적격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해 해당 행정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 또한 마련하였다. 방재지역·준방재지역 내 연소방지능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10% 완화 적용한다.

### 단독주택 등의 용도변경 제한 완화

빈집을 복지시설, 상업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 없도록 하고, 절차를 합리화하여 활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연면적 200㎡ 미만,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 건축물을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의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내화건축물 등으로 조성할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용도변경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 규모 또한 100㎡에서 200㎡로 완화하였다.

### 목조 건축물과 관련된 규제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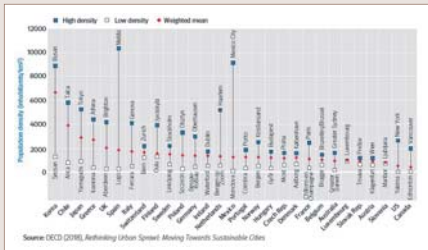
중층 규모의 목조공동주택 등 목조 건축물의 정비와 방화를 위한 개수, 리모델링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한이 완화된다. 먼저 목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의무화 대상을 건축물 높이 13m, 처마 높이 9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서 건축물 높이 16m 초과, 층수 4층 이상 건축물로 변경한다. 이러한 규제를 적용받는 목재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내화구조 외에 다른 구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또한 높은 연소방지능능이 요구되는 방화지역·준방화지역 내 목조 건축물도 내부 벽과 기둥 등에 목재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재검토하였다.

## OECD, 도시 스프롤 현상 진단과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발표

<https://cities-today.com/urban-sprawl-triples-public-service-costs-says-oecd/>

<http://www.oecd.org/publications/rethinking-urban-sprawl-9789264189881-en.htm>

<http://oecdinsights.org/2018/07/20/steering-urban-sprawl/>



29개 조사 대상 국가의 도시지역 평균 인구밀도(2014년 기준)

자료: OECD Insights 홈페이지(<http://oecdinsights.org/2018/07/20/steering-urban-sprawl/>); OECD(2018), Rethinking Urban Sprawl: Moving Towards Sustainable Cities.

OECD가 세계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시 스프롤 현상을 진단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보고서 <Rethinking Urban Sprawl: Moving Towards Sustainable Cities>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도시 스프롤 현상이 교통 혼잡,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대기오염,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의 부족과 같은 도시 문제를 촉발하며, 특히 이용자당 공공서비스 비용을 약 세 배 증가시킨다고 지적하였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도시 스프롤 현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분석하는 지표를 마련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고 그 목적을 밝혔다.

실제로 도시에서 스프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시지역의 평균 인구밀도와 변화 추이, 파편성(Fragmentation), 다핵성(Polycentricity), 분산성(Decentralisation) 등 7개의 지표를 선정하고 29개 국가, 1156개 도시를 대상으로 1990년, 2000년, 2014년 세 번의 시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대상 국가에서 도시가 파편화되고 인구밀도가 낮은 교외로 주민들이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4개 국가에서 평균 도시 인구밀도가 줄어든 반면, 18개 나라에서는 도시지역의 파편화가 심화되고 매우 낮은 인구밀도를 보이는 지역을 포함한 도시의 토지 점유율이 20개 나라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보고서에서는 도시 스프롤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 ▲건축물 높이 규제, 개발제한구역과 그린벨트구역 등 도시지역 토지 이용과 관련된 엄격한 규제, ▲낮은 자동차세와 유지비, ▲대기오염, 기후변화 등 자동차 이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하지 않는 기존의 정책 등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OECD는 토지 이용과 관련된 세금 등 제도를 개선하여 콤팩트시티 조성을 유도하고,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되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이동수단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OECD 보고서에 제안된 도시 스프롤 대응 방안

구분	내용
토지 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인구밀도 규제의 완화</li> <li>·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구역 설정에 대한 재검토</li> <li>· 교외 지역 개발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등 폐지</li> <li>· 토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건물 부동산 재산세보다 높게 조정</li> <li>· 스프롤 확산 지역의 개발자에게 인프라 조성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 적용</li> </ul>
자동차 의존도 축소와 친환경 이동수단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행 거리가 길수록 많은 도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시스템 도입</li> <li>· 건축 시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 최소 면적기준 폐지</li> <li>· 자동차 이용이 가져오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반영한 자동차세 부과</li> <li>· 대중교통, 자전거도로, 보도 등 지속가능한 이동수단 인프라에 대한 투자</li> </ul>

자료: OECD(2018), "Rethinking Urban Sprawl: Moving Towards Sustainable Cities-Policy highlights"를 참고하여 재작성(<http://www.oecd.org/publications/rethinking-urban-sprawl-9789264189881-en.htm>)

## 런던, 환경 친화적인 주차요금 부과로 대기오염 문제 해결

<https://news.cityoflondon.gov.uk/city-of-london-corporation-tackles-air-pollution-with-londons-first-environmentally-friendly-parking-tariff/>

<https://www.cityoflondon.gov.uk/services/transport-and-streets/parking/Pages/on-street-parking.aspx>

영국 런던시티공사(City of London Corporation)는 런던의 금융 중심가(Square Mile) 노면 주차 차량에 대한 새로운 요금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 주차요금제는 링고(RingGo)\*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작동되는데, 주차된 차량이 방출하는 오염 수준에 따라 자동으로 유형을 분류해 대기오염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차량일수록 높은 주차 요금을 부과한다. 시는 이러한 주차요금제가 오염 배출이 적은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보람을 주고, 반대의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하였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기계로 요금을 납부할 시에는 높은 수수료를 요금과 함께 부과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런던시티공사 교통계획국 상임위원회 위원장 크리스 헤이워드(Chris Hayward)는 “시의 주차 건수 중 98%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상기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새로운 주차요금제가 적용되는 금융 중심가는 런던에서 가장 혼잡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 만큼, 환경 친화적 주차요금제 시행을 통해 이곳에 일하는 노동자, 방문객, 거주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량 유형에 따른 주차 요금

(단위: 파운드)

차량 유형	15분당 비용	1시간당 비용
저방출 차량(예: 전기, 하이브리드)	1	4.00
2005년 이후 등록된 휘발유 차량	1.30	5.20
2015년 이후 등록된 디젤 차량	1.30	5.20
그 외	1.70	6.80

자료: <https://news.cityoflondon.gov.uk/city-of-london-corporation-tackles-air-pollution-with-londons-first-environmentally-friendly-parking-tariff/>

\* 138개의 지방 당국(21개는 런던협의회), 7개의 철도 운영자, NCP와 같은 민간 운영 업체가 제공하는 영국의 선도적인 무료 주차 솔루션 애플리케이션으로, 현재 1,300만 명의 영국 자동차 운전자가 링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으며, 이 서비스를 이용해 지불되는 주차료 건수는 매달 500만 건



환경 친화적  
주차요금제 적용 구역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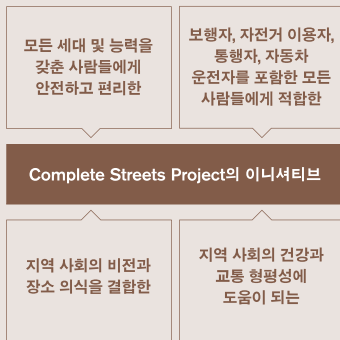
자료: [http://www.mapping.cityoflondon.gov.uk/geocortex/mapping/?viewer=compass&runworkflowbyid=Switch\\_layer\\_themes&LayerTheme=Show%20the%20Pay%20And%20Display%20Bays%20layers](http://www.mapping.cityoflondon.gov.uk/geocortex/mapping/?viewer=compass&runworkflowbyid=Switch_layer_themes&LayerTheme=Show%20the%20Pay%20And%20Display%20Bays%20layers)



## 하와이, Complete Streets 사업을 통한 안전한 지역 사회 만들기 노력

<http://www.honolulu.gov/completestreets>

<http://www.honolulu.gov/cms-csd-menu/site-csd-sitearticles/1154-site-csd-news-2018-cat/32488-08-29-18-towards-tactical-urbanism-quick-build-and-design-testing.html>



- \* Urban Core, Waikiki, Kalihi, Liliha Nuuanu, University McCully, Ala Pono, Kailua, Kaneohe, Pearl City
-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자전거 인프라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건축가, 작가 그리고 변호사로, <Tactical Urbanism: Short-Term Action, Long-Term Change>, <Tactical Urbanism>의 공동저자로 참여

최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는 거리 안전 향상 및 도시 경관의 활력 도모를 위한 교통·디자인 계획 수립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 계획안은 도시민의 신체 활동을 촉진시키고,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며, 보행자와 자전거 안전을 향상시키고,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계획,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첫째, 'Honolulu Complete Streets' 디자인 매뉴얼을 제공한다. 매뉴얼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원칙이 선정·반영되었으며, 시의 도시계획가와 설계자, 개발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둘째, 'Oahu 보행자 계획'을 추진 중이다. 2019년에 완성될 오아후(Oahu) 보행자 계획안은 걷기 쉽고(Walkable), 살기 좋고(Livable), 건강한(Healthy)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의 자전거 계획(Oahu Bike Plan), 대중교통 개발 계획(TOD) 등의 단계적 전략을 담을 계획이다.

셋째, 'Honolulu Complete Streets'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시의 9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계획을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마련하고자 도로의 재구성(Reconstruction), 재포장(Repaving), 도로 다이어트(Road Diet), 자전거 보호 구간(Protected Bike Lane), 보행자 횡단 구간(All-way Pedestrian Crossing) 조성 등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유명 건축가 토니 가르시아(Tony Garcia)\*\*를 초청하여 택티컬 어바니즘(Tactical Urbanism)을 주제로 한 무료강연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전문가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mplete Streets Project가 진행되고 있는 호놀룰루 9개 지역  
자료: <http://www.honolulu.gov/completestreets>

## 리버풀, 블록체인 기술 활용해 기후 친화적 도시 조성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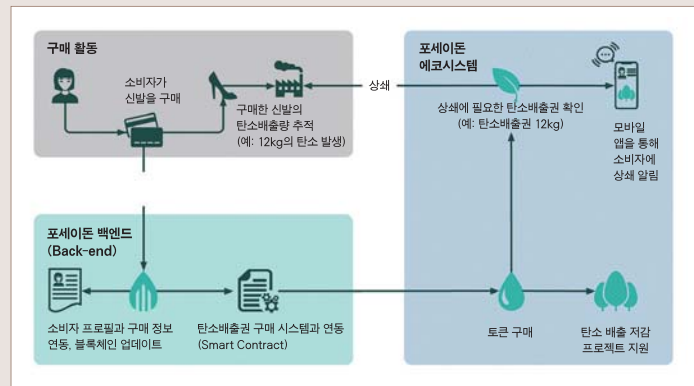
<https://liverpoolexpress.co.uk/liverpool-bids-to-be-first-climate-positive-city-by-end-of-2020/>

<https://poseidon.eco/>

리버풀이 2020년 세계 최초의 기후긍정도시(Climate-Positive City)를 목표로 삼은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도시 기후변화의 영향 완화를 시도한다. 최근 시의회는 비영리재단 포세이돈(Poseidon Foundation)과 블록체인 기반의 기후변화 영향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세이돈 재단의 블록체인 플랫폼은 먼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발생하는 탄소배출량(carbon footprint)을 추적한다. 그리고 소비자의 지불 비용의 일정 부분을 토큰화된 탄소배출권 구매에 사용하도록 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포세이돈 재단은 블록체인 기술을 탄소배출권과 연계하여 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거래에 필요한 과정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톤(ton) 단위로 거래되던 탄소배출권을 일상의 소액 결제 수단과 결부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개인과 기업 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대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히기도 했다.

리버풀의 조 앤더슨(Joe Anderson) 시장은 “현재 시가 도로의 조명, 세인트조지 홀(St. George’s Hall)과 에코아레나(Eco Arena), 시 보유 차량 등 공공서비스의 유지와 제공을 위해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면서, “2030년까지 기후 영향을 40%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포세이돈 재단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탄소배출량 상쇄 시스템

자료: Poseidon Foundation(2018), Carbon on Blockchain. p.15.(<https://poseidon.eco/assets/documents/Poseidon-White-Paper.pdf>)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 구상 발표

관계부처 합동  
2018.7.16.



세종 5-1 생활권 공간구조(안)



세물머리 수변공간의 활용 -도심을 연결하는 인공물길과 수변카페  
자료: 차산업혁명위원회(2018), "시민행복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사람 중심의 글로벌 혁신 성장도시 조성 추진", 7월 16일자 보도자료.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과 콘텐츠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구상이 발표되었다. 지난 1월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두 곳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사업지별로 마스터플래너·지자체와 사업 시행자(LH, K-water), 각계 전문가와 비전과 목표, 주요 콘텐츠의 적합성 등을 논의하여 이번 기본 구상을 마련하였다.

### 세종 5-1 생활권: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시민 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비전으로 추진된다. 우리나라 도시, 특히 세종시 고유의 문제점을 분석해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거버넌스 ▲문화와 쇼핑 ▲일자리에 대해 시민 행복을 위한 7대 혁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공간체계에 대한 제안도 담겼다. 리빙·소셜·퍼블릭으로만 구분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용도혼합 및 가변)’로 조성하여, 기존 용도지역 지정·구분에 따라 직주근접의 구현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혁신적인 도시 구성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를 강조하여 개인 소유 자동차는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하고, 내부에서는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 및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교통운영 체계가 제안되었다.

### 부산 에코델타시티:

#### 자연·사람·기술이 만나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시범도시 비전은 ‘자연·사람·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로, 3대 특화전략이 제시되었다.

먼저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Smart Tech City)’다. 스마트시티 테크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시범도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신 성장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특화전략은 ‘친환경 물 특화 도시(Smart Water City)’로, 시범도시 내 3개의 물길이 만나는 세물머리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수자원 관리와 하천 재해예방을 위해 물 관련 신기술을 접목하여 한국형 물순환 도시 모델로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Smart Digital City)’를 구현한다. VR·AR 및 BIM 기술, 3D 맵 기반의 가상도시를 구축하여, 도시 계획-건설-운영-관리 단계에서 온라인 의견 수렴과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 스마트시티 기술 보유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창업지원공간 및 육성 프로그램 등)

## 스마트 기술 활용하여 안전한 도시 만들기 시도

광주시 스마트시티과  
2018.8.6.

울산시 재난관리과  
2018.8.8.

### 광주시, CCTV 영상 정보 실시간 연결로 시민안전서비스 제공

시내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시민들의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광주시의 '스마트시티 5대 시민안전서비스'가 8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다. 스마트시티 5대 시민안전서비스는 광주시에 설치된 4,500여 대의 CCTV 영상 정보를 광주지방경찰청과 소방안전본부 상황실, 시 재난상황실로 실시간 연결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를 통해 ▲112 긴급 영상 지원서비스 ▲경찰관 긴급 출동 지원서비스 ▲119 긴급 출동 지원서비스 ▲재난상황 긴급 대응 지원서비스 ▲사회적 약자 지원서비스 5대 시민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112 긴급영상 지원서비스가 시행되면 CCTV 통합관제센터 전문관제요원은 범죄 의심 현장을 포착할 경우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게 된다. 경찰청 상황실에서는 112 신고 전화를 받으면 CCTV 통합관제센터에 GPS 위치 영상을 요청해 신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CCTV 5개소의 영상을 즉각 전송받을 수 있다. 경찰관 긴급 출동 지원서비스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받은 사진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재전송하는 것이다. 119 긴급 출동 지원서비스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 등이 가는 길목의 교통상황 및 주변 상황 CCTV 영상을 제공해 불법 주정차 등으로 길이 막혀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치매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신고용 단말기 위치 정보를 토대로 인근 CCTV 영상을 경찰에게 전송하는 사회적 약자 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 울산시, ICT 기반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울산시가 'ICT 기반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8월 시연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2016년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태화강이 범람하면서 제방 유실, 가옥·차량 침수 등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홍수 예측 정보를 강화하고 대응력을 높이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태화강 등 지역 주요 하천 11개소에 대해 홍수 대응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으며, 위험 단계별 예·경보 발령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12개 수위관측소를 신설하여 총 26개 수위관측소를 구축하였으며, 하천감시 CCTV 68개(기존 44개, 신설 24개)도 설치·관리된다. 구·군 배수펌프장(23개소)과 육갑문(4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또한 갖춰졌다.

시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하천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재난 대응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IT 기술 등 첨단과학을 접목한 재난관리 시스템 확충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민 참여’, ‘고령 친화’ 더한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2018.8.16.

국토교통부가 2018년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의 18개 대상 사업을 발표하였다.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은 2015년부터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하드웨어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운영하던 ‘단일 시·군 일반 사업’, ‘복수 시·군 연계 사업’에 더해 ‘지역 거버넌스형 사업’과 ‘고령친화적 공간정비 사업’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지역 거버넌스형 사업을 통해서는 다양한 지역 주체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게 된다. 고령친화적 공간정비 사업은 지역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며,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되었다.

### 지역 거버넌스형 사업:

####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 알콩달콩 장터 만들기

강원도 양양군의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은 지역 내 서핑협회와 주민연합회 등이 참여하여 관광객을 위한 서핑 테마 거리, 볼파크, 죽도정 둘레길 등을 조성하고 서핑 축제와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전라남도 구례군의 ‘알콩달콩 장터 만들기 사업’은 5일장 상인회, 귀농귀촌인 협의체, 야생화타운만들기 협의회 등이 함께 참여한다. 귀농귀촌인 벼룩시장(폴리마켓)과 전통 구례5일장을 연계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달콩 장터, 예비 창업존, 야생화쉼터 및 미니광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 2018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 대상지

자료: 국토교통부(2018),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 18건 선정”, 8월 16일자 보도자료.

### 고령친화적 공간정비 사업:

#### 안전하고 정감 넘치는 시골마을 운람골

경상북도 의성군은 고령 인구 비율이 37.9%, 전국 2위 수준으로 매우 높은 지역이다. ‘안전하고 정감 넘치는 시골마을 운람골 사업’을 통해 고령자들이 여가·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야외 쉼터가 조성된다.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마을 진입로를 정비하여, 지역의 고령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 낙후도 종합평가 결과가 낮은 70개 시·군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융자 지원 다각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심재생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금융기획팀  
2018.7.3.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금융제도팀  
2018.8.13.

### 공공상생상가 조성 사업에 융자 지원 실시

국토교통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공공상생상가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를 말한다.

융자 지원 대상은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공공단체(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며, 이를 통해 조성된 공공임대상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지 내몰림 현상을 경험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상생상가 조성을 위한 원활한 금융 지원을 위해 기금 융자 시 보증 상품도 함께 지원한다. 상가 조성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증대상사업에 먼저 투입한다는 조건하에, 부동산 담보 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HUG 보증부 융자로 조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융자·보증 지원을 통해 사업자는 토지비부터 건설·리모델링 자금, 운영비 등을 보다 원활히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영세한 임차인에 대한 동지 내몰림 현상 등 부작용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 융자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원 대상, 수준 등 융자 조건 전반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은 쇠퇴 도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기반 창출 등을 위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 여러 사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사업이다.

먼저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인하하고, 융자 한도도 기존 총사업비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여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 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융자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국한하던 지원 대상도 공기업·지방 공기업·민간 등의 사업 시행자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여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사 자격 요건도 개선되어, 신용등급 BBB+ 이상, 도급 순위 200위 이내 시공사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BB+ 이상, 500위 이내의 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업체들의 도시재생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전면 개정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2018.7.26.

인도의 유효 폭이 확대되는 등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보행환경의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한 데에 따른 것인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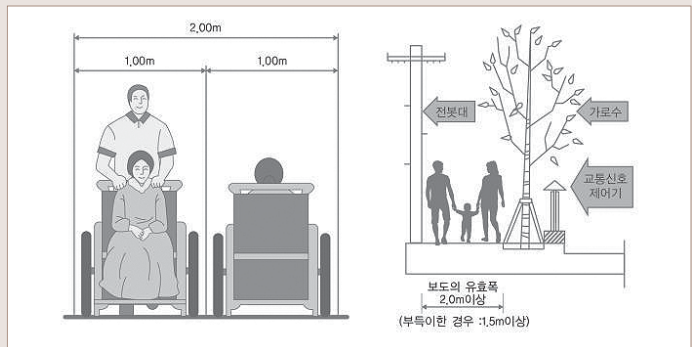
먼저 보행자도로의 횡단경사를 25분의 1 이하에서 50분의 1 이하로 완화하여 통행 안전을 향상시킨다. 또한 오로지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기준을 1.2m에서 1.5m로 상향시켜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자의 안전한 교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 보도포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공 및 유지관리 방법 제시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보도포장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보행자 도로 특성에 맞는 시공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을 C등급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관리하고, 고원식 횡단보도\*를 통한 자동차 운전자와 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보행자도로의 시설한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명시설, 교통안전시설 등 관련 규정의 개정 사항을 지침에도 반영하여, 현장 적용 시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보행자 및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새롭게 개정함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보도의 최소 유효 폭 변경 내용

자료: 국토교통부(2018),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7월 27일자 보도자료.

\* 과속방지턱에 횡단보도를 합친 형태로 인도와 비슷한 높이로 조성되며, 보행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차량의 속도를 감속시키는 효과가 있다.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2018.8.6.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 최소로 확보해야 하는 휴게시설 크기 등을 규정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에 배포하였다. 최근 백화점·면세점 등의 판매노동자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가 제기되었던 만큼 이번 가이드에서는 ▲휴게시설 설치·이용 원칙 ▲휴게시설 설치대상과 위치·규모 ▲휴게시설의 환경 ▲비품 및 관리 등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고 있다.

휴게시설의 면적은 1인당 1m<sup>2</sup>, 최소 6m<sup>2</sup>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자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며,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냉방시설을,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한 난방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

또한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제시된 조명과 소음 기준을 준수하고, 등반이 의자와 탁자, 식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하도록 하였다. 휴게시설의 배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휴게시설은 최대한 작업장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100m 이내 또는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하도록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신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은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할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가이드가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과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운영 실태의 지도·점검 또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자료: 고용노동부(2018),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pp.16-17.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80800115](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80800115))

**장벽 없는(Barrier-free)**  
건축·도시환경을 위한 노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2018.8.9.

서울시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2018.7.4.

## 보건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및 수수료기준 개정

보건복지부가 장애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제도\* 도입 후 10년이 지남에 따라, 인증 현황과 관계 법령 개정 등 변화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BF 인증기준 및 수수료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일부 인증기준이 강화되고, 인증 수수료 체계가 세분화된다.

먼저 8월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 공원 및 건축물 인증지표를 변경하였다. 출입구(문)통과 유효 폭은 0.8m에서 0.9m으로, 장애인 화장실 바닥면적 기준은  $1.4 \times 1.8\text{m}$ 에서  $1.6 \times 2.0\text{m}$ 으로 확대되었고 비상벨 설치, 관람석·열람석 구조 개선과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또한 기존의 단일 수수로 체계를 건축물 바닥면적 기준 면적별 5개 구간으로 구분,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다. 변경된 수수로 기준은 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서울시, 무장애관광 시범지역 조성

서울시는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로 지정된 중구·다동·무교동 지역을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시범지역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다동·무교동 관광특구의 경우 특히 내부 지역의 음식점, 쇼핑상점 등에 접근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관광약자가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던 지역이다.

시는 대상지 내 관광객 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총 45개 시설을 선정해 접근로와 자동문 설치, 화장실 개선, 좌식 테이블 일부를 입식으로 변경하는 등 시설 개선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범지역 내에 위치한 카페 등 관광객 이용시설에 대한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물 설치 여부를 조사하여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로 공유하고, 무장애관광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를 통해 관광약자의 여행 편의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접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는 제도
-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 이용, 정보 접근상의 제약으로 보편적인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



무장애관광 시범지역의 접근성 개선 사업 대상지

자료: 서울시(2018), "다동·무교통 관광특구 관광약자 위한 무장애관광 시범지역 조성", 7월 4일자 보도자료



## 청년 주거·일자리 정책 마련에 따른 다양한 사업 추진

관계부처 합동

2018.8.9.

부산시 경제기획과

2018.7.30.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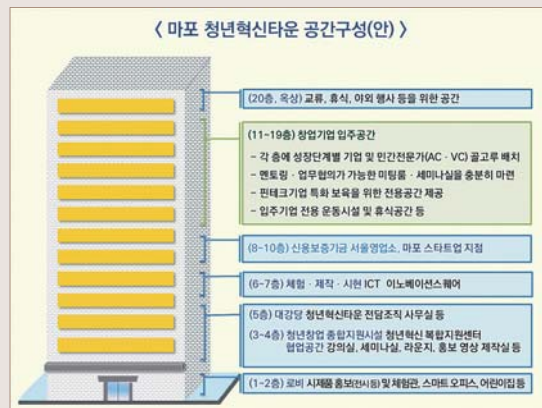
2018.8.9.

###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 마련

청년 인재와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조성되는 '마포 청년혁신타운'의 세부 조성계획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청년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고 스타트업 붐과 함께 늘어난 창업공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공간 확대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을 청년 창업기업 전문 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6월 용도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이번 세부 조성계획이 마련되었다.

지상 20층, 연면적 3만 6,259m<sup>2</sup>의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은 앞으로 300개 청년기업이 입주 가능한 마포 청년혁신타운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청년기업은 이곳에서 최장 3년 동안 금융·네트워크·교육·컨설팅, 해외진출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KOTRA 등 관련 기관이 인큐베이팅에 힘을 모으게 되며, 특히 핀테크, AI·블록체인 등에 대한 전문 보육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4차산업 핵심기술을 활용한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간 구성의 핵심은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개방공간과 창업기업 입주공간을 균형 있게 구성한다는 의미이다. 11층부터 19층 창업기업 입주공간을 제외하고, 개방공간에는 오픈카페, 창업지원시설, 교육·행사장, 영상제작실, 첨단 장비를 이용한 시제품 제작·시연장이 들어선다. 청년 혁신 복합지원센터, 정책금융기관 사무소도 설치하여 창업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입주공간에는 입주기업을 위한 사무공간과 회의실 등 네트워크 공간, 휴게실과 운동시설·어린이집 등 복지공간이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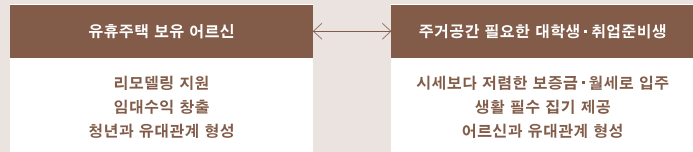
마포 청년혁신타운 공간 구성안

자료: 금융위원회(2018), "관계기관 합동,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 마련", 8월 9일자 보도자료.

### 부산시, 청년 맞춤형 공공 세어하우스 '부산청년 우리집' 확대

부산시는 취업 준비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부산청년 우리집'의 공급을 올 하반기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청년 우리집은 홀로노인의 노후 주택을 수리하여 시세의 3분의 1 가격의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세어하우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홀로노인이 노후 주택 개선으로 임대수익을 얻도록 함으로써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경제적 자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조성은 주택건설사 등 대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미 올해 3월 GS건설과 함께 부산청년 우리집 주택 3개 호, 10개 실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이곳에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입주해 있으며, 임대료는 2인실 기준 11~14만 원대, 1인실 기준 14~19만 원대를 지불한다. 거실·주방·발코니를 공동 사용하며, 입주 청년들의 생활에 필요한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 일체를 지원받는다.



#### 부산청년 우리집 사업 내용

자료: 부산청년들넷홈페이지(<http://www.busan.go.kr/young/house06>, 검색일: 2018.8.31.)

### 경북도,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본격화

경상북도가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가졌다.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청년을 위한 일자리, 주거환경, 복지·문화 기반이 두루 갖춰진 농촌마을'을 의미한다. 도는 일자리·주거·복지 분야 지원사업을 지방소멸 위기 지역 가운데 한 곳에 집중하여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시범모델을 만들고, '청년 유입-지역 활성화-지방소멸 극복'이라는 선순환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일자리, 부자농촌, 도시건축, 아동복지, 문화, 의료 6개 분과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2년간 운영된다. 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단지 조성, 청년대상 시범마을 홍보·유치, 시범마을 내 문화 조성, 아동·의료 등 복지체계 구축, 귀농·귀촌자 지원 등을 논의하게 된다.

도는 경북개발공사, 대구경북연구원 등과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TF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자문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기본구상안을 만들 예정이다.

#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건축·도시를 만들어 가는 덴마크건축센터 (Danish Architecture Centre: DAC)

임정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GLOBAL THINKTANK

덴마크 정부는 1994년 제1차 국가건축정책을 발표한 이래 수준 높은 건축의 발전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성장을 목표로 두고 덴마크를 건축문화 강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가장 최근 개정한 건축정책은 2014년에 발표한 ‘사람을 최우선으로(Putting People First)’로, 64개의 추진 계획을 통해 ‘건축디자인’, ‘에너지 효율’, ‘사회적 지속가능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 계획으로 시민들의 건축경험 증진과 민주주의 과정에서 시민 참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건축이 삶의 지속가능성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사람을 중심에 둔 정책과제의 실현에 있어 덴마크건축센터(Danish Architecture Centre: DAC)는 중심점의 역할을 한다. DAC는 덴마크 국가기관으로 지역과 국가 그리고 세계적 레벨에서 건축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가(정부)-민간(기업체)-시민의 매개 기관으로서 덴마크의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건축·도시정책 실현의 추진체 역할을 하고 있는 DAC에 대해 소개한다. 이를 통해 건축과 도시 발전을 위한 지식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건축·도시 분야 싱크탱크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DAC 전경

“사람을 중심에 둔  
정책과제의 실현에 있어  
DAC는 중심점의  
역할을 한다.  
DAC는 덴마크  
국가기관으로 지역과  
국가 그리고 세계적  
레벨에서 건축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비전과 역사\*\*

DAC는 1985년 덴마크 문화부와 경제산업부, 비영리재단인 레알다니아(Realdania)\*\*\*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가 비영리기관으로, 덴마크 건축 환경 전반에 있어 독창적이고 최고 수준의 교육과 이를 위한 프로젝트 발굴 및 구현을 비전으로 두고 있다. 기관 운영의 가장 주된 목표는 건축과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의 길을 열어 건축의 문화·경제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축과 도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교육 등을 통한 전문화를 도모하며 정보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세미나와 방문객들을 위한 도시 가이드 투어를 진행하는 등 전문적이고 문화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조직 구성

DAC는 디렉터와 매니지먼트 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조직은 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부(Culture Department)에서는 일반 문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투어 프로그램·교육 및 이벤트 등을 총괄하고 있으며, 섹터부(Sector Department)는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그 외 카페 및 콘퍼런스 부서(Cafe and Conference Department), 상점 및 방문자 센터 부서(Shop & Welcome Center Department),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Marketing & Communications Department), 행정·인사 및 재정 부서(Administration, HR and Finance Department)로 구성되어 부문별 업무를 처리한다.

#### 재정 운영\*\*\*\*

DAC는 1986년 덴마크건축가협회, 건축사무소협회, 컨설팅엔지니어협회, 계약자협회, 무역·공예협회, 덴마크산업연합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시작되었다. DAC의 주요 재원은 ‘공공서비스 활동을 위한 펀딩’으로 레알다니아와 덴마크 정부(산업부·문화부) 간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지원금은 약 1,880만 덴마크크로네(DKK, 약 32억 9,000만 원)이다. 공공-민간 파트너십 운영은 덴마크 정부의 ‘DAC의 일반 운영 재원은 공공 수단만으로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정책 목표에 부합한다. 이를 통해 덴마크 정부는 ‘의지와 함께하는 성장, 문화와 체험경제의 덴마크(Growth with will, Denmark in the culture and experience economy)’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활동을 추진할 수 있으며, 레알다니아는 재단의 자금지원전략과 ‘확산과 토론’ 부문의 사업계획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 The Next Green 홈페이지(<http://thenextgreen.ca/2017/06/07/danish-architectural-policy/>)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 DAC 홈페이지(<https://dac.dk/en/about>)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 레알다니아 재단은 모기지 신용기관으로 시작한 자선단체로 건조물 환경에 의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며, 관련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http://www.realdania.org>).

\*\*\*\* DAC 홈페이지(<https://dac.dk/en/about>)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기관 운영의 가장  
주된 목표는 건축과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의  
길을 열어 건축의  
문화·경제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과 민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운영보조금만으로는 그 비용이 충당되지 않는다. 이에 프로젝트 관련 수입과 정부부처의 자원, 기금, 후원,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협조협약에 따른 보조금 등 다양한 자금 운용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개별 프로젝트별로 자금 조달 기관과 DAC 간 계약을 체결하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 DK2050 프로젝트\*

덴마크 정부는 2011년 2050년까지 덴마크를 ‘탈화석연료 국가’로 만들겠다는 녹색 전환(Green Conversion) 목표를 선언하였다. 이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사회와 도시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 국민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DAC에서는 2013년부터 2050년까지 덴마크와 덴마크 도시들의 녹색 전환을 위한 미래상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건축과 도시 부문이 마주할 도전과 딜레마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DK2050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하였다.

#### DK2050 프로젝트 개요

2008년 덴마크 기후변화 대책으로 설립된 ‘덴마크 기후변화정책위원회’는 2050년까지 덴마크의 녹색 전환을 위한 국가적 합의 방침 마련을 위한 보고서를 2010년에 발간하였다. 이 국가 방침을 실행하기 위해 2013년 DAC는 녹색 전환과 관련된 주요 사회적 플레이어(social player)와 협력하여 DK2050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DK2050 프로젝트의 목적은 우리가 녹색사회에서 일하고 살기 위해서 현재와 미래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이드할 수 있는 전문적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다.

DK2050 프로젝트에서는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관련 내용을 제14회 베네치아 비엔날레 건축전 덴마크관 전시를 통해 소개하였다.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것은 잠재된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앞으로 나타날 동향과 사회의 추진력이 어떤 식으로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과 고민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제시된 시나리오를 통해 미래의 가능성과 현재의 행위에 대한 질적 질문을 생산하고, 장기적 발전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DK2050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

DK2050 프로젝트는 2013년 11월에 시작하여 2014년 11월 콘퍼런스 개최까지 1년간 진행되었다. DAC는 레알다니아 외에 문화부, 환경부, 산업·성장부, 기후·에너지·건설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설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할 10개의 지자체가 선정되어 프로젝트에 동참하였다.

\* DAC, 「Partnership for greener Denmark in 2050」 보고서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DAC는 덴마크  
도시들의 녹색 전환을  
위한 미래상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건축과 도시 부문이  
마주할 도전과 딜레마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DK2050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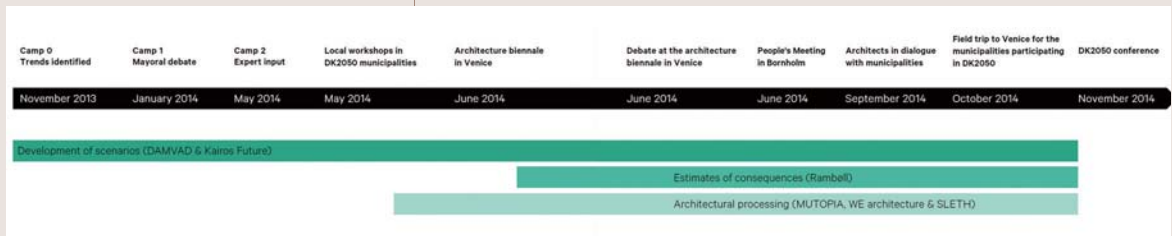
덴마크의 녹색 전환을 위한 시나리오는 처음 DAC에서 개최된 CAMP 0 워크숍을 통해 시작되었다. 이 워크숍에서는 전문가, 정부 관계자, 시민 등 모든 관련 주체들이 모여 지자체별·지역별 요구사항이나 관점 및 관심사항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첫 번째 시나리오 발전의 결과가 CAMP 1 워크숍에서 발표되었다. 지자체장들은 2050년까지 녹색 전환을 이루기 위해 덴마크 도시와 각 지역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토론하고, 국가적 2050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지자체별로 시행·추진해 온 주요 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가졌다.

지자체 간 공통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지역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 ▲지자체로 이어지는 국가 정책과 계획 간의 더 넓은 일관성 확보 ▲전국의 사업체에 긴밀히 연결되는 더 강한 국가 인프라 투자 ▲무역 전략과 연관된 국가 산업전략 ▲녹색 전환과 연관된 사회적 연결성을 타깃으로 하는 작업들로 인한 시민들의 참여 ▲녹색기술, IT, 건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그 다음 진행된 CAMP 2에서는 전문가, 엔지니어, 분석가, 건축가들이 함께 관련 지식을 나누고 청사진과 시나리오를 구상하였다. 강연자들은 4개의 시나리오와 덴마크의 녹색 미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조건을 제시하며 논의를 진행하였다. 모든 강연들은 녹색 전환을 위한 정책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관점은 이후 시민 간담회와 지자체 내 토론 과정에서도 다루어졌다.

지역 워크숍에서는 시민, 지역의회, 사업주, 이익 단체가 참여하여 각각의 워크숍에서 논의된 2050 녹색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별 전략을 반영한 선언문을 작성하였다. 이때 토론 과정과 아이디어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기록하였다. 이러한 플랫폼은 시민들이 지역의 도시계획 전략과 건축정책 등의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와 교외 지역의 미래를 위한 시나리오는 2014년 베네치아 비엔날레 건축전을 통해 세계적 레벨에서 공유되고 논의되었다. 덴마크 파빌리온 앞에서 진행된 공개 토론회는 학제 간 접근법, 시나리오 도출 그리고 DK2050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른 국가와 도시들에 영감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었다. 이어 ‘People Meeting 2014’에서 시민들은 사업가, 정책가, 전문가, 이익 단체들과 함께 18회의 토론회와 워크숍을 가지면서 덴마크의 녹색 전환을 위한 미래 시나리오들을 논의하였다. 또한 지자체와 건축가들이 네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건축적 방안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 DK2050 프로젝트 타임라인

자료: DAC, 「Partnership for greener Denmark in 2050」, pp.30-31

“DK2050 프로젝트에서  
제시된 시나리오를 통해  
미래의 가능성과  
현재의 행위에 대한  
질적 질문을 생산하고,  
장기적 발전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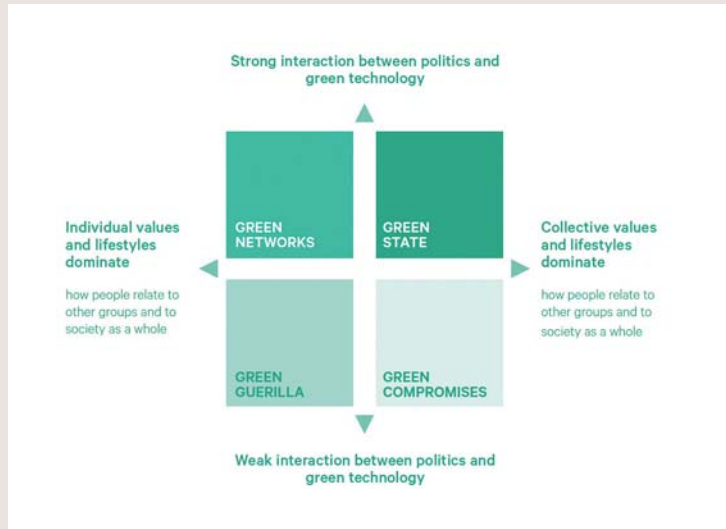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2014년 11월 DK2050 콘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DK2050 프로젝트의 모든 참가자들이 모여 녹색 성장을 위한 최종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다.

1년간의 프로젝트 결과는 시나리오 보고서, 시나리오별 교통·에너지·자원·물에 대한 영향평가, 2050년 덴마크 도시들을 위한 건축적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이렇게 세 가지의 대주제로 출판되었다. DK2050 프로젝트에서 합의된 미래 시나리오와 추진 과제, 그에 대한 논의는 장소적·지역적·국가적으로 녹색 전환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며, 토론과 정치적 활동을 추동하는 데에 활용되며, 그 과정에서 정책은 수정되어 간다. 또한 각 지방정부는 이 시나리오를 지역별 전략적 도시계획, 이를 위한 논의와 산업·혁신·교통·거주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 DK2050 프로젝트의 네 가지 시나리오

각각의 시나리오는 덴마크의 관련된 주체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행동하게 한다. 이는 DK2050 프로젝트에서 녹색 전환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적인 토론을 이끌어 내는 툴(tool)로서 ‘시나리오’를 사용한 이유이다. 리서치 기반의 컨설턴트 회사인 담바드(DAMVAD)는 컨설팅 및 리서치 회사인 카리오스 퓨처(Kairos Future)의 미래학자들과 함께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발전시켰다. 이는 녹색 전환이라는 공통분모를 어떻게 덴마크와 덴마크 도시들이 발전시킬지에 대한 예측 작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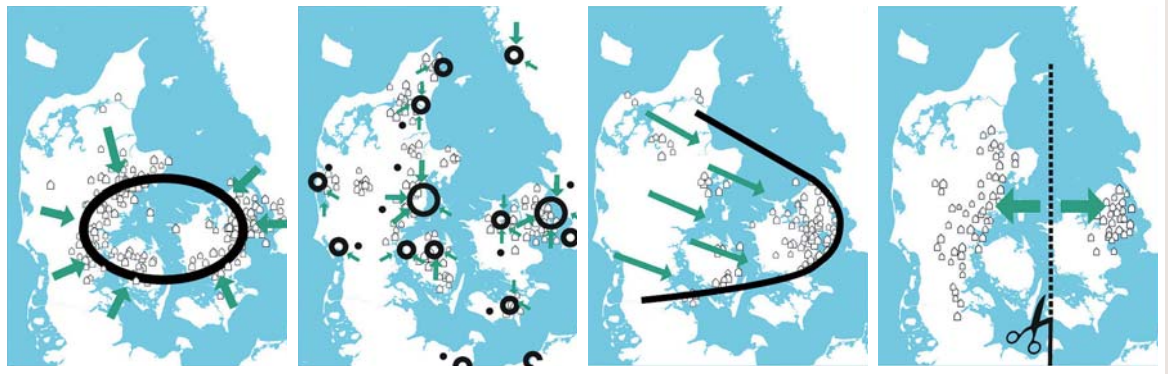
시나리오는 확실한 동향과 여전히 불확실하고 가능성 있는 발전 동향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담바드와 카리오스 퓨처는 덴마크 지방정부와 지역단체 및 사업체들과 함께 덴마크의 미래 발전 방향에 영향을 줄 변화로 도시화, 고령화, 디



DK2050 프로젝트의 네 가지 시나리오 매트릭스

자료: Ramboll, Metrics of green conversion, p.3.





HKHC를 통한 커뮤니티의 변화

자료: <https://healthyplacesbydesign.org/wp-content/uploads/2014/09/HKHC-infographic.pdf>

지탈화, 기후변화, 녹색기술의 발전, 공동생산으로 제시하였다. 담바드와 카리오스 퓨처는 두 개의 불확실 축을 시작점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하나의 축은 개인 또는 공동의 가치가 미래에 지배적인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한 축은 정책과 녹색기술들 사이에 놓인 상호작용의 레벨에 대한 것이다. 두 개 축을 중심으로 녹색 전환을 추동하는 요인별로 네 가지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데 ‘녹색 국가(Green State)’, ‘녹색 네트워크(Green Network)’, ‘녹색 게릴라(Green Guerilla)’, ‘녹색 타협(Green Compromises)’이다.

첫 번째 녹색 국가는 중앙 집중적이고 국가 지원의 해결책으로 100% 재생가능 에너지, CO<sub>2</sub> 중립 그리고 화석연료로부터의 독립 등을 통해 녹색 전환의 완성을 성취하는 시나리오이다. 녹색 네트워크는 열의 있는 국가 주도의 환경 정책과 시민·회사·도시의 상향식 계획을 결합하여 탄소 80% 감소를 이루는 것이다. 녹색 게릴라는 국가와 조직성·통합성은 낮으나 높은 수준의 개인적 어젠다들이 결합되어 탄소를 60% 낮추는 시나리오이다. 마지막으로 녹색 타협은 기존점이 되는 시나리오로, 2014년에 채택된 것들 이외에 새로운 정책 및 계획이 없는 상태로 40%의 탄소 감소 목표를 달성하며, 유일하게 녹색 전환보다 성장에 집중한 국가 발전에 기초한다.

DAC는 DK2050 프로젝트를 총괄하면서 프로젝트 파트너인 덴마크 예술재단 Rambøll과 건축 및 예술 작업을 통해 이들 시나리오를 발전시켰다. 특히 MUTOPIA, SLETH와 WE 세 곳의 건축사사무소와 함께 네 가지 시나리오를 시각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각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MUTOPIA는 시나리오별로 에너지와 교통인프라, 도시화 사이의 관계를 국가적·지역적 스케일로 분석하여 덴마크 도시들의 확장과 수축이 도시 지역과 도시 간 네트워크, 탄소중립 사회로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네 가지 지도로 표현하였다.\* 또한 네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지리적 변화를 ‘Magnet(중앙집중형)’, ‘Star Sky(다중심형)’, ‘Comet(혜성형)’, ‘Division(동서 구분형)’ 4개의 도시화 모델로 제시하고, 전문가 및 지방정부 관

\* <http://mutopia.dk/projects/urban/dk2050/>

“전시·교육·시민강좌 등을 통해 덴마크 건축과 도시의 발전 방향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새로운 도전 과제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DAC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덴마크의 건축과 도시정책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물 한쪽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DAC

계자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파트너와 함께 시나리오별로 녹색 전환 및 도시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몇 개 도시를 대상으로 추가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Rambøll은 녹색 전환으로 가는 네 가지 시나리오에서 교통, 에너지 공급, 자원, 물 공급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고 영향을 평가하여, 시나리오별로 국가와 도시가 직면하게 될 딜레마를 도출해 냈다.\*\*

#### 시민들과 함께하는 덴마크 건축도시정책과 DAC

DK2050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듯이 DAC는 국가기관의 위상을 취하며 덴마크의 건축·도시 미래상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가적 어젠다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민간 부문 간의 목적 공유와 협력을 이끄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시·교육·시민강좌 등을 통해 덴마크 건축과 도시의 발전 방향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새로운 도전 과제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사람을 중심에 두는 덴마크의 건축과 도시정책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건축·도시정책의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정책을 만드는 기관, 관련 전문가, 지방정부, 민간 기업 그리고 시민 모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분야별 전략을 설정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과정을 만드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DAC는 다양한 주체를 모으고 조정하며 덴마크의 선도적인 건축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http://mutopia.dk/projects/urban/dk2050/>

\*\* 분석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은 「Metrics of green conversion」 보고서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INTERVIEW

**Rikke Brams**

DAC 마케팅·커뮤니케이션부  
커뮤니케이션·콘텐츠 담당

**Q 건축과 도시계획(또는 전시기획)을 위한 별도의 연구팀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A** DAC는 레알다니아 재단, 관련 어젠다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조직과 협력하여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또한 다른 연구기관, 전시기관과 함께 전시 기획과 운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현재 준비 중인 전시인 'OVE – Ove Arup and the Philosophy of Total Design' 전시는 런던의 V&A 박물관과 협력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이 전시를 위해 몇 년간 함께 리서치 작업을 해왔다. 다른 사례로 개막 예정인 덴마크 건축가 요른 웃손(Jørn Utzon) 개인전 'Utzon, Horisont'의 경우는 Utzon Center와 함께 기획하고 박사 연구자가 직접 큐레이팅하고 있다. 현재 전시 중인 'Welcome Home' 또한 많은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연구 작업 결과물은 전시와 도록 외에 문화시민과 전문가 대상의 이벤트를 통해 담아내고 있다.

**Q 덴마크 건축과 도시환경을 위한 정책 결정에서 DAC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A** DAC는 기업부, 문화부, 교통·건설·주택부 그리고 98개의 덴마크 지방정부와 함께 파트너로 협업하고 있다. DAC는 건설 부문(건축가, 엔지니어, 도시계획가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워크숍과 토론회를 주최하며, 정부 부처에 현재 덴마크의 현황 또는 부문별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덴마크 정부가 전략적 도시 거버넌스(Strategic Urban Governance)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축하는 데 조언을 제공한다. 최근 정부의 '사람을 최우선으로' 건축정책은 건설 환경과 그 안에서의 삶을 위한 기본 틀을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DAC는 '시민, 어린이,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건축', '건축과 민주주의, 환경, 사회, 문화', '삶의 질', '혁신과 국제적 잠재력' 등의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DAC와 함께 새로운 건축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Q DK2050 프로젝트 외의 진행하고 있는 정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A** DAC는 건축 관련 정부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DAC는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건축 수업 과정, 4~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관련 교육과정, 기타 교육자료 및 고등학생 서머스쿨 과정 등을 개발하고 있다. 건축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건축정책 작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새로운 콘셉트의 카탈로그를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기업경영진·운영자·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전략적 도시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전략적 도시 리더십을 위한 영감과 톨도 제공한다. 2016년 COWI사가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이 전략적 도시 거버넌스와 공동의 전문 언어에 대한 인식을 국가적 레벨에서 공유하는 데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Q 건축 및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국가와 DAC가 그리고 있는 미래상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A** DAC는 넓은 계층의 국민을 타깃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 이벤트, 프로젝트, 팟캐스트, 투어 프로그램, 출판, 협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덴마크 건축에 대한 비전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 보육기관,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 네트워크, 이벤트, 투어 프로그램을 건축 및 도시 부문과 전문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건축과 도시공간

Vol. 31

Autumn 2018

# 장소 탐방

Place Review

### 3

쓰레기를 태우고 거대한 굴뚝에서 연기를 뿜어내던 공간이 문화와 예술을 피우는 부천아트벙커 B39로 거듭났다. 쓰임과 버림, 생산과 소비, 기계와 사람처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상대적인 개념들이 공간 안에 공존하며 우리의 도시, 문화, 삶과 현실을 돌아보게 만든다.

추운 겨울 뜨거운 올림픽의 열기가 서렸던 공간이자, 남북 화해의 첫걸음으로 기억될 공연의 무대로 주목받았던 강릉아트센터는 그 자체로 조화와 공존을 의미한다. 이제 그 무거운 상징성을 뒤로하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에게 무한히 열린 공간이자 다양한 음악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부원아트센터 B39



강릉아트센터



쓰레기의 공간을  
사람의 공간으로  
- 부천아트벙커 B39  
118

공존과  
화합의 울림  
- 강릉아트센터  
132

**쓰레기의 공간을 사람의 공간으로 - 부천아트벙커 B39** | 문화와 쓰레기의 관계는 참으로 상호 역설적이다. 쓰레기뿐만 아니라 음울한 모든 것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사회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그 쓰레기와 음울한 이면의 일상이 우리의 도시이고 문화이고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부천아트벙커 B39는 문화시설이 쓰레기 소각장과 동거하는 느낌으로 설계했다. 기존 소각시설 속으로 들어가 소각 과정을 경험하는 것과 문화 및 교육 활동을 함께 이루어지면 일종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공존과 화합의 울림 - 강릉아트센터** | 강릉아트센터는 조형과 외부 공간에 대한 건축 공간 구성의 바탕 위에 음향과 무대 구성을 위한 시스템이 결합된 복합 건축물이다. 설계 당시 가장 집중한 부분은 다름 아닌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공연장이었다. 강릉아트센터가 처음 문을 열던 날 공연 중간에 마이크를 끄고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던 폴 포츠의 모습이 생생하다. 그 생생한 울림 속에서 관객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보내던 모습처럼 영동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여 언제나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강릉아트센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 부천아트벙커 B39

## 쓰레기의 공간을 사람의 공간으로

**김광수**  
스튜디오 케이웍스 대표

### 개요

위치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 53 부천아트벙커 B39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12,663.70m <sup>2</sup>
건축면적	3,303.70m <sup>2</sup>
연면적	8,364.23m <sup>2</sup>
규모	지상 6층, 지하 1층
높이	33.2m
건폐율	26.09%
용적률	60.58%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구조설계	(주)우리구조기술사사무소
설계	김광수(건축사사무소 커튼홀(스튜디오 케이웍스 대표))
설계담당	박미정, 유재강, 한주희
시공	(주)흥덕건설
기계·전기설계	주식회사 정도설비 / 기술사사무소 우림전기
설계기간	2016.2. ~ 2016.9.
시공기간	2016.10. ~ 2017.11.
공사비	약 70억 원
시설운영주체	사회적기업 노리단
건축주	부천시
사업 진행과정	2014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사업 실행구체화 용역 2015 소각장 민간운영 주체 공모 및 선정 파일럿 프로그램 1차 연도 운영 2015.12. 건축설계 현상 공모 및 선정 2016 파일럿 프로그램 2차 연도 운영 2016.10. 공사 착공 2017 브랜드 디자인 개발 2017.11. 소각장 리모델링 공사 준공 2018.04. 부천아트벙커 B39 개관



부천아트벙커 B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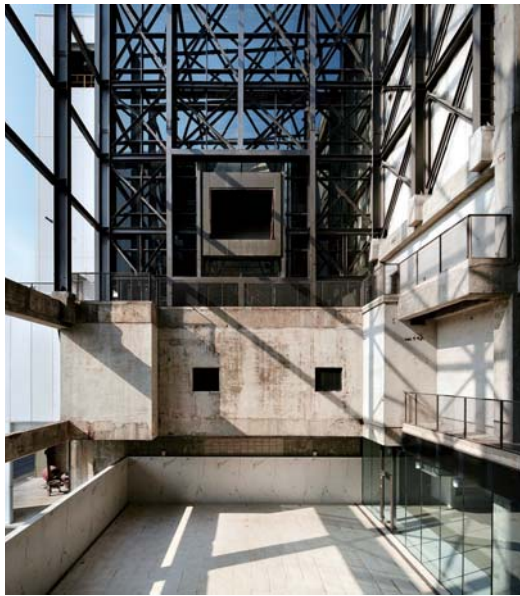
어느 누구도 쓰레기와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쓰레기라는 존재 자체가 부인될 수는 없다.  
우리가 쓰레기를 부인하고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어디선가는 계속 쌓여가고 있고,  
또한 쓰레기를 소각하더라도 공기 중의 또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특성이 있다. 이 공간이 다소  
초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것은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의 치부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드러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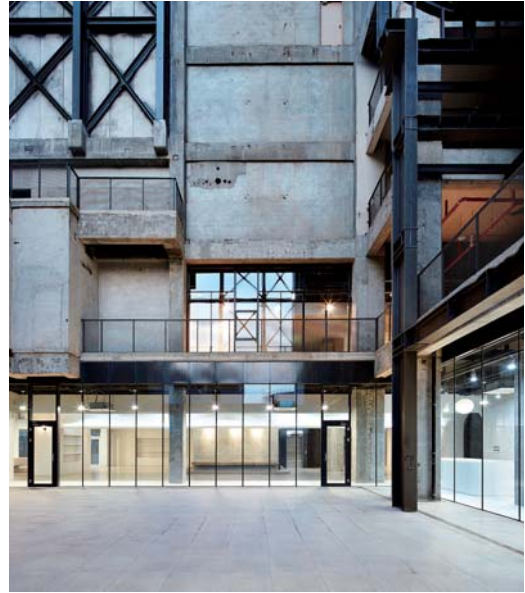
쓰레기 소각장에서 문화시설로 재탄생한 부천아트벙커 B39



© 리움  
김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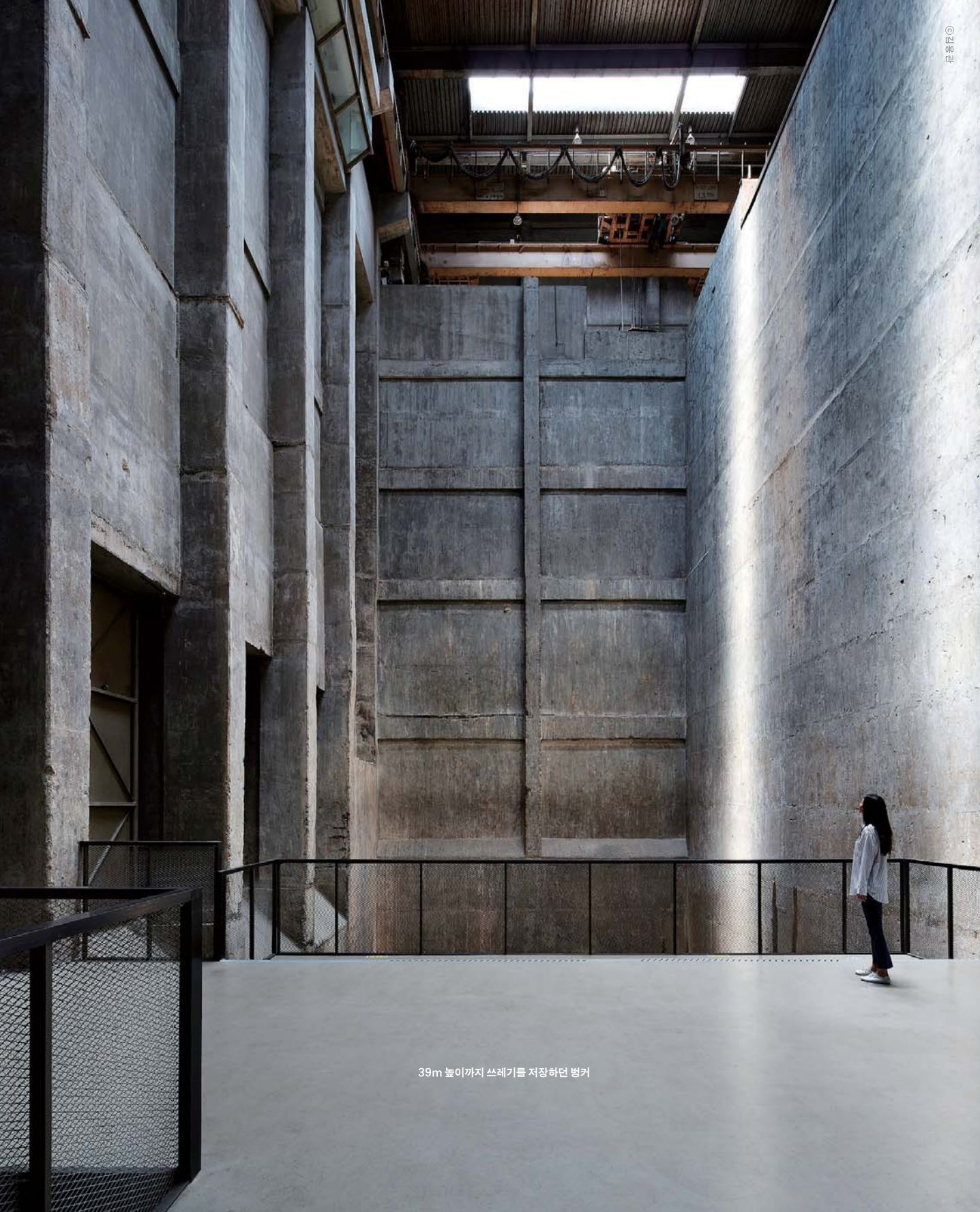
© 리움  
김영관



© 리움  
김영관

상 부천아트벙커의 에어 갤러리  
중 실험적인 전시와 공연이 이루어지는 에어 갤러리  
하 옛 소각조의 모습을 간직한 중정





39m 높이까지 쓰레기를 저장하던 벙커



© 2019  
김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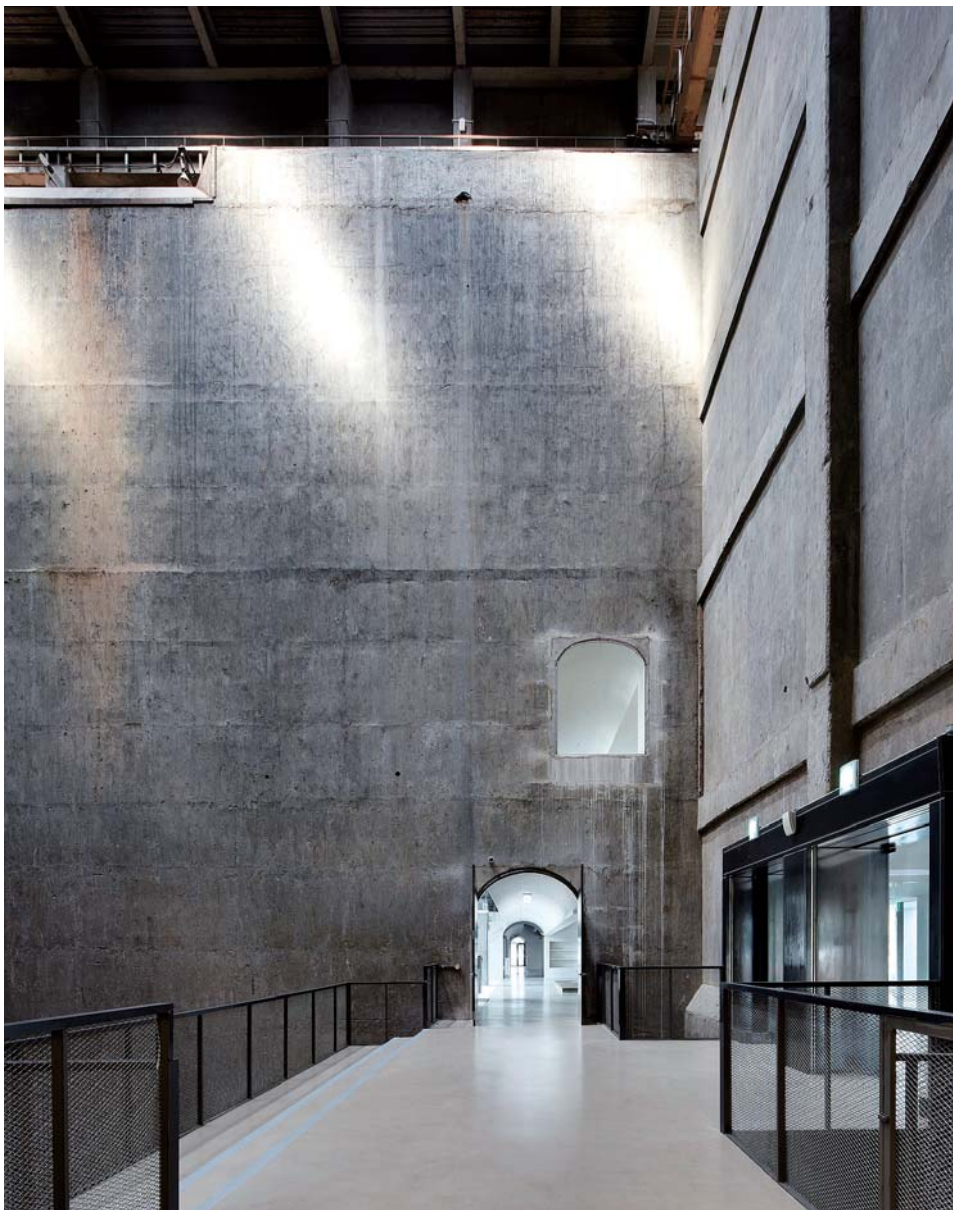
© 2019  
김민



© 2019  
김민

상 부천아트벙커 B39의 로비  
하·좌 과거와 현재가 연결된 공간  
하·우 쉬어가는 공간 카페 B39





쓰레기의 공간에서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의 전환

소각장은 워낙 복잡하고 미로 같아서 잘 파악할 수도 없었지만 새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소각 과정도 잘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기존의 차량 동선들과는 상반되는 동측에 새로운 동선을 만들어 쓰레기 반입실에서부터 병커, 소각조, 재병커, 유인송풍실과 굴뚝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생뚱맞게 앞에 있는 관리동 건물까지를 열주로 엮어주며 진입동선 레이어를 덧붙였다. 이 레이어는 대로변과 마주하며 소각장의 변신을 예고한다. 이 레이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도색을 한 것 말고는 예전의 소각장 모습 그대로이다.



© 건축사  
김영진

예전의 소각장 모습을 간직한  
부천아트병커 B39

### 소각장: 갈등의 진원지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설 때 이곳은 열병합발전소와 공장 시설이 밀집해 있는 변두리 산업지역에 불과했지만, 도시가 확장하여 아파트 단지 등과 맞붙게 되면서 골칫덩어리가 되어 버렸다. 여러 갈등을 겪다가 결국 2010년 문을 닫았다. 그 후 주민들은 당연히 이 시설을 철거하고 공원이나 수영장과 같은 새 주민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믿었지만 철거비용만 해도 70억 원이 소요되는 일이었다. 부천문화재단은 부천시와 문화관광체육부의 매칭사업으로 문체부 폐산업시설지원 공모사업을 진행했고 2014년 폐산업시설지원 공모사업지로 이곳이 선정되었다. 그 이후 주민들과 소통하며 1년 여간 16차례의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진행했고 현상설계공모 전에 실행 구체화 용역까지 발주해서 실효성 있는 도큐멘테이션과 그 복잡한 소각설비의 3D 모델링까지 준비된 상태였다. 현상설계공모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부천문화재단은 꽤나 세심하게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었고 현상설계의 준비도 차근차근하고 있었던 것이다.

© 부천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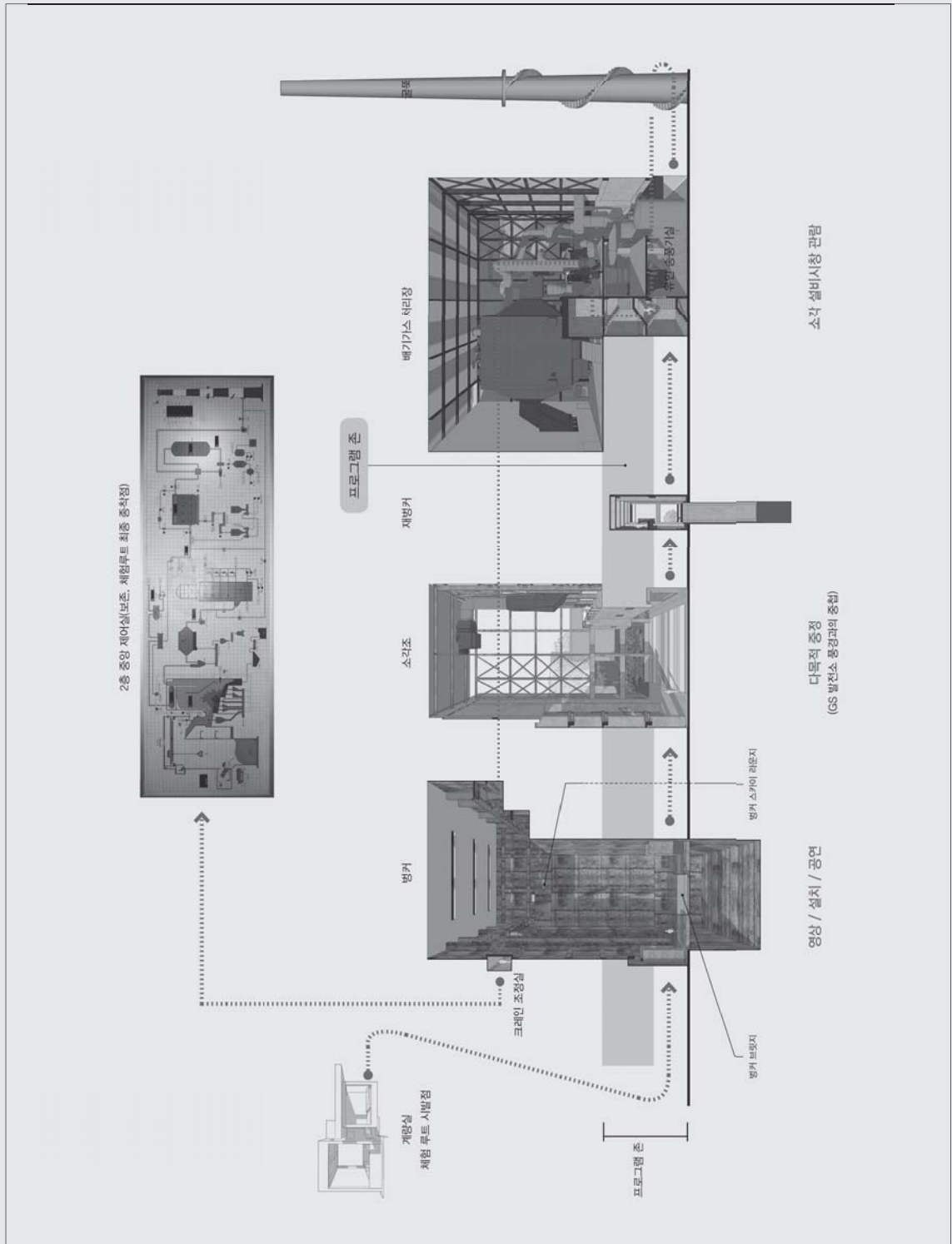


옛 삼정동 소각장

### 첫인상: 일종의 모험

현상설계의 현장설명회에 처음 갔을 때 나는, 이 건물이 소각장 설비들로 가득 차 있고 어두컴컴해서 도무지 공간 이해가 되지를 앓았다. 무엇보다 책정된 공사비가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적다고 생각했다. 요구되는 프로그램에 비해서 70억 원이라는 공사비는 터무니없이 적었고 현장설명회에 왔던 그 많은 건축가들 가운데 우리를 포함한 3개 업체를 빼고는 결국 작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것도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나로서는 대책 없이 번지점프를 하는 기분이었다. 아마 그건 소각장이 주는 으스스함과 거인 같은 설비의 매력 때문이었던 것 같다. 무언가 알 수 없는 거대한 기계가 의인화된 느낌이었다. 설계의 어려움과 공사비 문제에도 불구하고, 망하거나 흥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생각으로 공모에 참여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지원 마감기한이 다가오자 발주처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미 몇 차례 사업을 연기했던 상태였다고 한다. 나는 사업 선정 직후, 공사비 등 모든 난관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공포감을 느끼며 발주처와 자문 위원들 앞에서 착수보고를 했다. 하지만 발주처, MP와 자문단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이후 과정에서도 예산이 부족하지만 현명하게 잘 만들어 보자라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상호 협력적인 자세로 관계자들이 많이 도와주어 고생은 했지만 큰 짐을 덜어낸 기분으로 설계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한 발주처는 시설을 사용하고 운영할 운영사업자를 동시에 공모하여, 선정 운영사(사회적기업 노리단)와 설계 과정에서 공간 쓰임을 같이 논의할 수 있었다는 점도 무척 긍정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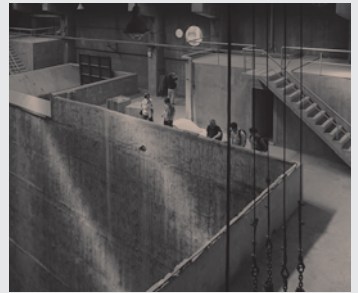
### 전환: 기계의 공간에서 사람의 공간으로

원래 소각장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기계를 위한 곳이며 그 거대한 시설을 가동하는 데도 몇 안 되는 사람들이 관리한다. 작가 박경근의 '철의 꿈'이라는 울산의 조선소를 배경으로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대부분의 인터스트리얼한 공장들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변에 기계의 굉음만 들리는 괴물스러운 광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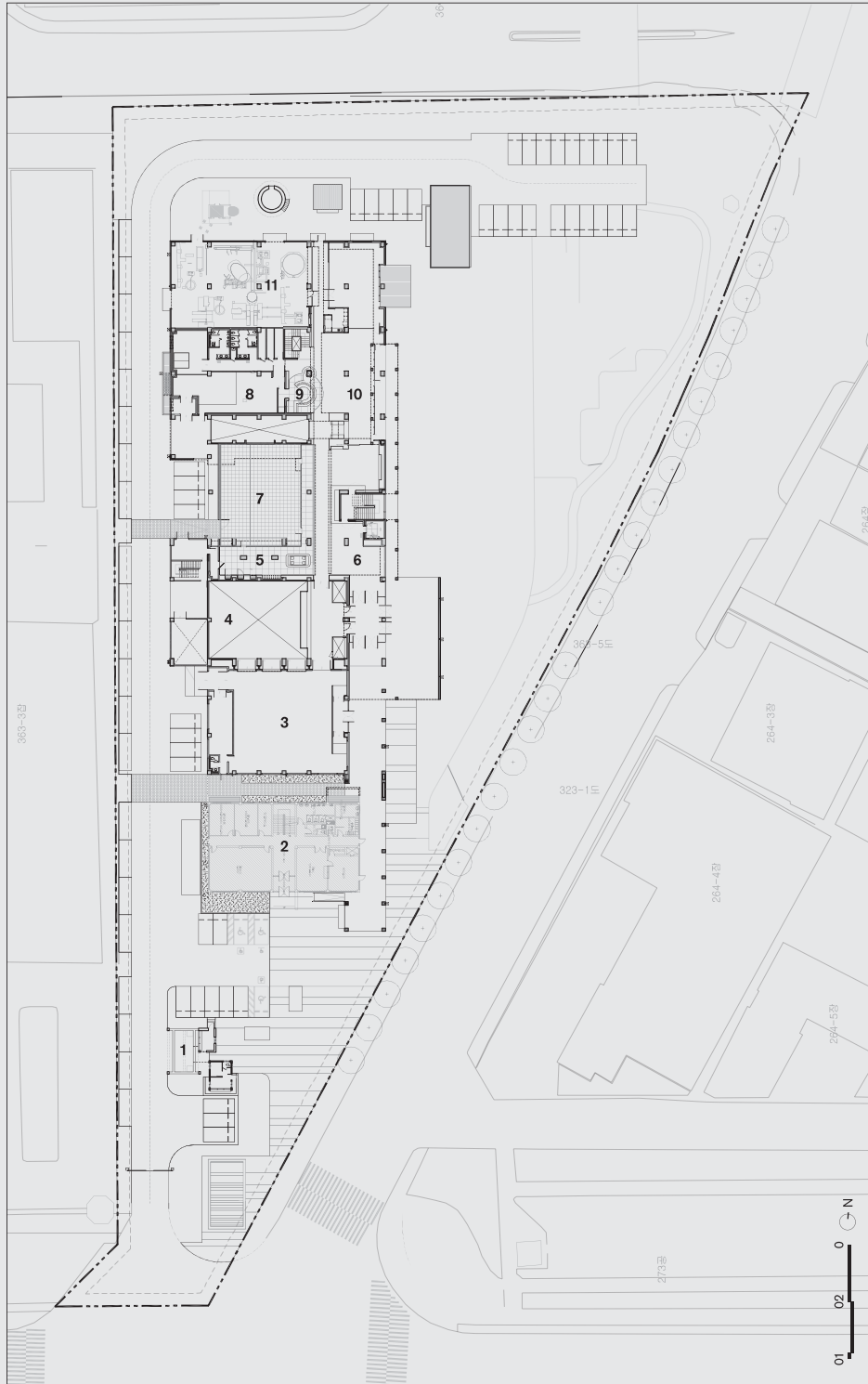
소각장은 워낙 복잡하고 미로 같아서 잘 파악할 수도 없었지만 새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소각 과정도 잘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소각 과정 자체는 무척 선형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해 보였다. 그래서 기존의 차량 동선들과는 상반되는 동측에 새로운 동선을 만들어 쓰레기 반입실에서부터 벙커, 소각조, 재벙커, 유인송풍실과 굴뚝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2층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선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거대한 소각장에 비해 생뚱맞게 앞에 있는 관리동 건물까지를 열주로 엮어주며 진입동선 레이어를 덧붙였다. 이 레이어는 대로변과 마주하며 소각장의 변신을 예고한다. 이 레이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도색을 한 것 말고는 예전의 소각장 모습 그대로이다.

사실 진입부는 오픈된 진입 광장으로 김아연 교수(조경가)가 설계했었고 동측의 주차장 공간을 포함한 녹지영역도 그러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방치되고 말았다. 관리동도 진입 시 보게 되는 얼굴로서 나름 적절하게 설계를 했었지만 심각한 구조보강비 문제로 차후 사업으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벙커 5층의 공간도 차후 사업으로 미루어졌다.

© 스페이스 제이연구소



상 에어 갤러리 위에 설치된 외부 데크  
중 벙커의 쓰레기를 태우던 소각조  
하 벙커 스카이라운지



## 평면도

- 1 계량실 및 경비실(보존)
- 2 기존관리동(폐쇄)
- 3 멀티미디어홀
- 4 쓰레기병커(보존)
- 5 라이브러리
- 6 EV.홀
- 7 중정
- 8 주방
- 9 BAR
- 10 컵처레스토랑
- 11 유인송풍실(보존)



기존의 소각로는 설계지침에서 철거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나는 이 부분을 다양한 옥외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정으로 설정하였다. 진입하다 보면 방풍실이 특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풍실 4면이 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의 쓰레기 반입실이었던 멀티미디어 홀(MMH)과 39m의 병커를 하나의 공간으로 행사를 진행할 때를 염두에 둔 것이다. 멀티미디어홀은 병커를 거쳐 로비로도 이어지지만 자체적인 출입구를 가져 야간에도 별도 운영될 수 있게 했다.

### 반전: 현실과 공간 통치의 이중성

설계를 하며 내내 '더 아더스(The Others)'라는 영화를 생각했다. 이 영화는 전쟁에 간 남편을 기다리는 한 여인과 아이 둘이 자꾸만 귀신을 보게 되는 무서운 이야기인데, 영화의 말미에 다름 아닌 이 가족이 귀신이었다는 반전이 그려진다. B39의 공간은 소각 과정을 경험하는 것과 함께 문화 및 교육 활동이 일어나는데, 투어 프로그램을 하며 기존 소각시설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일종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문화시설이 쓰레기 소각장과 동거하는 느낌으로 설계했다. 문화와 쓰레기의 관계는 참으로 상호 역설적이다. 쓰레기뿐만 아니라 음울한 모든 것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사회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그 쓰레기와 음울한 이면의 일상이 우리의 도시이고 문화이고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어느 누구도 쓰레기와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쓰레기라는 존재 자체가 부인될 수는 없다.

쓰레기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는 편안하고 부담 없이 더욱 많은 쓰레기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쓰레기는 우리가 쓰레기를 부인하고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어디선가는 계속 쌓여가고 있고, 또한 쓰레기를 소각하더라도 공기 중의 또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특성이 있다. 이 공간이 다소 초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것은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의 치부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드러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스튜디오 케이엑스



상 부천아트벙커 B39의 로비  
중 쓰레기를 저장하던 병커  
하 과거와 현재가 연결된 공간

# 강릉아트센터

## 공존과 화합의 울림

김민수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사

### 개요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동계올림픽특별구역, 운동장시설 결정지구(운동장-1)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공연장) 강릉아트센터(계획건축물)
대지면적	16,106.00m <sup>2</sup>
건축면적	기존 3,509.06m <sup>2</sup> / 증축 3,254.76m <sup>2</sup> 6,763.82m <sup>2</sup>
연면적	기존 6,469.50m <sup>2</sup> / 증축 8,166.42m <sup>2</sup> 14,635.92m <sup>2</sup>
용적률산정용면적	기존 5,888.01m <sup>2</sup> / 증축 6,838.27m <sup>2</sup> 12,726.28m <sup>2</sup>
건폐율	15.33%(법정 20%×완화율 1.5=30%)
용적률	26.32%(법정 100%×완화율 1.5=150%)
주요외장재	FRIT GLASS(로이복층유리), 화강석(포천석)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건물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대공연장(998석), 소공연장(385석)
최고높이	38.94m(가중평균지표면 EL+38.90 기준)
설계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담당	선우충훈, 이승한, 정수영, 구자현
설계기간	2015.10. ~ 2016.6.
시공기간	2016.1. ~ 2017.12.
시공	(주)태영건설 컨소시엄
공사비	476억 원
건축주	강릉시



강릉아트센터 전경

강릉문화예술관으로 쓰이던 한옥 형태의  
기와 건물 옆에 단아한 현대식 건축물을 계획하여  
옛것과 새것의 대비를 통한 ‘공존’을 담아냈다.  
증축된 공연장은 간결한 조형으로,  
낮에는 주변을 투영하고 밤에는 내부 공연장 모습을  
한껏 드러내며 빛을 발산하는 큐브로 변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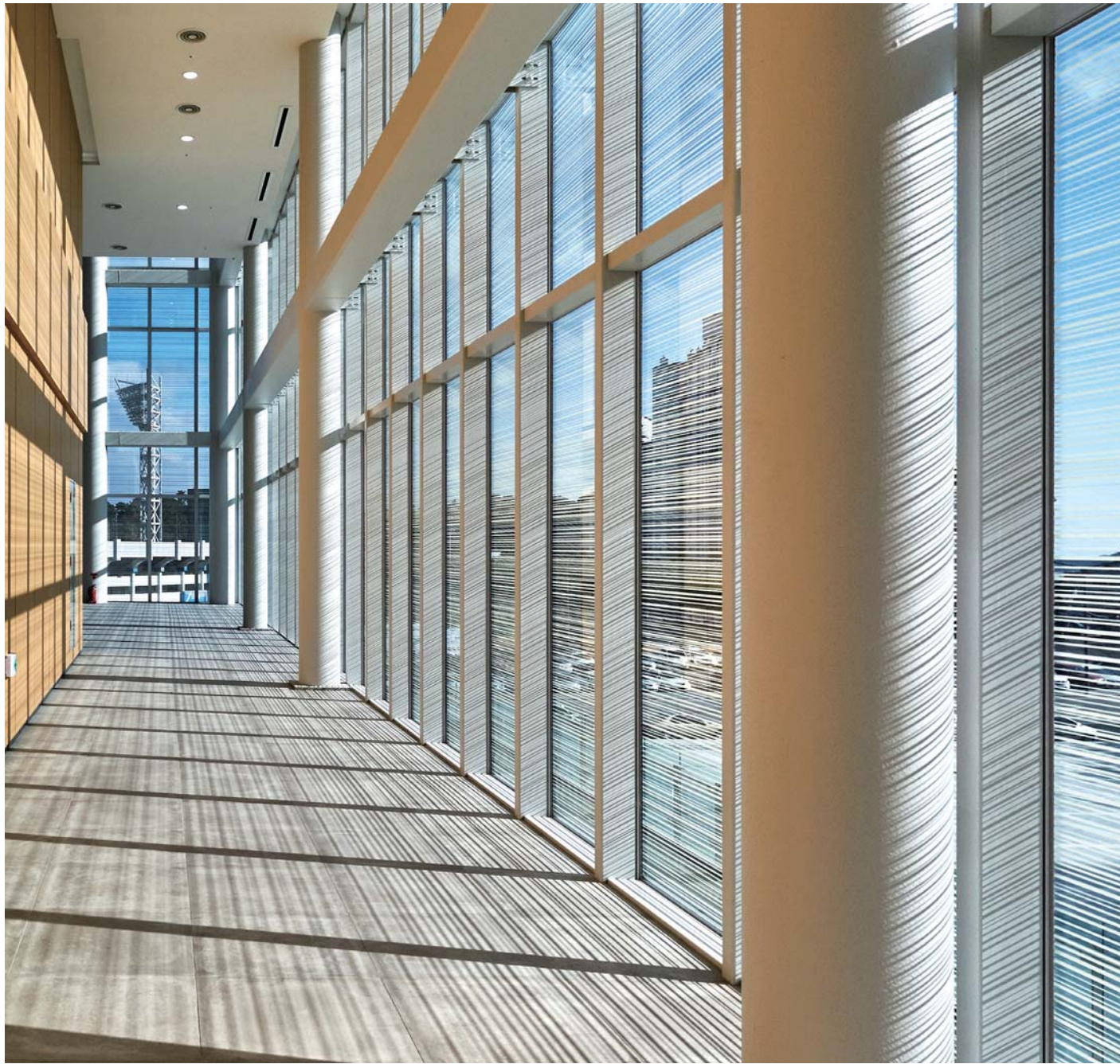
강릉문화예술관과 조화를 이루는 단순한 큐브 형태의 조형





GANGNEUNG  
ARTS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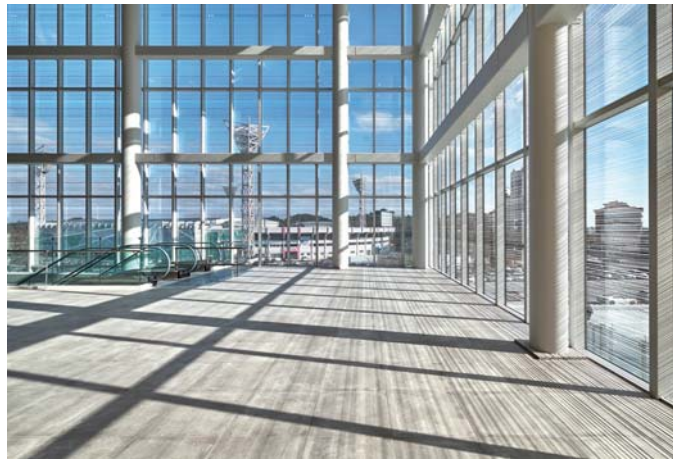


강릉 호수의 물결을 형상화한 Frit glass 패턴





©(주)기삼건축중합건축사사무소



©(주)기삼건축중합건축사사무소



©(주)기삼건축중합건축사사무소

상·하 강릉아트센터 실내공간



©(주)간성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간성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공연장





상 제1전시실  
하 · 우 가변형 무대장치

지역 시민들이 지속해서 활용하고  
 사랑방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는 기존의 노후화된 전시장을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수용하고 상시 개방되는 수준 높은  
 전시 환경 조성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주)건설컨설팅종합건축사사무소

경쟁하는 두 건축물과 넓은 외부 공간

올해.

너무나도 뜨거운 이 여름을 보내면서 지난 기억을 떠올려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의 시원한 열기를 잊지 않을 수 없다. 강원도 평창 및 강릉을 배경으로 펼쳐진 설원과 빙상의 뜨거운 열정, 남북이 하나 되던 삼지연 관현악단의 축하공연까지. 이 행사를 담아내기 위해 공간을 구성하고 고민한 설계 과정을 떠올리며 그 기억의 흔적을 되짚어 보려고 한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이 무더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소한 기대감을 품으면서.

강릉아트센터는 강원 영동권 최초의 복합문화 공간이자 문화올림픽 공연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프로젝트는 2015년 10월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제한된 설계 일정과 시공비 부담 등 고민이 필요한 숙제를 처음부터 안고 시작되었으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및 개막식 공연을 비롯하여 북한의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 등 다양한 올림픽 행사, 공연,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재창출되었다.

### 조형상: 옛것과 새것에 대한 고민

해당 사이트는 1992년에 건립된 강릉문화예술관과 실내체육관이 사용되고 있었다. 부지 확보를 위하여 실내체육관은 철거하고 예술관은 리모델링하여 전시관과 소공연장(약 400석)으로 사용이 결정되었다. 문화예술관의 외관은 R.C 구조로 된 전통건축 맞배지붕 형태를 띠고 있었다.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축물은 아니었지만 기존 건축물을 고려하여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을 해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하였다.

역사적 의미와 현대 요구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 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기존 전통 건축물에 시대적 요구가 수용된

새로운 건축물을 증축

둘째, 도시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지역성을 표현

셋째, 옛것과 새것의 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탄생시키는 상생

위에서 언급한 가치와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설계 과정에서 그리고 결과물에 이러한 가치를 녹여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주)건실건축·예원건축사무소



상 강릉아트센터 전경  
하 강릉문화예술관과 조화를 이루는  
단순한 큐빅 형태의 조형





상 강릉아트센터 실내 공간  
중 강릉 호수 물결을 형상화한 Frit glass 패턴  
하 강릉아트센터 배치

먼저 강릉문화예술관으로 쓰이던 한옥 형태의 기와 건물 옆에 단아한 현대식 건축물을 계획하여 옛것과 새것의 대비를 통한 ‘공존’을 담아냈다. 증축된 공연장은 간결한 조형으로, 낮에는 주변을 투영하고 밤에는 내부 공연장 모습을 한껏 드러내며 빛을 발산하는 큐브로 변모한다. 최대한 심플하게, 기존 한옥 형태와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탕이 되어서 함께 공존하며 그 기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였다. 그 실현 방안으로 단순한 큐빅 형태의 유리 글라스를 조형 콘셉트로 삼았다. 이 단순한 큐빅은 투영하면서 반사되는 물성을 띤 유리 매스로 기존 건물과의 조화와 내·외부 이용자의 시각적 교류를 추구하였다.

강릉 호수의 물결을 형상화한 Frit glass 패턴으로 리듬감 있는 입면 계획, 외부 조명을 최대한 배제하고 내부 실내조명을 활용하여 가득 찬 볼륨감을 만들어 내는 경관에 대한 고민까지. 이것은 단순한 매스가 가지고 있을 힘을 극대화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들을 모색한 것이었다.

### 공공성: 함께 공존하며 영유하기

다양한 배치 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증축 건물을 전면부에 배치하고 후면 광장을 구성하여 공연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집중력 있고 위요되는 후면 야외 공연장을 만들어 주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존 문화예술관 축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건물을 후면에 배치(setback)하여 넓은 외부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제한된 사이트에서 공연장과 더불어 항상 시민에게 외부 공간을 개방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기능을 살리는 데 집중하였다.

- 첫째, 다양한 음악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 조성
- 둘째, 지역 문화 활동이 유지될 수 있는 전시장 구성
- 셋째, 편의시설 상시 개방을 통한 공공성 확보 및 쉼터 제공

지역 시민들이 지속해서 활용하고 사랑방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는 기존의 노후화된 전시장을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수용하고 상시 개방되는 수준 높은 전시 환경 조성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 기능성: 공연장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다

강릉아트센터를 설계할 당시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을 뛰어넘어 가장 집중한 부분은 다름 아닌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공연장 설계였다. 그동안 각 지역에 건축된 문예회관 기능의 단순한 강당이 아니라 국제 수준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연들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공연장 구축에 모든 역량을 기울였다.

음향 시뮬레이션과 가시선 분석 등을 통하여 올림픽 IOC 행사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였다. 이는 뛰어난 음향 및 공연의 몰입감과 친밀감을 추구하는 수준 높은 공연 환경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첫째, 객석-무대 간 거리 단축으로 더욱 생동감 있는

공연 관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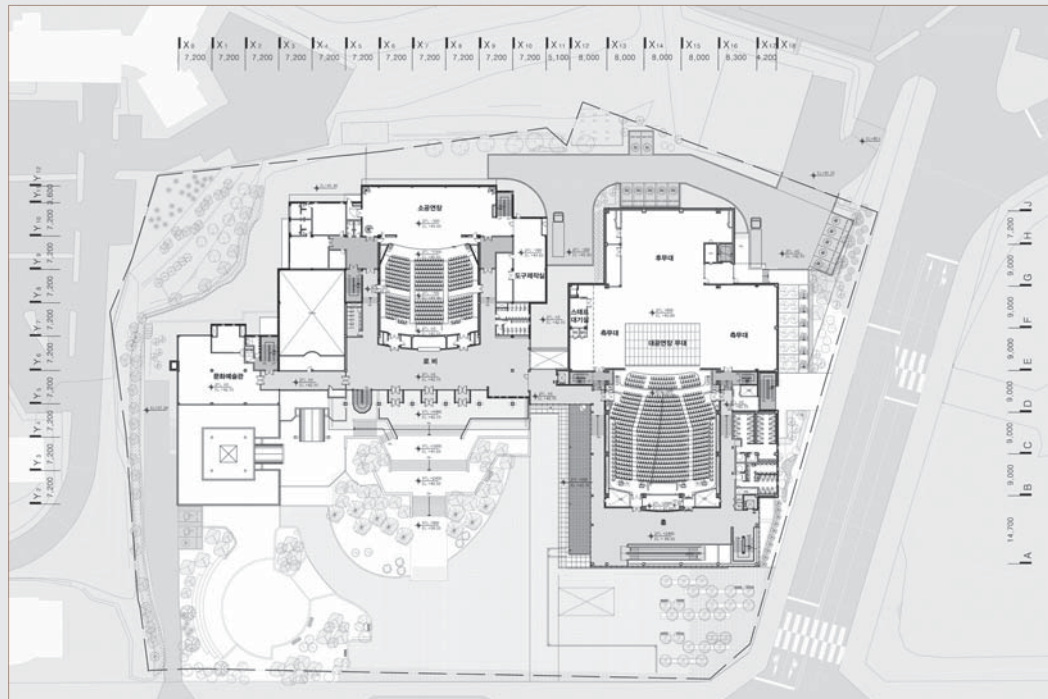
둘째, 발코니석 공간 계획을 통한 풍부한 음향 환경 제공

셋째, 다양한 공연 및 무대 활용을 고려한 가변음향배너 설치

©(주)건설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상 제1전시실  
하 대공연장



©(주)건설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지상 2층 평면도



가변형 무대장치

998석 규모의 대공연장은 2관 편성을 고려한 오케스트라석을 갖춘 다목적 공연장으로, 클래식·연극·뮤지컬 등 모든 장르의 공연이 가능하다. 3.5면 무대와 다양한 무대 연출을 위한 하부 트랩 무대까지 갖추고 있다. 시야 거리를 27m로 좁혀 사실적 극 체험을 통한 몰입을 극대화했으며, 전 객석에서 출연자의 발끝까지 감상이 가능하도록 좌석의 시야각을 조정하였다. 또한 가변 음향 배너 시스템이 설치되어 공연 장르에 따라 최적의 잔향 시간을 구현할 수 있다. 무대 기계장치 역시 정밀도가 뛰어난 AXIS 시스템을 적용해 공연 품질을 높였다.

강릉아트센터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형과 외부 공간에 대한 건축 공간 구성의 바탕 위에 음향과 무대 구성을 위한 시스템이 결합된 복합 건축물이다.

당초 리모델링과 증축이라는 공간 제약으로 인해 대공연장 규모를 정하는 데 고민이 많았지만 관객석 숫자보다 최상의 공연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강릉시의 결정에 따라 고품질 무대 공간 구성에 더 많은 노력을 할애하였다.

강릉아트센터가 처음 문을 열던 날 공연 중간에 마이크를 끄고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던 폴 포츠(Paul Potts)의 모습이 생생하다. 그 생생한 울림 속에서 관객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보내던 모습처럼 영동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여 언제나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강릉아트센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 auri 소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146

포럼 및 세미나  
151

연구소 단신  
154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신규 과제를 소개하고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연구과제 소개

auri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수탁 과제	2018년 주거재생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및 관리 등을 위한 용역	여혜진
	범죄예방 컨설팅 사업	손동필
	경상북도(상주, 군위, 청도) 한옥 전수조사 및 DB구축 연구용역	이민경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지침 마련 연구	오성훈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모델 개발 연구	유광흠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연구	조상규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엄철호

### ❶ 2018년 주거재생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및 관리 등을 위한 용역

이 연구용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 따라 법정 기구로 지정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재생지원기구에서 주거재생형으로 분류된 주거지지원형과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에 대한 사업 관리·지원 업무와 정책 기획·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7년 68곳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 주거지지원형과 우리동네살리기는 33곳이 선정되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7년도 선정된 주거재생사업 중 공기업 제안형을 제외한 주거지지원형 15곳, 우리동네살리기 15곳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2018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99곳 가운데 주거지지원형과 우리동네살리기는 45곳이며, 이 중 공기업제안형을 제외한 39곳에 대한 총괄 관리와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도시재생지원기구가 수행하는 법정 업무는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사업 지원 및 관리 업무이다. 이는 크게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검증 업무,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변경 컨설팅 등 계획수립 지원 업무와 공정관리, 사업 지원 컨설팅, 연차별 실적평가 검증 등 사업 지원 업무로 구성된다. 이러한 업무는 각 유형별 지역 맞춤형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한 사업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과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및 사업관리카드를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현황 관리로 수행된다. 둘째로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및 공모·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운영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국가기본방침 및 「도시재생법」에 대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정 방안을 검토하며, 전략 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선, 주거지지원형과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요구되는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한 지자체가 소규모 주거지정비사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탄

탄하게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셋째, 주거재생형 도시재생뉴딜 활성화 시책 발굴 및 지원 업무이다. 이는 사업 추진 여건의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를 검토하고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부 등 부처 협업사업이 활성화되어 장소 단위 지원 사업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네트워킹 및 홍보 지원 업무가 있다. 이는 매년 개최되는 ‘도시재생 한마당’을 기획하면서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참여자 간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이다. 이 외에도 주거재생 관련 세미나를 지원하거나, 광역지자체와 전담조직의 네트워킹과 정보 확산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도시재생지원기구는 법정 업무 수행과 더불어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과 애로사항을 살피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이 자생적·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주민·지역 전문가의 역량을 골고루 갖추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혜진

## ② 범죄예방 컨설팅 사업

연이어 발생하는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의 각종 범죄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범죄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고, 「건축법」 제53조의 2(건축물의 범죄예방)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해외에서는 발생 범죄의 사후 처벌에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범죄 대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영국, 미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제도적 기반 및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환경과 다른 해외 사례의 무분별한 도입, ‘염리동 소금길’로 대표되는 국내 성공 사례의 단순 반복 및 적용, 물

리적 환경 개선에의 치중,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계획 수립, 유지관리 미흡으로 인한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 과제는 범죄예방환경연구를 바탕으로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행정안전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관련 사업 실시 지역에 대해 범죄예방 계획 수립 및 운영을 지원한다. 지역 현황 분석, 범죄영향평가, 중·장기 범죄예방 계획 수립, 기초설계안 제공, 사업결과 및 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내 환경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추진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기반 구축 및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지속적·거시적 관점에서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손동필

## ③ 경상북도(상주, 군위, 청도) 한옥 전수조사 및 DB구축 연구용역

2015년 6월 국가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한옥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한옥의 수량, 보전 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내 분포하고 있는 한옥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관련 정책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옥 DB의 구축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4년도 한옥 전수조사 지역 선정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상북도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23개 시·군에 대한 ‘경상북도 한옥 전수조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14년 경상북도 고령군, 영주시를 대상으로 한옥 전수조사를 시작하여 2018년 상주시, 군위군, 청도군을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전역에 대한 한옥 전수조사와 DB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옥 전수조사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사전조사로 건축물대장 정보를 활용하여 목조건축물을 추출하고 항공사진 및 로드뷰 판독을 통해 한옥 일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잠정한옥)을 추출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현장기본조사로서 잠정한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한옥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구조, 외관, 재료 등의 정보를 기록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건축 시기별 대표 한옥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현장심층조사를 통해 지역의 한옥건축 특성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2018년도에는 상주시, 군위군, 청도군에 분포하고 있는 목조건축물 약 2만 6,666채를 대상으로 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2018년도는 경상북도 한옥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조사 대상지에 대한 한옥자산 DB 구축·분석과 함께 경상북도 전역에 대한 한옥현황 및 한옥통계를 생산하고, 지속적인 한옥자산 DB 유지관리를 위한 한옥자산 운영관리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완료된 후 경상북도는 8개 도(道) 지역에서 한옥자산 DB가 구축되는 최초의 지역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또한 이 연구의 성과물인 한옥자산 DB를 토대로 경상북도 한옥 국가승인 통계 등록을 추진하는 등 공신력 있는 한옥 정보를 구축·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한옥자산의 분포 특성 및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한 정책 수립 등 근거 기반의 한옥 진흥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경

#### 4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지침 마련 연구

보행은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으로서 신체와 지각을 통해 장소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고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다층적, 복합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보행은 비효율적이고 부차적인 수단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경향이 누적되면서 도시 전체적으로 보행보다 차량 이용이 편해지게 된다. 보행자의 입지가 좁아질수록 차량 교통 수요가 늘어나고 교통 혼잡과 비효율이 가중되는 역설은 자동차 중심 도시가 도시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를 노출하며 보행중심 도시로의 전환이 절실한 과제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 이후 삶의 질에 대한 의식과 함께 걷고 싶은 도시의 가치와 필요가 대두되고,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관련된 지침들은 여전히 차량 이동의 효율성을 전제로, 보행친화요소를 파편적으로 다루는 데 그쳐 걷고 싶은 도시를 위한 총체적 접근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자동차 중심의 기존 계획지침을 보행중심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지침으로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행친화도시의 이론적 배경과 계획요소 및 선진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가능한 보행친화 도시계획의 주요 요건을 제시하며,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걷고싶은도시 계획수립지침(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도시환경요소 간의 정합성과 공간 유형별 계획 프로세스를 고려한 지침 개선을 통해 다양한 위계·방법의 도시계획 및 설계에 보행친화도시의 계획 원칙이 신속히 적용될 것을 기대한다.

오성훈

## 5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모델 개발 연구

역사문화자원은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며 공생하고 있으나, 산업화 및 자본주의 체계에서 역사문화자원이 갖는 의미와 가치가 인정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지정문화재 제도뿐만 아니라 근현대 시기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호체계로서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 중이나, ‘2017년 등록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 등록문화재의 절반 정도가 주의 관찰 대상, 모니터링,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어 관리체계의 취약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더불어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역사문화자원의 개별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것과 함께,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 가치의 증진과 더불어 집합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역사문화자원의 개별적 가치와 함께 집합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계속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세대에 계 유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정의하고, 역사문화자원의 입체적 보존·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실행체계 구축,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우선 역사문화자원과 관련한 이론적 고찰과 국내외 역사문화자원 보존·활용사례 분석을 통해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개념을 정립하고 시대적 맥락에서의 가치를 발굴하고자 한다. 그리고 시범사업 추진 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쟁점과 현안을 도출하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지속적인 조성 확산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진 체계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의 기본 방향 및 원칙, 사업 유형 도출, 세부 사업별 추진지침 등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정책화 과정을 거쳐,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실질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광흠

## 6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연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정부는 건물 분야 핵심 정책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을 제정해 정책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14년에는 「녹색건축법」 제6조에 의거해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5년마다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8년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기간이 종료해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 향상과 녹색건축물 조성 기반 구축에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는 반면, 신축 건축물에 온실가스 감축량이 편향되어 있다는 점과 녹색건축 관련 산업의 육성 전략 마련에 미흡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국가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과 함께 녹색건축의 효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개방형 계획 수립 방식을 채택하여, 학계·협회·산업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워킹그룹은 신축, 기축, 설계·시공, 자재·설비, 기술개발, 금융지원 등의 분과로 구분되며, 분과별 실효성 있는 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국민 대국민 정책제안 공모전을 추진하여 기존 정책 개선과 신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우수 제안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건축 정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등의 글로벌 트렌드와 연계한 녹색건축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여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상규

## 7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건축은 광고, 미술, 음악, 영화, 출판, 소프트웨어 등과 함께 창조적인 인력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창조산업이다. 기획, 설계, 시공, CM, 유지관리 등 건축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건축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건축사업의 기획 및 설계 단계의 기술과 전문가이며, 이는 곧 건축서비스산업의 영역이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 관련 전문 지식과 기술 제공 서비스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집약적이고 인적 자원이 중요한 지식기반산업이다. 이처럼 건축서비스산업은 대표적인 창조산업이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타 산업이나 해외 선진국에 비해 산업경쟁력은 취약한 상황이다. 아울러 인구·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공간 수요의 변화와 저성장 경제 상황의 지속,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으로 건축서비스산업 구조 또한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다. 법 시행 이후 대표적인 건축사업인 공공건축에 대한 절차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이 이루어졌으나,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대한 종합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5조에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기반 구축, 연구·조사·기술개발, 전문 인력 양성, 정보체계 구축, 홍보 및 국제교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최상위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정책 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분석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진 전략과 실천 과제를 도출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건설이 성장을 주도하는 시대에서 건축이 성장을 지원하는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건축서비스산업이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도출하고, 나아가 건축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창조산업이자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열철호

## 2018 해외전문가 초청강연회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7월 11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회의실에서 '2018 해외전문가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은 텍사스A&M대학교 Health Systems & Design Center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차남 교수가 맡아주었으며, 'Healthy and Walkable Cities: Current Research and Policy Efforts from the US'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Healthy Community', 'Active Living Community'의 개념과 함께, 심각한 비만 문제와 대중교통·보행·자전거 이용이 감소하는 문제 등으로 'Walkable Community' 조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건강한 커뮤니티 증진을 위해 미국건축가협회(AIA)와 미국 심리학회(APA), 미국공중보건학회(APHA) 등 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건강과 환경의 상관관계와 설계 방안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연구의 범위에 따른 조사 방법을 설명하고, 실제 진행된 프로젝트 사례로 걷기 좋은 커뮤니티를 설계하고 이주 주민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이 증가했는지 여부를 15년간 측정한 'Active Living Austin', 고령친화적인 커뮤니티 설계를 시도한 'AFC 8 Domains'를 소개하였다.

이후 강연 참여자들이 프로젝트 규모와 실제 수행 방법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건강하고 걷기 좋은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과제와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고영호

2018  
제3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7월 16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회의실에서 '2018 제3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데이터와 더 좋은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강준범 교수(뉴욕주립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도시계획에 있어 세밀한 수준의 도시 데이터가 보다 안전하고 걷고 싶은 도시를 설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도시설계와 정책 시행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공간데이터의 부족, 행태데이터의 부족, 방법론의 부재 등이 도시 계획 시 도시데이터의 활용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어 시애틀·버팔로·뉴욕과 같은 미국 도시에서 도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진행한 연구 사례, 행태데이터 등 도시데이터를 축척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소개되었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도시데이터 수집의 어려움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용데이터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참석자들은 현대 도시문제 해결에 있어 도시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볼 수 있었다.

윤주선



## 2018 찾아가는 공공건축 교육 실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9월 3일부터 18일까지 5회에 걸쳐 '2018 찾아가는 공공건축 교육'을 실시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 2항 6호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 관계자의 공공건축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획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은 2014년부터 시행하여 주로 집체교육으로 연 1~2회 이루어져 왔는데, 시기와 장소 여건상 많은 참가 희망자에 비해 수용 인원이 한정되어 있었다. 올해는 이러한 교육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건축도시 분야 전문가 10인을 섭외하여 건축문화·도시재생·공공디자인 등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신청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7월 말부터 공공기관의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9월부터 20개 기관, 총 1,7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9월 말까지 총 5개 기관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공공건축과 주민 참여, 커뮤니티 디자인 등을 주제로 대전광역시청 등 15개 신청 기관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염철호

### 2018 찾아가는 공공건축 교육 주제 및 발제자

주제	발제자	
사회가 만드는 건축 우리의 공공건축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김광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도시와 지역의 풍경과 역사를 가꾸는 총체적 사고와 전략	김영섭	김영섭 건축문화건축사사무소 대표,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이야기로 집을 짓다 공주시 루치아의 뜰과 옛 골목 되살리기	노은주	가온건축 대표
건축의 시대 도시, 건축 현황과 정책과제	박인석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건축사연 마을과 사람들	윤승현	인터커드 건축사사무소 대표
일상이 만드는 작은 디자인 동네를 살리는 커뮤니티 디자인	이영범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일상의 공공성 참여 프로젝트 중심으로	정이삭	동양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조교수, 에이코랩 대표
사회적 관계를 확산시키는 마을공동체의 설계 단독주택(단지), 공동주택의 설계에 관하여	조남호	솔토지빈 건축사사무소 대표
주민이 함께 만드는 공공건축 구산동도서관마을을 중심으로	최재원	플로건축사사무소 대표
무지개떡 건축 도시 건축의 보편적 유형	황두진	황두진 건축사사무소 대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협의회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9월 5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중회의실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향후 국가건축정책의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를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진행되었다.

정책협의회에는 박소현 소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과 승효상 위원장(국가건축정책위원회)을 비롯하여 각 기관의 주요 인원이 참석하여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양 기관은 공공건축 혁신, 건축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건축자산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과 연구·사업 수행 등 국가건축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10년간 협력해 이뤄온 성과를 공유하였다.

무엇보다 인구 구조 등 급격한 사회 변화의 양상을 반영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국가건축정책 어젠다를 공동으로 제시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연구와 대국민 행사 개최 등에 상호 적극 협조하며, 기관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고영호



## 건축도시 공간연구소, 2018 TWN 콘퍼런스 참석 및 차년도 개최기관으로 확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소현 소장과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염철호 연구위원, 고영호 부연구위원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 '2018 TWN 콘퍼런스'에 참석하였다.

TWN(The Workplace Network)은 전 세계 20여 개 국가의 공공건축 관련 기관이 소속된 정책 네트워크로 소속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소속 기관이 공공자산과 공공건축물 관리를 위해 펼치고 있는 정책적 노력과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TWN의 정식 멤버로서(2016~) 이번 콘퍼런스에 참석하였으며, '한국의 국가청사 건립체계(The Status & Issues of Government Building Development System in Korea)'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발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장인 염철호 연구위원과 고영호 부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우리나라의 국가청사 조성 프로세스와 관련 주제, 미국·일본 등 다른 국가의 건립체계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의 특징을 소개하였다. 또한 한국 국가청사 건립과 관련된 현안과 함께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폐회식에서는 2019년 TWN 콘퍼런스 개최지로 한국이, 개최기관으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선정되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앞으로도 공공건축을 비롯한 건축·도시 분야 관련 국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외 기관 간 성과와 지식 교류의 중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고영호



news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보고서 안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연구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auri.re.kr](http://www.auri.re.kr))에서 보고서를 검색하실 수 있으며, 발간물 구입에 관해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자료실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실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

### 2017년 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2017-1  
공동체토지신탁 도입 및 적용 방안  
20,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2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축·도시 미래정책  
개발체계 연구  
20,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3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건축행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29,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4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  
평가 기준 연구  
20,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5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 기존 지역·지구·구역과의 관계 정립 및  
개선을 중심으로 -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6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축물 조정  
제도 개선방향 연구  
28,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7  
고령사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8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자립형 도시재생  
방안 연구  
24,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9  
택티컬 어바니즘 기반의 가로활성화  
방안 연구  
21,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10  
1950년대 이후 한국 주요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의 사회적 담론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11  
신 기후체제 대비 건축물 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진단 연구  
17,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12  
차세대 교통기술 발전에 따른 건축 및  
도시공간의 대응방안 연구  
24,000원

정책연구보고서-2017-1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  
11,000원

정책연구보고서-2017-2  
읍면동 행정청사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연구  
9,000원

정책연구보고서-2017-3  
행정중심복합도시 가로벽 디자인  
지침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2017-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13,000원

정책연구보고서-2017-5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등에 관한  
법령 정비 방안  
13,000원

정책연구보고서-2017-6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개선방안 연구  
10,000원

정책연구보고서-2017-7  
빈집정비계획 수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15,000원

정책연구보고서-2017-8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개정방향 연구  
12,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1  
공공업무시설의 계획 현황과 개선  
방향 연구  
16,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2  
공공업무시설의 건축 규정 제도사 연구  
15,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3  
포용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건축의  
현황과 과제 -장애인복지시설 편-  
11,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4  
2017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성과보고서  
17,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5  
대도시 노후 상업지역의  
법치에방한경설계  
19,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6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의  
법치에방한경설계  
19,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7  
한옥 수선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지붕수선을 중심으로-  
15,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8  
2016 보행자우선도로 현황과 평가  
50,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9  
2016 서울시 도로다이어트  
현황과 평가  
48,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10  
건축서비스산업의 동향 및 실태  
17,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11  
건축기획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개선 방안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12  
알기 쉬운 건축설계 저작권  
9,000원

### 2016년 연구보고서

AURI-기본-2016-1  
건축물 범죄 안전 디자인 성능에 관한  
연구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범죄안전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21,000원

AURI-기본-2016-2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공공·민간분야 활용방안 연구  
13,000원

AURI-기본-2016-3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방향 연구  
22,000원

AURI-기본-2016-4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 복합화 실행  
모델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 방향  
20,000원

AURI-기본-2016-5  
쇠퇴지역 공·폐가 재생 및 활용  
정책방안 연구 17,000원

AURI-기본-2016-6  
유희공간의 전략적 활용 체계 구축 방안  
17,000원

AURI-기본-2016-7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23,000원

AURI-기본-2016-8  
의료시설의 원내감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건축적 지원방안 연구  
-외래진료부를 중심으로  
19,000원

AURI-기본-2016-9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19,000원

AURI-기본-2016-1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대비  
건축·도시분야 대응방향 연구  
24,000원

AURI-기본-2016-11  
도시건축박물관 건축기록물  
수집·관리방안 연구  
9,000원

AURI-기본-2016-12  
국공립어린이집의 디자인가이드라인  
설정 연구  
24,000원

AURI-기본-2016-13  
경관협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20,000원

AURI-기본-2016-14  
역사문화도시 경관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고도(古都)  
보존육성지구를 중심으로  
22,000원

AURI-기본-2016-15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  
기금지원 프로그램 개발  
17,000원

AURI-기본-2016-16  
시지각특성을 기반으로 한 경관계획  
개선방안 연구 -건축물 등의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22,000원

AURI-기본-2016-17  
영상정보를 활용한 가로환경  
평가 체계 연구 -360°동영상과  
VR 기기의 활용을 중심으로  
25,000원

AURI-정책-2016-1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연구 -건축규제 및 기부채납  
기준을 중심으로  
11,000원

AURI-정책-2016-2  
기업형임대주택 주거서비스 활성화  
방안 -주거서비스 예비인증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및 운영방안  
11,000원

AURI-정책-2016-3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건축법 및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9,000원

AURI-정책-2016-4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연구  
8,000원

AURI-정책-2016-5  
지구단위계획 변경제도 합리화 방안  
-경미한 사항 변경을 중심으로  
11,000원

AURI-정책-2016-6  
도시재생사업 청년층 참여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9,000원

AURI-정책-2016-7  
건축협정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령  
정비방안 연구  
9,000원

AURI-정책-2016-8  
건축물 사용설명서 도입에 관한 정책  
방향 연구  
9,000원

AURI-정책-2016-9  
소규모 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심  
집짓기 정책 방안  
10,000원

AURI-정책-2016-10  
행정중심복합도시 보행환경 진단 및  
향후 조성방향 제안  
13,000원

AURI-협동-2016-1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 연구 (2)  
19,000원

AURI-한옥-2016-1  
전라남도 한옥보존지법마을의 변화  
진단을 통한 농촌지역 한옥마을  
보존방안 연구  
16,000원

AURI-보행-2016-1  
보행정책 성과 평가체계 개발 연구  
25,000원

AURI-보행-2016-2  
가로단위 보행환경 평가체계 개발 연구  
26,000원

AURI-보행-2016-3  
보행자를 위한 법적 개선방향 연구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11,000원

AURI-건축서비스-2016-1  
건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공공건축  
설계 대가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13,000원

AURI-건축서비스-2016-2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건축물  
공사감리 대가기준 개선 연구  
11,000원

AURI-범죄예방-2016-1  
도농복합형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적용  
20,000원

AURI-마을재생-2016-1  
도시재생사업 기반 구축 단계의  
경험과 과제  
9,000원

AURI-공공건축-2016-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추진 성과  
및 향후 개선방향  
13,000원

AURI-공공건축-2016-2  
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 연구  
-현행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검토를 중심으로  
15,000원

## 2015년 연구보고서

AURI-기본-2015-1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개선 연구  
-공용재산취득사업을 중심으로  
19,000원

AURI-기본-2015-2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건축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 연구  
17,000원

AURI-기본-2015-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학교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연구  
32,000원

AURI-기본-2015-4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범죄위험평가 도입 방안 연구  
24,000원

AURI-기본-2015-5  
공공건축물 활용성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연구  
23,000원

AURI-기본-2015-6  
사람 중심 가로 조성을 위한  
도시설계 연구  
31,000원

AURI-기본-2015-7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27,000원

AURI-기본-2015-8  
지역의 건축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18,000원

AURI-기본-2015-9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건축분야 기초연구  
18,000원

AURI-기본-2015-10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전략 연구  
28,000원

AURI-기본-2015-11  
건축사의 호칭과 업무의 제도적  
형성에 관한 연구  
17,000원

AURI-정책-2015-1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을 위한  
주요 쟁점 분석  
12,000원

AURI-정책-2015-2  
도시재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9,000원

AURI-정책-2015-3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10,000원

AURI-정책-2015-4  
2014년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17,000원

AURI-정책-2015-5  
활용 가능한 국유건축물 유형 정리 및  
현황 조사 연구  
13,000원

AURI-정책-2015-6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향  
11,000원

AURI-정책-2015-7  
건축물 옥상공간의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9,000원

AURI-정책-2015-8  
국가 교육훈련시설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황조사 연구  
10,000원

AURI-협동-2015-1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 연구 (1)  
26,000원

AURI-한옥-2015-1  
한옥 부분수선에 관한 거주자 면담 및  
점검 사례 연구  
13,000원

AURI-한옥-2015-2  
목재수종 및 제재방법에 따른  
단가변화 연구  
11,000원

AURI-한옥-2015-3  
한옥 공공건축물 발주절차 개선방안  
10,000원

AURI-보행-2015-1  
2014년 보행자우선도로 현황과 평가  
27,000원

AURI-건축서비스-2015-1  
설계의도 구현 표준업무 및  
대가기준 마련 연구  
13,000원

AURI-건축서비스-2015-2  
리모델링 설계 표준업무 설정 및  
대가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12,000원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신간 안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건축·도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단행본 소개 및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www.auri.re.kr](http://www.auri.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비매품이 아닌 단행본은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홍보팀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mailto:information@auri.re.kr)



독립 음악인의 창작 공간  
- 뮤지스팩스  
임유경, 김지현, 김수빈  
비매품



숫자로 보는 공공건축 2016  
임유경, 이종민, 이경재  
비매품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개선방안  
오성훈, 김영지  
9,000원



도농복합지역의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손동필, 유광홍, 조영진,  
현태환, 박유나  
비매품



BOOTUP, 건축도시  
STARTUP  
윤주선, 김주원, 서수정  
비매품



동네청소년과 함께하는  
마을재생  
박성남, 김민경  
비매품



빈집을 활용한 마을재생  
박성남, 변은주, 이은석,  
여혜진, 성은영  
비매품



한옥 시공 핸드북(4) -  
우물마루  
이규철, 김종범  
비매품



우리 함께 만드는 공공도서관  
-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임유경, 김수빈, 김지현  
비매품



Hanok,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비매품



건축서비스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비매품



한옥 시공 핸드북(3)  
신치후, 고영호, 김꽃송이  
비매품



합리적인 건축심의 운영을  
위한 8대 과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  
비매품



한옥마을 이야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비매품



지역 어르신과 함께 하는  
마을재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  
비매품



보내는 사람

성함

주소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8.1.1 ~ 2018.12.31
세종우체국승인 제40061호

받는 사람

( a u r i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홍보팀  
세종특별자치시 집제로 194, 7층

3	0	1	0	3
---	---	---	---	---

이번 호 <건축과 도시공간> 코너에 대한 생각,  
필자와 편집진에게 바라는 점을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이번 호 <건축과 도시공간> 코너에 대한 의견

(예) 좋았던 코너와 이유, 해당 코너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주제 등

---

---

---

---

---

---

---

■ <건축과 도시공간>에 바라는 점 또는 제안하는 점

---

---

---

---

---

---

---